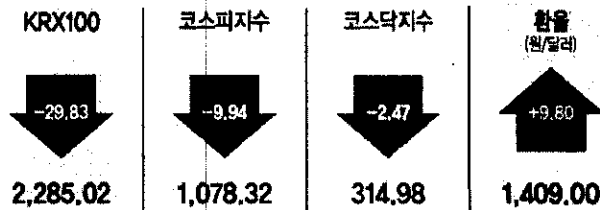


NEWS SUMMARY

2008.11.18

자산운용협회 홍보실



• 유가증권

투자자별 매매동향

단위: 억원

구분	매도액	매수액	순매수액
기관	9878.3	9773.1	-105.2
외국인	9414.0	8372.3	-1041.7
개인	28291.7	29514.4	1222.8
기타	824.5	735.6	-88.9

• 코스닥

투자자별 매매동향

단위: 억원

구분	매도액	매수액	순매수액
기관	134.6	238.2	103.6
외국인	616.2	289.7	-326.6
개인	7432.8	7606.3	173.6
기타	64.6	114.1	49.5

• KOSPI 200 선물·옵션

단위: 포인트

종목	종가	전일대비	거래량	미결제약정
12월물	140.35	-2.85	408,930	112,345
콜142.5	9.90	-1.85	10,182	6,589
풋142.5	12.40	1.40	40,683	14,873

• 금리

종류	당일시세(연%)	전일대비
금	3.91	-0.06
CD(91일)	5.52	-0.04
회사채(AA-3년)	8.70	-0.13
국고채(5년)	5.40	-0.20

• 환율

단위: 원, 현할거래, 외환은행

통화	고개 팔 때	고개 살 때
미국 달러	1379.43	1428.57
일본 100엔	1420.05	1470.63
유럽 유로	1737.97	1808.53
중국 위안	195.72	220.44

펀드수수료 더 싸진다

신한·우리銀 판매보수 20%↓...블랙록 환매수수료내려

신한·우리은행 등 판매사와 SH운용 등 운용사들의 자발적인 수수료 인하가 줄을 잇고 있다.

시장에서는 “요지부동하던 수수료·보수가 낮아지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당장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신한은행은 신한BNP파리바·SH자산운용의 Tops 프리미엄 외 6개 펀드의 판매보수를 20%가량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SH자산운용은 Tops프리미엄 등 4개 펀드의 운용보수도 10% 내린다. 신한은행의 판매보수까지 계산하면 30%의 보수 인하가 이뤄지는 셈.

우리은행도 앞으로 나오는 신규 펀드에 대해 판매보수를 20% 인하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이와 함께 기존 펀드 보수 인하와 장기투자자에게 비용을 줄인 국내 주식형 펀드(봉쥬르코리아와 탐스밸류)를 다음달 초 출시할 계획이다.

우선 투자기간에 따라 후취수수료를 낮춰주는 상품을 출시한다.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 수수료가 붙지만 1년 경과·3년 미만(0.7%), 3년 경과·5년 미만(0.5%), 5년 이상(면제)일 때는 요금이 달라진다.

기존 C클래스(선취수수료 없이 매년 판매보수를 낸)에서도 2년째부터 4년째까지 매년 판매보수를 10%씩 낮춰주는 상품을 내놓는다. 우리은행도 비슷한 펀드를 내년부

국내 주식형 펀드 클래스별 수수료와 보수 체계

(단위=%)

클래스	수수료	보수
A	선취판매(투자금 기준, 0.87)	판매(0.71)+운용(0.61)+수익(0.04)+사무관리(0.01)
B*	후취판매(환매금액 기준)	판매(0.71)+운용(0.61)+수익(0.04)+사무관리(0.01)
C	없음	판매(1.43)+운용(0.61)+수익(0.04)+사무관리(0.01)

*후취판매 상품은 거의 없음, 괄호 안은 국내 주식형 평균, 자료=제로인

수수료·보수 인하

업체	내용
신한은행	SH운용 4개 펀드 운용보수 인하(10%가량), SH운용, BNP파리바운용 7개 펀드 판매보수 인하(20%) 가입기간 따라 후취수수료 낮추는 펀드(5년 이상일 경우 면제) 출시 예정, C클래스 판매보수를 가입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펀드 출시 예정
우리은행	신규 출시 펀드 판매보수 20% 인하 내년부터 투자기간별 판매보수 단계적 인하 상품 출시
다른 은행	판매보수와 수수료 인하 검토
운용사	운용수수료 인하 검토와 환매수수료 조정

터 판매한다.

블랙록자산운용은 C클래스 상품을 이익금 70%(90일 미만 환매)에 대해 부과하던 환매수수료를 30일 미만, 30일 이상·90일 미만에 대해 각각 70%와 30%로 조정했다. 자문사 중에서는 웅진그룹 계열인 루카스투자자문이 손실이 날 때 수수료·보수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투자자에게 얼마나 득이 될지는 미지수다.

일례로 투자금액에 대해 부과하는 선취수수료와 달리 후취수수료는 원금과 수익을 더한 환매금액에 부과된다. 수익이 많을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수수료를 지불할 수도 있다. B클래스 상품이 많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또 매년 부과하는 판매보수도 내야 한다.

자산운용협회는 18일 장기투자자

에 대해서 판매보수를 가입기간이 늘어날 때마다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신한은행은 역외펀드 환해지를 위해 선물환 계약을 맺었던 투자자를 대상으로 3개월 CD금리(17일 기준 5.58%)로 최장 3년까지 대출을 실시한다.

정욱기자

용어 수수료·보수 : 수수료는 한 번만 내면 되는 비용이고 보수는 매년 때는 비용이다. 통상 펀드는 수수료와 보수를 때는 방식에 따라 클래스가 나뉜다. A클래스는 선취(판매)수수료를 때는 대신 매년 내야 하는 판매보수가 낮다. B클래스는 A클래스와 동일하지만 수수료를 환매 때 낸다. C클래스는 (판매)수수료는 없지만 매년 때는 판매보수가 A·B클래스에 비해 높다.

개인연금·장기주택마련 펀드

구분	개인연금	장기주택마련
대상	18세 이상	18세 이상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3억원 이하) 소유 세대주
가입한도	분기별 300만원 (전 금융사 합계)	동일
세금혜택	연 300만원 한도에서 당해연도 납입액 100% 종합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에서 당해연도 납입액 40% 근로소득공제 7년 이상 가입 때 이자소득 비과세
중도해지	기타소득세 22%(주민세 포함) 부과, 5년 내 해지 한 가산세 2.2%(주민세 포함) 추가	가입 1년 내 해지 때 납입액 8%(연간 60만원 한도), 5년 내 해지 때 4%(연간 30만원 한도) 추징

장기 주식형·회사채형 펀드

구분	장기 주식형	장기 회사채형
대상	근로자·자영업자 등 개인	동일
가입한도	분기별 300만원 (적립식)	총 3000만원 (거치식)
세금혜택	3년간 배당소득 비과세 납입액 일정 비율 소득공제 (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3년간 배당소득 비과세
투자기간	3년 이상 투자해야 해택, 중도 환매 때 세금 추징	동일

배당자수(KODI) 연평균 배당수익률 (단위:%)
※2008년은 11월 10일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하나대투증권

1%라도 더 ... 숨어 있는 수익 찾아라

주가 많이 내려 배당 수익률 높아질 듯
변액보험, 장기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

세계 금융위기의 골이 깊어지면서 펀드로 돈 벌었다는 사람을 찾기 어렵게 됐다. 이런 때 펀드 운용 성과만 믿고 있을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가능한 상품을 노려야 한다. 각종 세금 혜택이 있는 펀드가 대표적이다. 주가 상승으로 인한 차익 외에 별도의 배당 수익을 쟁길 수 있는 배당주 펀드와 펀드·보험이 합쳐진 변액보험도 검토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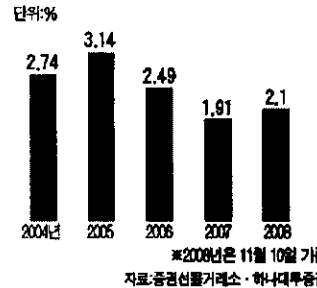
◆절세 펀드 찾아라=시장 상황이 좋을 때 세금 몇 톨푼은 우습다. 하지만 지금처럼 장이 나쁠 땐 한 톨이라도 악착같이 쟁겨야 그나마 손실이 줄어든다. 가장 대표적인 절세 펀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장기주택마련 펀드다. 투자 성향에 따라 주식·혼합·채권형을 고를 수 있다. 개인연금 펀드는 연 3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0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 펀드도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납입액의 40%만 인정되기 때문에 공제 한도를 채우려면 한 해에 750만원을 넣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중도 환매하면 그간 받은 혜택을 고스란히 반납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개인연금 펀드는 높은 기타소득세는 물론 5년 내에 해지할 경우 가산세까지 붙는다.

지난달 시작된 장기 주식형·회사채형 펀드에 대한 세금 혜택도 짚아둘 만하다. 주식형은 적립식, 회사채형은 거치식으로 3년 이상 가입하면 배당소득이 비과세다. 주식형은 연차별로 납입액의 일정 비율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준다.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챙겨봐야 할 것도 있다. 현재 만 20세 이상은 각종 금융상품에 1년 이상 가입할 때 총

배당자수(KODI) 연평균 배당수익률



2000만원까지 세금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한도가 1000만원으로 확 낮아진다. 특히 연장자(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의 경우 우대 한도가 6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절반이 되는 데다 여성은 대상 연령이 남성과 같은 60세로 올라간다. 55~59세 여성이라면 더 서둘러야 한다는 뜻이다.

◆'일거양득' 상품도=배당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고배당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게 배당주 펀드다. 기

업이 배당액을 늘리려면 이익이 그만큼 커져야 한다. 하지만 이익이 증가해도 주가가 너무 뛰면 주당 돌아가는 배당수익률은 낮아진다. 올해는 주가가 기업의 체력에 비해서도 훨씬 많이 빠지는 바람에 배당수익률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하나대투증권에 따르면 고배당 종목을 모아놓은 배당자수(KODI)의 배당수익률은 지난해 1.9%였지만 올해는 10월 기준으로 2.1%까지 높아졌다.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 주식·채권에 투자한 뒤 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변액보험 가입도 고려해 볼 만하다. 단 장기 가입을 염두에 둔 경우다. 10년 이상 가입할 경우 비과세 혜택도 있다. 하나대투증권 서경덕 펀드애널리스트는 "상승장의 1~2% 수익률 차이는 크지 않지만 하락장에선 체감 효과가 상당하다"며 "간접적 방법을 통해서라도 수익률을 올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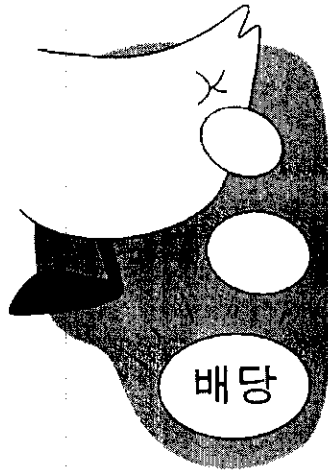
김선하 기자

odinelec@joongang.co.kr

절세·배당·보험이 펀드 투자의 '+α'

정말 뼈저리게 느꼈다. 올해 펀드 투자자는 펀드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바구니(포트폴리오)에 담은 계란일 뿐이라는 교훈을 깨달았다. 수익률 급감이 라는 비싼 수업료도 치렀다.

그렇다고 재테크의 한 축으로 떠오른 펀드를 마냥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 이참에 펀드를 제대로 아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중 하나가 펀드 운용성과 외에 각종 혜택(α)을 따져보는 것이다. 하나투증권이 17일 '펀드 투자+α' 수단을 소개했다. 키워드는 절세와 배당, 보험으로 압축할 수 있다.



세금부터 줄여라

절세혜택은 펀드수익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더구나 곧 연말정산시즌도 돌아온다. 대표주자는 개인연금과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각 분기당 납입한도 300만원)다. 개인연금은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100%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는 불입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근로소득공제를 받는 것과 더불어 7년 이상 저축하면 이자소득세도 비과세된다.

운용성과 외에 각종 혜택 따져보면 수익률 높이는 효과

●절세효과 탁월한 펀드 비교

구분	개인연금펀드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	만 18세 이상 국내거주자	만 18세 이상으로 무주택자 또는 전월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
가입한도	분기당 300만원(전 금융기관 가입 합계액 기준)	분기당 300만원(전 금융기관 가입 합계액 기준)
저축기간	최소 10년 이상 적립 및 5년 이상 연금 수령(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 가능)	7년 이상, 저축기간 상한 제한은 없음
절세내용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불입액의 100% 종합소득공제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불입액의 40% 근로소득공제 -7년 이상 저축 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중도해지시 과세방법	-5년 이내 중도해지 시: 불입금액 누계액의 2%(주민세 별도) 기타소득세: 소득공제 받은 금액+수익의 20%(주민세 별도) -5년 이후 해지 시: 없음 기타소득세: 소득공제 받은 금액+수익의 20%(주민세 별도)	-1년 이내 중도해지 시: 불입금액의 8% 추징(60만원 한도) -5년 이내 해지 시: 불입액의 4% 추징(30만원 한도)
기타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등 펀드 유형간 연 2회 전환 가능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등 투자성향에 맞는 유형 선택

자료: 자산운용협회, 하나투증권

예컨대 연봉 4,000만원의 회원이 매달 30만원씩 납입(한계세율 17.6%로 가정)하면, 개인연금의 경우 300만원 전액 소득공제로 52만8,000원, 장기주택마련저축은 360만원의 40% 소득공제로 25만3,000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장기주식형펀드(적립식)와 장기회사채펀드(목돈저축)는 3년 이상 가입하면 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배당소득 비과세 가입한도는 장기주식형이 분기별 300만원, 회사채펀드는 1인당 3,000만원이다. 단 내년 말까지 가입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기존 펀드 가입자는 계약갱신을 해야 한다.

세금우대와 생계형 비과세 상품도 있다. 세금우대는 만 20세 이상일 경우 2,000만원, 생계형 대상자는 6,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이왕 들려면 서두르는 게 좋다. 가입조건이 까다로워지고 혜택도 적어지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세금우대는 20세 이상 1,000만원, 생계형 대상자는 3,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생계형 비과세 여성가입자의 경우엔 기준연령도 상향 조정(만 55세→만 60세)된다. 55~59세 여성이라면 지금이 가입 적기인 셈이다.

배당을 노리고, 보험을 활용하라

증시 상승기에 시세차익이 최선이지만 하락기에 배당이 많은 종목이 으뜸이다. 배당은 주식의 매매차익에 따른 자본이익 외에 추가로 실현할 수 있는 수익인 만큼, 배당성향이 높은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배당형펀드를 눈여겨보는 것도 방법이다.

펀드 투자효과에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보험혜택까지 있는다면 '일석이조', 바로 변액보험이다. 변액보험은 주식 채권에 투자하고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을 주는 상품. 하나의 상품으로 투자, 저축과 보장 기능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고친유기자 judae@hk.co.kr

사모펀드 中서 살길찾아

자금난 기업 틈새시장 공략 “장기적 성장회복” 한목소리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에 직면한 사모펀드들이 중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지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와 해외 주식 투자자들의 ‘매도폭주(selloff)’로 인한 어려움에도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2008년 초부터 2007년 말까지 4배가량 치솟았던 중국 증시는 올해 전세계 금융시장이 큰 혼란에 휩싸이면서 60% 가까이 폭락해 가장 큰 희생자들 중의 하나가 됐다. 기업공개(IPO)도 규모가 급감하는 등 금융시장 위축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로 대출을 꺼려하면서 대형 사모펀드들은 그 틈새를 공략하고 나섰다. 자금난에 직면한 기업들에 자금조달을 통해 장기적인 이익 확대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외국자본에 대해 엄격

한 규제를 적용해오던 중국 당국도 금융시장의 자금경색이 심화되자 사모펀드의 대규모 자금수혈을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 대형 투자자들은 중국의 성장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성장세를 회복할 것이라고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칼라일그룹의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회장은 “아시아 지역이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특히 중국은 단일 투자처로는 가장 매력적인 장소”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크레디트스위스(CS)는 골드만삭스나 UBS와 올해 안에 중국에 새로운 합작 투자증권사를 설립할 계획이며 모건스탠리 또한 중국 증권사와 합작사 설립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WSJ는 해외 투자자들이 위기를 통해 “중국 시장에 대한 통제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또 다른 위기를 버텨낼 수 있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nanvni@fnnews.com | 오미영기자

한국경제

2008년 11월 18일 화요일
A29면 10.5 x 11.4 cm

중국 본토 투자펀드 ‘선방’

최근 한달 수익률 3% 육박

최근 상하이 증시의 반등세에 힘입어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1개월 기준으로 홍콩에 투자하는 중국펀드보다 20%포인트 이상 수익률이 높다.

17일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지난 14일 현재 PCA투신운용의 ‘차이나드래곤A셰어’ 클래스A형은 최근 한 달간 2.94%, 클래스C형은 2.85%로 플러스 수익을 냈다. 이 상품은 중국 본토의 내국인 전용주식인 A주에 투자하는 펀드다. 푸르덴셜자산운용의 ‘푸르덴셜중국본토주식C’는 이 기간 환노출률이 -0.06%, 환헤지률이 -3.05%로 손실을 줄였다. 이날 상하이종합지수는 2.22% 올라 한 달여 만에 2000선

을 회복했다.

반면 주로 홍콩 증시에 투자하는 ‘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2C’(-20.90%) ‘피델리티차이나종류형A’(-20.28%) 등은 1개월간 20% 안팎의 손실을 내고 있다.

PCA운용 관계자는 “지난 10월 14일 이후 1개월간 상하이종합지수가 1.53% 떨어진 것에 비해 홍콩 H지수는 16.7% 하락하는 등 두 시장 간 주가 흐름이 달라 수익률 격차가 커졌다”며 “중국 본토 증시는 충분한 가격조정을 거쳤고 최근 경기부양책 발표와 증시안정기금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있어 올해 말이나 내년 1분기에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금융시장 불안할때 '확정급여형'이 안전

Q 노후 준비를 위한 퇴직연금제도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퇴직연금은 퇴직금에 비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궁금하다. 또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떤 방식이 좋고, 얼마나 받을 수 있나.

퇴직연금제도는 과거 퇴직할 때 한꺼번에 받던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함으로써 근로자의 노후생활자금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퇴직금을 일시에 받게 되면 은퇴 생활 초반에 다 써버릴 수 있지만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연금 수령기간이 정해진 확정연금이라 아니라 죽을 때까지 받는 종신연금 형태로 받으면 더욱 안정적이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DB·Defined Benefit)형과 확정기여(DC·Defined Contribution)형 두 가지가 있다. DB형은 퇴직 이후 받는 연금수령액을 미리 확정해 주는 형태고, DC형은 개인이 운용 방식을 정해 운용실적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바뀌는 형태다. DC형은 회사에서 매년 쌓인 퇴직금을 개인 계좌에 넣어주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펀드 등의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계좌에서 돈을 빼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DB형은 연금 지급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이 회사에 있지만, DC형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의 장단점

	장점	단점
기업	DB -현행과 유사해 제도 운영에 익숙함 -미래의 부채를 미리 예측해 자금을 평준화할 수 있음	-투자운용 손익에 대해 책임을 져야함 -최종 지급 등 운영 관리에 대한 부담
	DC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이 없음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필요 없음	-근로자 운용실적에 따라 문제가 생길 수 있음 -근로자 교육 및 투자환경 조성이 필요
근로자	DB -퇴직금 지급 책임이 기업에 있음 -퇴직 때 급여 수준이 확정돼 안정적	-최종 급여가 줄면 퇴직급여도 따라 감소할 우려 있음
	DC -급여상승률보다 운용수익률이 높으면 유리 -개인이 추가로 부담해 퇴직금을 늘릴 수 있음	-퇴직급여가 금융 환경 변화에 노출돼 있음 -금융상품을 이해하고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등 근로자의 노력 필요

자료: 삼성생명

'임금상승률 > 물가상승률' 기업 장기근속자 개인이 투자 결정하는 '확정기여형' 피해야

은 회사의 부담금을 미리 정해지므로 퇴직금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근로자에게 있다.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금이 변하는 DC형은 운용성과가 높으면 DB형에 비해 높은 퇴직금을 적립할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금융 시장이 불안할 때는 퇴직금이 적

게 쌓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DB형과 DC형 중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임금체계나 임금상승률, 회사 현황 및 재무상태 등에 따라 달라진다.

통상 DB형은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기업의 장기 근속자에게 상

대적으로 유리하다. 퇴직 후 수령할 퇴직금을 미리 확정짓고자 하는 '안전 중시형' 근로자들도 DB형을 선호한다. 반면 임금상승률이 자신의 기대 수익률보다 낮거나 회사의 건전성이 의심된다면 DC형을 선택할 수 있다.

퇴직연금을 안정적인 DB형으로 정하면 연금수령액이 대략 얼마가 되는지 알아보자.

〈사례 1〉 지금까지 15년을 근무하고 월 500만 원을 받는 45세 근로자가 10년을 더 근무해 55세에 퇴직하면 55세부터 75세까지 20년 동안 퇴직연금으로 매년 197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60세까지 근무하면 근속연수가 5년 더 늘어나면서 60세부터 80세까지 같은 20년 동안 매년 받는 연금액이 3171만 원으로 증가한다.

〈사례 2〉 지금까지 7년을 근무하고 월 250만 원을 받는 35세 근로자가 20년을 근무해 55세에 퇴직하면 55세부터 75세까지 매년 19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60세까지 근무하게 되면 60세부터 80세까지 매년 받는 연금액이 3029만 원으로 늘어난다.

대략적인 퇴직연금 수령액은 삼성생명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에서 퇴직연금 계산기를 사용해 계산해볼 수 있다.

박준범 삼성생명 퇴직연금연구소 연구원

정리=류원식 기자 @donga.com

ETF 하루 평균거래 1천억원

<상장지수펀드>

도입 6년만에 급성장

국내 ETF(Exchange Traded Fund·상장지수펀드) 시장이 개장 6년 만에 하루 평균 거래액 1000억원에 육박했다.

ETF는 코스피 등 특정 주가지수와 연동하도록 설계한 인덱스 펀드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돼 일반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다.

투자자는 적은 돈으로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운용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17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ETF시장 일평균 거래대금은 2002년 324억원으로 출발한 뒤 올해 10월 현재 963억원을 기록했다.

4종목이었던 상장 종목 수도 36개로 늘어나 일평균 거래대금 기준으로 세계 17위, 아시아에서는 도쿄거래소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순자산총액은 2조8304억원인데 순자산 기준으로 시장대표지수 ETF가 82.3%를 차지하고 있어 상품 다양화가 요구된다는 평가다.

거래는 KODEX200, TIGER2

00, KOSEF200 등 KOSPI200을 대상으로 한 ETF가 활발했고 KStar5대그룹주 ETF, 삼성그룹주 ETF, China H, 브릭스 ETF를 제외한 다른 상품은 투자자 참여가 부진했다.

작년부터 펀드와 외국인 거래 비중이 크게 늘어 현재 각각 34.9%, 32.1%를 차지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외국인이 현·선물 차익거래를 목적으로 ETF를 활용하면서 거래가 활발해졌고, 분산투자가 가능하고 자산효율이 높아 펀드 투자 비중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반면 유동성공급자(LP) 거래비중은 2006년 38.4%에서 4.1%로 감소했다.

거래소는 “향후 제도를 개선해 LP가 시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호가를 제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펀더멘털 ETF 등 신규 ETF 상장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채권 ETF 등 다양한 형태 상품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아 기자

ETF 6년만에 8배 성장

주고객은 펀드·외국인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도입 6년 만에 순자산총액 기준으로 8배나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지수에 따라 운용되는 일종의 인덱스펀드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주식처럼 매매가 가능한 ETF는 변형된 현·선물 차익거래에 활용되거나 분산투자 효과가 높다.

증권선물거래소는 2002년 10월 14일 개설된 ETF시장이 지난 10월 말 현재 거래종목수는 4개에서 36개로 늘어나고 순자산총액은 3444억원에서 2조8304억원으로 늘어났다고 17일 밝혔다.

국내 ETF시장에서 펀드자금과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4.9%와 32.1%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올 들어 ETF 거래량이 폭증했던 데는 일정부분 외국인들이 코스피200 구성종목을 매입해 ETF로 전환한 후 증권거래세를 물지 않고 매도하는 데 ETF가 이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혜정 기자 selemoon@hankyung.com

“ELW가격보다 싸다니...”

1290개 종목 5000원미만

ETF시장 6년만에 종목 9배 증가

KRX, 채권·펀더멘털 상장지수펀드등 다양화

앞으로 채권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ETF가 도입된다.

증권선물거래소(KRX) 유가증권 시장본부는 17일 ETF시장 개설 6주년을 맞아 ETF 기초자산의 범위 및 자산운용기법 확대를 통해 다양한 상품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ETF시장이 개설된 이후 10월 말까지 6년 동안 시장 규모가 9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개설 당시 4개종목으로 출발한 ETF시장은 한동안 정체 상태를 보이다 2006년 ‘섹터ETF’ 상장을 계

기로 투자자의 관심이 늘면서 매년 시장이 급증해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36종목이 상장돼 시장 개설 후 6년 만에 9배 증가했다. 상장좌수는 2억7671만좌로 5.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ETF시장 순자산총액도 개설 당시 3444억원으로 출발, 올 10월 말 현재 2조8304억원으로 8배 증가했다.

또 상품 유형별로는 섹터지수, 테마지수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한 ETF가 상장돼 상품 다양화가 급속히 진전되었다. 이 중 ‘시장

대표지수 ETF가 82.3%(순자산 기준)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거래대금도 2006년 이후 매년 2배 이상 급증해 올해 3·4분기에는 사상 처음으로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1000억원을 초과했다.

해외ETF 시장과 비교해 보면 하루 거래대금 기준으로 세계 17위, 상장종목 수는 세계 013위를 차지했다. 상장종목 수는 아시아 지역 내에서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투자자별 거래비중으로는 펀드와 외국인이 각각 34.9%와 32.1%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분산투자가 가능하고 자산운용의 효율성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번 성과분석을 통해 ETF가 장기 안정적인 투자 상품으로 투자자에게 효율적인 자산증식 수단을 제공하고 자산운용사의 자산운용능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킬 기회를 제공하는 등 증권시장의 선진화에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앞으로 유동성공급자(LP) 제도개선을 통해 LP가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LP호가를 제시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 펀더멘털 ETF 등 신규 ETF 상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h18129@fnnews.com | 노현섭기자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주식워런트증권)의 가격이 거래소에 상장된 일반 주식가격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증시가 급락하면서 개별주식 가격은 크게 떨어진 반면 주가가 하락해야 이익이 나는 ELW의 가격은 급등해서다.

17일 증권선물거래소 등에 따르면 이날 8000원으로 마감된 코스피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대8137ELW’를 비롯 5000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는 ELW는 12개에 달한다. 통상 ELW가 500~1000원 사이에서 발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그동안 증시 하락세로 많게는 10배 이상 가격이 된 것이다.

반면 지난 주말 기준으로 주가가 5000원 아래에 거래되고 있는 주식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합쳐 1290개에 달한다. 특히 ELW가 신규로 발행될 때의 통상 가격인 1000원 선보다 주가가 낮은 종목들도 469개에 이르고 있다.

최창규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증시가 하락하면서 개별종목 주가가 500원 미만인 경우도 많아진 반면 ELW들의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이는 하락할 확률이 높아진 데 따른 착시현상으로 보인다”며 “지수옵션이나 ELW 간의 차이거래로 과도하게 급등한 ELW 가격은 제자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자후 기자 hu@hankyung.com

쪽박펀드 못참겠다면...“거치식부터 분산환매”



패닉 상태를 벗어나 잠시 반등하던 주가가 여전히 급등락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 펀드 투자자들의 근심이 다시 깊어지고 있다. 펀드 투자자들한테는 당장의 장세도 문제지만 경제 전망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데서 큰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처음엔 내년 상반기까지만 참으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경기 저점을 점점 더 뒤로 늦춰 잡는 전문가가 다수다. ‘막연히 반등할 때까지 참겠다’는 태도에서 벗어나 유지 및 환매 전략을 다시 점검할 때다.

적립식보다 회복 더더...세제혜택 없는 펀드도 고려 경제전망 더 어려워져...내년 상반기 반등 불투명

먼저, 환매 때 주의할 것은 예금과 달리 펀드는 환매 신청과 동시에 현금화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통 영업일 기준으로 나흘이 지나야 하며, 국외 펀드의 경우 길게는 열흘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다. 하 루이를 뒤 쏘 돈을 펀드 환매로 찾을 순 없다는 것이다.

투자 때와 마찬가지로 환매 전략의 기본 또한 ‘분산’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본인의 투자를 어느 선까지 줄일지 살펴본 뒤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환매하는 전략이다. 따라서 환매 규모와 함께 환매 순서를 잡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겁에 질려 한꺼번에 모든 펀드를 내던지거나, 각 펀드의 성격을 파악하지 않고 내키는 대로 환매하는 것은 손해를 키우는 지름길이다.

일반적으로 적립식보다 거치식 펀드를 먼저 환매하는 게 유리하다. 적립식의 경

우 장기투자 수단이면서, 매달 새로 들어가는 돈이 주식을 저가로 사들이고 있어 상승장에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거치식은 예전에 고가로 주식을 매입한 것이어서 회복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질세형 펀드 보다는 세제혜택이 없는 일반 펀드 쪽이 우선적인 환매 대상이다. 장기주책마련 펀드나 개인연금펀드는 비과세에 소득공제 혜택까지 있어 후순위다.

개별 펀드의 성격과 성적에 따라 순서를 매길 수도 있다. 국내외, 업종을 막론하고 모든 주식이 빠지고 있지만, 펀드별 상대적인 수익률은 지금도 차이가 나고 전망도 다르기 때문이다.

전체 시장(지수 등)보다 성적이 지속적으 나쁘다면 펀드 운용능력에 의심을 품을 만하다. 펀드 설정액이 단기간에 빠져나가는 펀드도 수익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유망 종목을 발굴해 매수하기

보다는 환매자금 마련을 위해 보유자산을 계속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삼성증권 김희곤 연구위원은 “펀드 성과 등을 살펴 환매하는 전략은 국내뿐 아니라 국외 주식형 펀드도 마찬가지고 상승장에서도 유효한 전략”이라며, “초보 투자자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말했다.

환매 전략을 제대로 짜려면 본인의 보유 능력도 점검해야 한다. 5년, 10년 이상 물어 놓을 여윌 돈이 아니라면 언제까지 참을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참으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접어야 한다. 주가는 실물경제보다 보통 6개월 정도 먼저 반등하는 경향이 있다지만 일러야 2009년 중반 이후에나 반등이 시작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펀드 환매 요령

- 일반적으로 적립식보다 거치식 펀드를 먼저 환매하는 게 유리
- 세제혜택 없는 펀드 먼저 환매
- 시장 지수보다 성적이 나쁜 펀드 먼저 환매
- 당장 현금이 필요하면, 수익률 높은 펀드 먼저
- 포트폴리오 조정의 기회로 삼는다(국외 및 국내 비중 조정)
- 펀드는 예금과 달리 환매 신청과 동시에 현금화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 4~10거래일 소요

도움말: 국외자산증권, 국내투자증권, 삼성증권

‘채권형 펀드’ 운용내역 살펴보셨나요

금융위기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채권형펀드의 환매 연기도 이어지고 있다.

4일 도이치투자신용이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신성건설 채권이 편입된 9개의 펀드에 대해 환매 연기를 공시한 데 이어 13일 플러스자산운용은 대우차판매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편입된 ‘플러스합시드채권혼합160’에 대해 환매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플러스자산운용 측은 “시장에서 대우차판매의 ABCP에 대한 불안감이 형성되면서 12, 13일 이틀 동안 설장액의 절반 수준인 600억 원의 환매 요청이 몰렸다”며 “지금 기업어음(CP) 거래가 잘 되지 않아 유동화를 시킬 수 없어 환매를 일시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환매 연기는 펀드 내 자산이 부도가 나는 등 환매가 어려워질 때 자산운용사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다. 투자자에게는 이후 판매사를 통해 통보되는데, 일단 환매 중단이 결정되면 투자자가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자산운용사 측은 환매 연기를 발표한 이후 6주 안에 수익자 총회를 열어 환매 연기 기간, 환매 재개 이후 환매금 지급 방법 등을 결정해야 하지만, 여기서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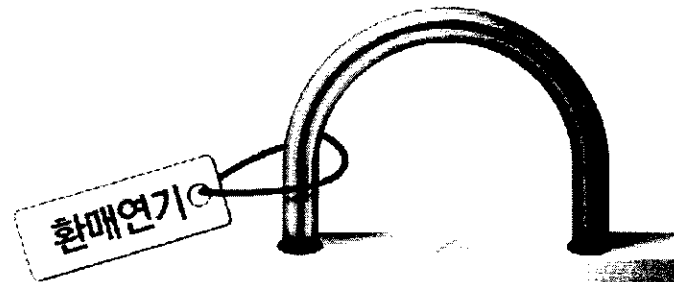
자의 의사가 반영되기는 힘들다.

실제 리먼브러더스가 발행한 주가연계증권(ELS)을 편입한 주가연계펀드(ELF)에 대해 환매를 연기한 일부 운용사의 수익자총회에서 투자자들이 환매 연기에 ‘부결’ 의사를 밝혔지만 결정사항은 변하지 않았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는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해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 계속해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환매연기 결정엔 투자자 손쓸 방법 없어 펀드 내 부실자산 염려되면 환매 고려를

일부 자산운용사는 펀드 내 부실자산과 정상자산을 분리한 뒤 정상자산만 환매를 재개하기도 한다. 이 경우 투자자는 정상자산에 대해서는 당시 기준가에 맞춰 환매를 할 수 있지만 부실자산은 언제, 어느 수준의 기준으로 환매가 가능할지 불확실하다.

도이치투자신용도 신성건설 채권이 편입된 펀드를 정상자산과 부실자산으로 분리해 정상자산에 대해서는 먼저 환매를 재개하고, 이후 신성건설의 처리 절차에 따라 부실자산 환매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1월 환매 연기 공시된 주요 펀드

날짜	운용사	펀드
11월 4일	도이치투자신	-도이치코리아채권1-10년
		-도이치코리아채권1-10년
		-도이치코리아채권1-10년
		-도이치코리아채권1-10년
		-도이치코리아채권1-10년
		-도이치코리아채권1-10년
		-도이치코리아채권1-10년
		-도이치코리아채권1-10년
		-도이치코리아채권1-10년
		-도이치코리아채권1-10년
12일	알파에셋	-알파에셋채권1-5년
		-알파에셋채권1-5년
		-알파에셋채권1-5년
13일	플러스	-플러스합시드채권혼합160
		-플러스합시드채권혼합160

자료: 자산운용사

펀드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평소 펀드의 운용내용을 꼼꼼히 살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삼성증권 조완제 연구원은 “주식형펀드는 투자자가 한 달 전 투자내용까지만 볼 수 있지만, 채권형펀드는 판매사에 요

청하면 바로 전날의 투자내용도 볼 수 있다”며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만, 본인의 펀드 내 부실 우려 자산이 있다고 판단되면 일부 환매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지연 기자 chance@donga.com

채권형 펀드, 너마저 등 돌리나



경기 변화가 큰 요즘,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며 투자하기 유리한 것으로 손꼽히던 채권형펀드마저 위기를 맞고 있다. 국내 부동산발(發) 부실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관련 기업들의 부도 우려와 함께 채권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 계획을 밝혔지만 채권펀드 시장의 위기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일부 채권형펀드는 급기에 대량 환매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환매를 일시 중지시켰다. 1999년 대우채 사태 때와 비슷한 '부실채권발(發) 펀드런(대량환매사태)'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염려까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채권펀드가 투자한 자산이 어떤 것인지 확인한 뒤 투자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또, 채권형펀드의 주요 투자자인 기관의 움직임에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다.

◆채권형펀드 환매 차질 속출

회사채·기업어음의 신용위험이 부각되면서 채권형펀드에 대한 대량 환매요청이 몰리고, 이에 투자신탁회사들이 잇

따라 환매연기를 신청하고 있다. 지난 14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최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신성건설 관련 펀드를 포함해 이달 들어 환매 중단된 채권형펀드가 총 7개에 달한다.

총설정액 1188억원 규모인 플러스자산운용의 '플러스탐시드채권혼합160'에는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총 600억여원의 환매 요청이 몰려 13일부터 환매가 일시 중단됐다. 알파에셋운용의 '알파에셋위너스채권형1' (설정액 738억원)에도 11일부터 아틀간 설정액의 절반 가까운 300여억원의 환매요청이 집중됐다. 두

건설회사 부도 우려 높아져 채권 거래 뚝 지난주 수익률, 주식형 펀드보다 훨씬 나빠 일부 펀드 대량 환매 요청으로 환매 중단도

회사는 환매연기를 신청한 이유로 대량 환매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매각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이치투신운용은 신성건설 회사채를 편입한 '도이치코리아채권' 등 채권형 및 혼합형펀드의 환매를 중단시켰다. 이들 펀드들은 환매연기일로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가 개최돼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될 예정이다.

채권형펀드 수익률도 좋지 않았다. 17일 펀드평가사 모닝스타코리아에 따르

면 지난 한 주간(11월10~14일) 채권형펀드 수익률(-0.6%)은 금리상승(채권 값 하락)으로 국내주식형펀드 수익률(-0.18%)보다도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업 부도 우려 때문

매년 1개에 불과했던 펀드 환매 연기 건수는 올해 들어 25건을 기록했을 정도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25건 중 24건이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파산보호신청 사태가 터진 지난 9월 중순 이후 발생했다.

환매 연기 급증의 원인은 기업부도 위험증가로 회사채 신용위험이 부각됐고,

이런 부실 회사채를 보유한 채권형펀드에 환매요구가 집중됐기 때문이다. '플러스탐시드채권혼합160'·'알파에셋위너스채권형1'도 유동성위기를 겪고 있는 대우차판매 관련 ABCP(자산유동화 기업어음·회사채·부동산 등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를 40% 가까이 편입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을 샀다. 대우차판매는 지난 10일 850억원 규모의 ABCP 만기를 하루 넘겨서 상환하며 주식시장에서 하한가 행진을 기록했다.

올 들어 환매 중지된 펀드

〈자산운용협회〉

일자	회사명	펀드명
3/3	한화투신운용	한화분리과세고수익고위험채권1
9/16	마이에셋자산운용	MY Dual Star파생상품D-1
9/16	삼성투신운용	삼성2Star 2Y파생상품16-1
9/16	아이투신운용	아이러브코리아회사채1,아이러브코리아회사채12M-1 아이러브평생직장채권2,아이러브평생직장채권3,아이러브평생직장채권5 아이절세미인고수익고위험채권혼합15M-5, 아이절세미인고수익고위험채권혼합15M-6, 아이절세미인고수익고위험채권혼합15M-7
9/16	우리CS자산운용	우리2Star파생상품KH-3·우리2Star파생상품KW-8
9/17	하나UBS자산운용	하나UBS기업은행-삼성중공업주거연계파생1
9/23	우리CS자산운용	우리2Star파생상품TB-1·우리2Star파생상품KB-4
10/8	삼성투신운용	삼성당신을위한리서치메가트렌드주식종류형1
10/16	우리CS자산운용	우리CS헤지펀드인덱스알파파생1
11/4	도이치투신운용	도이치코리아채권1,도이치자비스50혼합안정성장형1 도이치자비스30혼합안정형1,도이치더블드래곤종류형채권혼합 도이치더블드래곤종류형주식혼합
11/12	알파에셋자산운용	알파에셋위너스채권형1
11/13	플러스자산운용	플러스탐시드채권혼합160

일부 채권의 부실 가능성으로 채권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정상적인 채권까지 거래량이 뚝 끊긴 것도 채권형펀드의 환매조건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부가 13일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펀드 투자에서 소외된 국고채 피해 가능성·투자기준(신용등급 BBB+ 이상) 아래 기업들의 여전한 자금난·금융사들의 저조한 참여 가능성 때문에 국고채 금리가 오히려 급등하는 등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다.

◆채권형펀드 편입자산 확인 필요

국내기업의 신용위험이 부각된 9월 이후 펀드환매 일시 중단 사태가 속출하고 있어 투자자 주의가 요청된다. 전문가들은 채권형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이 안전한 것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투자에 앞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조완재 삼성증권 펀드 연구원은 "최근 부실 회사채에 투자하는 채권형펀드의 환매 어려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해당 채권펀드의 자산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석 기자 cogito@chosun.com

채권형펀드서 돈 빠져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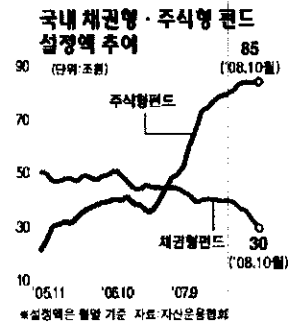
5개월새 10兆6,245억 이탈... 이달 들어서만 7,032억이나

채권형펀드에서 자금이 빠지고 있다. 실물경기 침체로 펀드에 편입된 은행채와 회사채의 부실 우려가 높아지자 투자자들이 서둘러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국내 채권형펀드 설정액은 30조407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7,121억원이나 줄었다. 최근 5개월 연속 유출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기간에 빠져나간 자금만 무려 10조6,245억원에 달한다. 장작 '펀드런'이 우려됐던 주식형펀드로 같은 기간 5조1,181억원이 들어왔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달 들어서도 채권형펀드에서의 환매 러시는 계속되고 있다. 13일에 1,410억원이 이탈한 것을 비롯해 11월 들어(13일 현재) 벌써 7,032억원이 빠져나갔다. 반면 단기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로는 이달에

MMF엔 자금 몰려 안전자산 선호 '뚜렷'



만 8조9,673억원이 몰려들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채권형펀드의 자금 이탈은 이미 지난해부터 진행됐던 현상이다. 그러나 지난해 자금이탈이 고수익을 추구하는 일부 자금의 주식형펀드로의 이

탈이었다면 최근의 자금유출은 증시에서 돈을 빼내는 '환매'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특히 회사채가 일부라도 포함된 펀드는 최근 잇따라 환매가 연거 및 중지되면서 유동성 확보가 급선무인 기관 및 개인들이 주식형보다 먼저 자금을 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리스크가 높아지면 수익률이라도 올라야 하는데 최근 채권형펀드 수익률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어 자금이탈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달 한 국은행 기준금리가 1%포인트나 떨어졌는데도 3년짜리 'AA-' 회사채 수익률은 8.63%에서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채권형펀드는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게 연 5%

수준에 불과한데 최근 불금리와 상관없이 예금금리가 7~8%까지 높아진 것이 채권형펀드의 매력을 반감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용규 미래에셋증권 상품기획팀장은 "정책금리 인하와 채권시장 안정펀드 조성 소식 등에도 불구하고 은행채와 회사채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미온적"이라며 "신용시장 경색으로 국공채 역시 1년 이상 장기물은 오히려 금리가 오르는(채권가격인하)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안정권 SK증권 펀드매니저리스트는 그러나 "1999년 채안기금 조성 당시 한동안은 채권금리가 불안정하다 이후 금리가 하락추세를 보이면서 수익률이 높아졌다"며 "당장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채권형펀드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at@sed.co.kr

공공채 채권시장... 회사채 금리 9% 육박

기업들 "신규 발행은 커녕 만기 연장도 힘들어"

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인 회사채 시장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만들어 사중 채권을 사들이기로 했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3년짜리 회사채(AA- 등급) 금리는 정부가 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한 13일 이후 이틀간 0.5%포인트 급등하며 연 8.83%를 기록했다.

회사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대기업 일부 계열사를 제외하곤 신규 회사채 발행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한 증권 기업의 재무담당자는 "신규 발행은

커녕 만기가 돌아온 채권의 상환 연장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회사채 거래가 거의 끊겨 금리를 정할 수 없게 되자 증권업협회와 신용평가회사들은 국고채와 은행채의 금리를 비교해 간접적으로 회사채 금리를 산정하고 있다.

정희전 한국은행 금융시장국장은 "채권시장이 불안심리에 의해 움직인다면 언제든지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유동성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회사채 금리가 급등하는 것은 정부의

펀드 조성 계획이 오히려 시장에 역효과를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우리투자증권 박종연 연구원은 "최근 금융회사들이 돈이 없어 예전처럼 채권 투자를 많이 못하고 있다"며 "그런 상태에서 정부가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각출하면 채권시장의 매수 여력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이나 보험사들이 펀드에 돈을 대기 위해 기존에 갖고 있는 채권을 팔 수밖에 없고, 이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애가다.

김준현 기자

takeital@joongang.co.kr

채권형펀드 '부실채권 떼내기' 교육지책

도이치투자신운용, 별도펀드로 분리해 환매연기

회사채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부실 채권에 투자한 채권형 펀드의 환매 연기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부실 채권만을 따로 떼어내는 '펀드 쪼개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17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도이치투자신운용은 지난 주말 '도이치자비스30 혼합안정형1'과 '도이치자비스50 혼합안정성장형1' 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던 신성건설 회사채를 따로 떼어내 새 펀드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기존 펀드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새로 만든 펀드는 환매가 연기된다.

도이치회사 측은 "최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신성건설의 회사채가 채권시장에서 거래가 어려워져 투자자들의 환매 요구가 들어오면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해 따로 분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펀드의 신성건설 회사채 투자비중은 전체의 2.92%에 이른다.

최근 채권형펀드는 투자한 회사채의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펀드 전체의 환매

를 연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플러스자산운용의 '플러스탑시드채권혼합160'과 알파에셋운용의 '알파에셋위너스채권형1'의 클래스별 3개 펀드는 최근 환매 연기를 결정했다. 잔액이 각각 1188억원, 738억원에 달하는 이 펀드들은 대우차판매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매가 연기되는 펀드는 해당 기간 동안 판매가 중지된다. 환매 연기일로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 총회가 열려 펀드 투자자들이 바로 손실을 확정해 펀드를 청산할 것인지 등을 의결하게 된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머니투데이

2008년 11월 18일 화요일 001면

■ 펀드런 대신 소송런... 환매 연기

"은행 직원이 안전하다고 했는데... 사기당한 것보다 더 억울합니다. 꼭 싸워 이깁시다!" 포털에 개설된 중국펀드 선물환계약 피해자 소송모임 카페에 '환행'하는 구호다. IMF외환위기, 카드사태 등을 극복하며 어렵게 구축한 국

내 펀드시장이 신뢰 위기를 맞고 있다. 국내의 주식형펀드와 경우 '펀드런'은 없지만 투자손실에 따른 후유증으로 '소송런'에 휘말리고 있다. 채권형펀드는 건설사 유동성 위기와 회사채 거래 단절로 환매 위기를 맞고 있다.

펀드 '신뢰의 위기'

소송으로 이어지면 자칫 신뢰가 생명인 자산운용업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달 들어 채권형펀드는 13개 펀드의 환매가 연기됐다. 관련기사 3·26면

17일 증권·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대규모 손실에 울분을 느낀 투자자들이 '불완전판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판매사를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펀드분쟁 및 소송 관련 카페는 10개다. 우리CS자산운용의 '우리파워인컴펀드'로 시작된 소

펀드 소송 관련 주요 인터넷 카페

카페명	개설일	회원수
우리파워인컴펀드 소송추진모임	9.9일	24명
미래에셋자산운용 펀드분쟁 피해자 모임	11.6일	70명
인사이트펀드 집단소송	11.12일	46명
펀드 주식 등 불완전판매 피해자 모임	10.30일	94명
인사이트펀드 집단소송	10.27일	419명
미래에셋자산운용 펀드분쟁을 위한 모임	10.21일	66명
중국펀드선물환계약피해자 소송모임	10.20일	124명

(자료: 네이버, 다음, 17일 기준)

송 움직임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인사이트펀드'와 '역외펀드' 선물환계약에 이어 주기연계증권(CJS)으로까지 번졌다.

펀드시장에 불어닥친 '소송 도마'는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이 '우리파워인컴펀드' 분쟁에 대해

판매사인 우리은행 측이 투자자에게 원금의 50%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린 게 기폭제가 됐다. 이후 금감원에 접수된 펀드 관련 민원도 평소 하루 20여건에서 100건을 훌쩍 넘었다.

주식형펀드에서 투자자들이 카페 등을 통해 문제삼는 부분은 '불완전판매'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판매사 직원이 "30% 수익을 올려주는 펀드가 있으니 믿으라"며 상품 투자를 권유했다는 주장이다.

박성희 기자 stargirl@

▶3면에 계속됩니다

“금융사에 속았다” 깨진 신뢰가 더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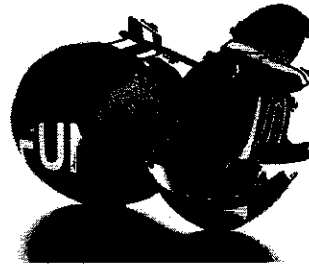
▶1면 '펀드' 서 계속

민기 연장과 함께 손실 배상에 대한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는 FLS도 마찬가지다. 창구 직원은 기초자산의 주가가 일정수준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연 20% 안팎의 수익을 얻는다고 강조했을 뿐 과다 하락으로 원금 손실이 가능하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FLS 투자로 손실을 입은 한 투자자는 “은행 직원은 FLS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손해가 없었다며 1년 예금처럼 생각하라고 했는데 이제보니 거짓말이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심지어 증권사 직원이 투자자의 서명을 위조해 상품에 가입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투자자는 “알고 지내던 증권사 직원이 FLS는 원금 손실이 없고 조기상환 가능성이 큰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했다”며 “나중에 가입하려고 보니 이미 직원이 서명을 위조해 신청서를 작성했고 원금은 20%만 남은 상태였다”고 토로했다.

금융위기에 따른 대규모 손실에 이어 연이은 소송사태에 휘말리자 ‘신뢰’가 생명인 자산운용업계의 존재 근간이 흔들린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실제로 카페 등에서 “차라리 현금으로 들고 있거나 은행에 넣었으면 이렇게 돈 잃고 마음고생할 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이제 펀드는 쳐다보기도 싫다”는



“고객 서명까지 위조...펀드 쳐다보기도 싫다”

판매에만 열중 관리는 소홀 열풍이 역풍으로

투자자가 늘었다.

자산운용업계의 한 관계자는 “어려운 상품을 무리하게 만들어 투자자에게 판매한 책임이 수익률 급락을 계기로 드러나는 것”이라며 “투자자가 자신이 피담 출려 번 돈을 믿고 맡기는 데서 펀드시장이 출발하는데 ‘불완전판매’가 횡행하면 누가 펀드에 가입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일부에선 분위기에 휩쓸려 ‘나

도 한번 배상을 받아볼까’ 하는 ‘무임승차’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한 카페에는 ‘주식형펀드 소송 걸어볼까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2000만원 투자한 게 1500만원도 안된다. 2100만원일 때 돈 뺏다고 했더니 은행 직원이 주식형펀드는 원금에 크게 손해 안간다고 그랬다”며 손실을 받아내야겠다는 글이 심심치 않게 보인다.

불과 1년 전만해도 ‘펀드 열풍’으로 들쭉던 펀드업계가 그동안 내재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리하지 못한 데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증시 하락기에 많은 소송이 잇따른다는 건 그만큼 한국의 자산운용업이 성숙하지 못하다는 방증”이라며 “펀드산업의 위축이 불가피하지만 시장발전을 위해선 반드시 치러야 할 ‘성장통’”이라고 평가했다.

자산운용업계 또다른 관계자는 “지금도 수익률이 좋으면 이런 소송이 나오겠느냐”며 “펀드는 실적 배당 상품으로 가입하는 순간 운용사에 투자를 일임한 것이어서 손해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걸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970년대 미국에서도 펀드가 반토막나면서 소송이 넘쳐났으나 운용사와 판매사, 투자자에 대한 감독규정이 강화되면서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가 사라졌다”며 “내년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금융상품 판매법이 문제해결의 근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긴급진단 펀드시장 무엇이 문제인가

2 불완전 판매

판매사도 투자자도 금융당국도 책임 떠넘기기

판매 매뉴얼 지키지 않고 감독도 소홀

근본 대책 없고 투자자 달래기에 급급

“지난해 주가연계증권(ELS)에 가입할 때만 해도 담당직원이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40% 이상 주가가 떨어질 일이 없다며 가입을 권유했는데 지금에 와서 -70%라니 기가 막힐 수밖에 없다.”(ELS 가입자 A씨)

“프라이빗뱅크(PB)점이라면 모르겠는데 일반 증권사나 은행은 월 몇십만원짜리 적립식펀드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다. 월 10만원 적립식을 1년 불입하면 120만원이다. 판매수수료를 평균 1%라 치면 펀드라는 투자상품의 기본적인 유의사항부터 해서 위험성과 투자구조 설명, 여기에 상담자의 연령과 투자목적까지 감안해 1시간이 넘는 ‘완전판매’의 대가는 1만2000원에 불과하다. 자연 부실한 상담이 될 수밖에 없다.”(취득권유인 B씨)

‘불완전판매’가 펀드시장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원금에 손실이 나면 담당이라도 물어줄 것 같이 굴었던 담당 직원은 가입자도 모르는 사이 다른 지점으로 옮겨가 더욱 분통타지게 하는 것이 현실.

■펀드시장의 핵심 ‘불완전판매’

펀드를 판매한 측에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서명을 받았는데 펀드가입자들은 어떤 상품이었는지 왜 이렇게 손실이 났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아우성이다.

‘원금 비보장펀드’의 경우 가입자들의 펀드가 대부분 반토박 상태. 인터넷카페 등에서는 ‘손실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선물환에 관해서는 듣지도 못했다’, ‘투자설명서를 받지 못했다’ 등 불완전판매 결정 가능성은 없는지 사연을 토로하는 글들이 쏟아지

고 있다.

짧은 시간에 펀드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펀드 판매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데다 금융감독원이 판매사에 손실의 일부를 물어내라고 결정하면서 판매사와 투자자 간에 ‘불완전판매’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게 생겼다.

안정적 투자성향의 고객들이 주로 가입한 은행의 경우 수익률 악화로 인한 고민이 더욱 커지고 있다. 법무법인 한반도는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에 대한 소송 문의도 많지만 국민은행에서 가입했던 투자자들이 상담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국민은행의 투자자들을 모아 소송을 진행코자 한다고 밝힌 상태다.

사실 금융당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펀드 불완전판매 방지 대책을 내놓고 ‘고객의 투자목적 등 확인→고객의 유형분류→고객에게 적합한 펀드 선정→펀드에 대한 충분한 설명→고객의사 확인→사후관리’라는 펀드 판매 매뉴얼까지 제시했다. 문제는 이행은 거의 되지 않았고 감독 역시 소홀했다는 점.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판매 창구가 은행

으로 확대되면서 투자자들의 이용 편의성은 증대됐지만 내부 통제가 약화된 것은 사실”이라며 “대책 자체보다 일선 창구 등 현장에서 이행이 잘 되지 않았던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미스테리쇼핑’내달 시행, 효과 있을까
불완전판매로 줄소송이 예고되면서 판매사들이 판매인력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감독당국 역시 투자자들을 달래기 위해 대안을 내놓고 있다. 투자위험과 상품구조에 따라 상품에 등급을 매기겠다는 펀드등급제나 판매인력 등급제를 비롯해 금감원이 12월 안으로 시행을 추진 중인 ‘미스테리쇼핑제’가 그 중 하나. 미스테리쇼핑이란 고객으로 가장한 금융당국 직원이 영업점을 방문해 금융회사들이 금융상품을 적법하게 판매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수차례 펀드 판매실태에 대한 점검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제재가 없었던 상황에서 미스테리쇼핑제 역시 완전한 대책이 되지 못하고 결국 판매사의 자율적인 책임 강화에 기대고 있다는 지적이다.

펀드판매인력 자격

한국	30시간 이상 펀드판매교육 후 평가시험 통과, 이후 2년마다 1회 이상 10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
미국	자율규제기관인 ‘FINRA’에서 주관하는 ‘Series 6’ 시험 합격, 첫 2년째 되는 날부터 120일 이내 보수교육 이수, 이후 3년마다 교육
영국	적절한 시험(약 30여개에 달함)에 합격해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은 정부 기관 규제 받음, 의무 보수교육은 없음
일본	증권업협회 주관 (외무원)자격시험 합격, 의무받은 모든 외무원위 가능한 1종부터 4종까지 있음, 매매권유할 수 있는 특별회원 4종까지 있음

자료:자산운용협회 및 위하

불완전판매의 유형

- 투자원금 또는 수익률 보장 행위
- 허위표시 또는 투자에 중대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표시행위
-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판단자료 또는 예측자료를 투자자에게 제시한 행위
- 적격 판매 인력이 아닌 자가 펀드를 판매하는 행위

증권사의 한 펀드판매인은 “이전처럼 수익률이 회복되고 투자자들의 불만이 잦아지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냐”며 “결국 근본적인 대책보다 주먹구구식 달래기에 손해보는 것은 투자자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당국이 제시한 매뉴얼을 다 지키자면 1~2시간은 기본적으로 소요된다. 구조적인 판매의 문제점은 그대로 둔 채 설명의 무만 감요한다면 판매사도 투자자도 모두 불만을 겪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hug@fnnews.com | 안상미기자

펀드소송 부추기는 변호사

소위 '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한 고객 분쟁이 급증하면서 펀드 관련 소송을 조장하는 변호사들이 나타나 투자자들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투자에 대해서도 승소를 권유하는 사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한 대형 증권사 PB는 "손실을 걱정하던 고객들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서는 일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과워인컴 펀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판매사 책임을 일부 인정한 영향도 있지만 소송을 제기하면 이길 수 있다는 변호사의 설명이 영향이 컸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손실이 난 펀드 대부분이 불완전 판매 소지가 있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변호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분위기는 판매사 손실을 인정한 금감원 결정이 내려진 뒤에 확산되고 있다.

"손실폭이 큰 상황에서 내 펀드도 보상받을 수 있느냐"는 투자자 문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건 안되는데도
소송 제기할수있다”
조장하는 사례 많아**

실제 펀드투자자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인터넷 카페 등에서 활동하는 사례도 있다.

이는 펀드 소송으로 인해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데다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거액을 벌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펀드 관련 소송을 준비하는 변호사들은 통상 착수금 명목으로

개인당 5만~10만원가량을 받는다. 이후 승소할 경우에는 별도 보수(승리수당)를 얻게 된다.

이때 소송 제기 후 기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비율이 달라진다.

가령 6개월 미만은 5%, 6개월 이상은 10%라는 식이다.

펀드 관련 소송은 거액의 투자 자금이 몰려 있는데다 펀드들 손실폭이 50% 이상이어서 승리 수 당도 상당하다는 계산이다.

증권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은 “무턱대고 소송을 권하는 것은 투자자들이 선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당장 손실이 많이 발생했다고 해서 판매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면 증권·펀드 관련 소송을 많이 진행해본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한 펀드 관련 소송 전문 변호사는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꼭 법정을 통한 해결만이 능사는 아닐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욱 기자

중소운용사 틈새시장 공략

금융시장 불안... 파생·채권형펀드 출시 봇물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되면서 중소형 자산운용사들이 안정적인 채권형펀드와 함께 파생상품펀드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이다.

1600선을 하회하면서 본격적으로 주가가 내림세를 타기 시작한 지난 7월부터 파생상품펀드 출시가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중소형 운용사의 상품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7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신규 설정된 파생상품펀드는 698개. 이 가운데 플러스자산운용이 95개의 파생상품펀드를 출시해 전체의 13.6%를 차지했다. 뒤이어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63개)과 하이자산운용(61개), 동양투신운용(58개), 삼성투신운용(48개), SH자산운용(47개) 등으로 나타났다.

설정액 규모면에서 중소형 운용사에 속하는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은 신규 출시 펀드 중 파생상품펀드의 수가 무려 88%에 달했고 메리츠자산운용과 푸르덴셜자산운용, 도이치투신운용, 교보역사자산운용 등도 새로 내놓은 파생상품펀드의 비중이 각각 78%, 63%, 67%, 56%에

달해 절반을 훌쩍 뛰어넘었다.

비록 삼성투신이나 SH운용 등의 대형사도 적지 않은 수의 파생상품펀드를 신규 설정했지만 전체 설정액 규모 면에서 미미한 수준이다.

삼성투신운용 신규 펀드 중 48%에 이르는 파생상품펀드의 설정액이 2조6799억원으로 총 49조9411억원에 달하는 설정액 중 5.4%가 채안되는데 반해 교보역사자산운용의 파생상품펀드 설정액은 전체의 58%를 웃돈다.

이와 같이 중소형 자산운용사들이 대형사에 비해 파생상품펀드나 채권형펀드에 집중하는 이유는 우선 내로라하는 굵직한 대형사들이 주식형펀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파생상품펀드나 채권형펀드에 특화해 틈새시장을 노려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주식형펀드시장이 혼란스럽다보니 파생상품펀드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며 "증시 약세를 타고 파생상품펀드에 특화된 중소형 운용사들이 짝퉁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김기훈 기자 core81@

‘웍더독’ 경계령

프로그램 매도에서 매수 급반전에 코스피 ‘출렁’

수급불안에 프로그램 영향력 커져-소액투자자 주의해야

17일 증시에서는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인 주가를 쥐락펴락하는 ‘웍더독(wag the dog)’ 장세가 연출됐다. 웍더독이란 꼬리(선물시장)가 몸통(현물시장)을 흔드는 것으로 선물매매가 코스피지수 등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이날 웍더독을 유발한 것은 외국인이었다. 외국인은 장 초반 코스피200선물을 1500계약 정도 팔아치우며 선물가격을 4.32% 하락한 137까지 끌어내렸다. 이로 인해 베이스스(선·현물 가격차)가 악화되면서 프로그램 차익거래 매물이 쏟아졌다.

차익거래는 1900억원 가까운 순매도를 보여 증시를 압박했다. 코스피지수는 단숨에 1050선까지 밀렸다.

프로그램 차익거래는 고평가된 선물을 팔고 현물 주식을 사들여 위험 없이 수익을 내는 거래 방식이다.

오후 들어 외국인은 선물을 사기 시작했다. 오후 1시께 매수 우위로 전환하더니 한때 1200계약 넘게 순매수했다. 이에 따라 베이스스가 확대되면서 이번엔 차익거래 매수세가 대거 유입됐다. 오후 2시께 차익거래는 2300억원 순매수를 기록했다. 이처럼 프로그램 매수세가 강화되자 코스피지수는 1100선을 넘어서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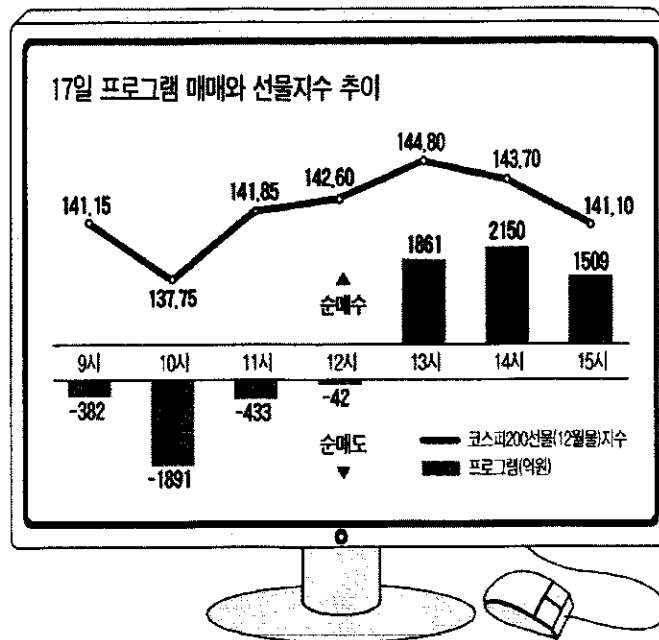
웍더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오후 2시30분 외국인은 또다시 선물 순매도를 보였고 프로그램 차익거래도 순매수 규모를 줄였다. 프로그램은 결국 차익거래(541억원)와 비차익거래

(968억원)를 합쳐 1509억원 순매수를 나타냈다. 코스피지수도 등락을 거듭한 끝에 9.94포인트(0.91%) 내린 1078.32에 장을 마쳤다.

이처럼 하루종일 외국인 선물 매매로 증시가 요동치자 ‘웍더독 경계령’이 내려졌다. 이선엽 국모닝신한증권 연구원은 “거래가 많지 않아 프로그램 매매가 쉽게 현물시장을 뒤흔들고 있다”며 “소액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수급구조가 취약해 당분간 프로그램 매매가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승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읍선 만기일이던 지난 13일과 14일 프로그램 매수차익 잔액이 각각 6800억원과 1000억원 줄어 들어 이달 10~12일 유입된 차



익거래 물량이 대부분 빠져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최대 1조4000억원가량의 차익거래 매수세가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내다봤다.

이에따라 장중 변동성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주현 현대증권 연구원은 “장중 외국인의 베이스스 지배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어 외국인 선물 매매에 따른 지수 출렁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문 연구원은 “실제로 선물의 고가와 저가 차이를 코스피200지수의 고가와 저가 차이로 나눈 ‘반응배수’가 이달 초엔 평균 1배 미만이었지만 최근 1.05배 이상으로 커져 베이스스 등락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장중에 프로그램 매매로 인한 현물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장경명 기자 longrun@hankyung.com

외국인 주식지분 28%대로 떨어져

2000년 10월 이후 최저

외국인의 '셀 코리아(Sell Korea)'가 이어지면서 이들의 주식 지분율이 2000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29% 밑으로 떨어졌다. 외국인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식을 매도, 현금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어 연말을 앞둔 증시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관련기사 A27면

17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모두 160조2553억원어치의 주식을 보유, 시가총액 대비 지분율이 28.98%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2000년 10월(28.21%) 이후 최저치다.

외국인 지분율은 2004년 4월 44.12%까지 올라갔다가 이후 감소해 지난달 말에는 30% 밑으로 떨어졌다. 외국인은 올 들어 총 34조 4300억원 상당의 주식을 팔아 현금을 조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매도 공세는 한국 증시가 다른 이머징마켓보다 유동성이 커 주식을 팔기가 쉽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선엽 국토농신한증권 연구원은 "우리 증시는 주가가 급락하면 연기금이 방어에 나서는데 다른 시장보다 외국인이 주식을 매도하게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

연말까지 헤지펀드 청산물량 봇물

외국인 지분율 20%로 줄 땐 추가매물 50조 추산

채권자금도 대거 이탈 예상

외국인의 주식 지분율이 2000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29% 밑으로 떨어지면서 앞으로 외국인 매물이 얼마나 추가로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증시 일각에서는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 주식 비중이 중장기적으로 20%까지 떨어져 50조원가량이 추가로 국내에서 빠져나갈 것이라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내 증권사 한 사장은 17일 "홍콩의 외국계 대형 운용사들은 외국인 지분율이 1차적으로 25%까지 줄어든 후 추가로 20%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25%로 떨어질 경우 25조원, 20%까지 낮아지면 50조원 정도가 추가로 매물화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전문가들도 해외 금융업체들이 연말 결산을 앞두고 현금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데다 이들이 투명한 헤지펀드의 청산 매물까지 가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승현 토러스증권 리서치센터

외국인 투자자금 추가 이탈 추정 규모

	지분율	이탈 규모
주식	25%	25조원
	20%	50조원
채권	5%(연초수준)	6조원
	2.5%(1년전 수준)	28조원

*현재 외국인 지분율은 주식 28.98%, 채권은 5.74%임

장은 "해외 금융업체들이 연말 위험자산비율을 맞추기 위해 유동성이 풍부한 한국시장에서 주식을 대거 정리하고 있다"며 "적어도 내달 초까지는 현금화를 위한 매물이 계속 흘러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학주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헤지펀드 청산 결정이 결산일 4~6주 전까지 진행된다고 보면 이번달과 내달 초는 수익률 부진으로 청산될 헤지펀드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세계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에 따라 해외 뮤추얼펀드 자금이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점도 외국인 순매도 지속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11월 첫주 15주 만에 순유입을 보였던 한국 관련 해외 뮤추얼펀드는 지난주(11월6~12일) 2억

9400만달러가 빠져나가 재차 유출세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였다.

안승원 UBS 주식영업부 전무는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이 이미 징 증시 평균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한국 증시를 부정적으로 보는 롱(long) 펀드들의 '팔자'까지 나오고 있어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50조원가량의 추가 매도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채권시장에서도 외국인 매물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김상훈 현대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위가 완전히 진정될 때까지는 채권시장의 외국인 매도도 지속될 것"이라며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이 1년 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이 보유한 채권은 지난 주말 기준으로 852조원인 전체 채권시장 시총의 5.7%인 49조원으로 비중이 1년 전인 2.5%대로 낮아질 경우 28조원 상당의 자금이 이탈할 것으로 추산된다.

서정현/강지연 기자 ceoseo@hankyung.com

파생상품 시가평가 유예 검토

G20 국제 동시적용 논의... 브라질·英·韓 내년3월 초안마련

금융위기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장외거래(OTC) 파생상품의 '시가평가'(mark-to-market)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논의된다. 이 경우 부실한 파생상품을 가진 금융회사들은 그 평가손실을 분기 말에 즉시 손실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관련기사 4면**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 정상은 지난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금융정상회의에서 CDS 등 장외거래 파생상품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다는 내용의 이행계획에 합의했다. 세부방안은 올해 의장국인 브라질, 내년 의장국인 영국, 2010년 의장국인 한국이 논의해 내년 3월31일 전까지 작성한다.

최종구 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현재 상황에서 시가평가 방식은 위험하다는 게 G20 정상회의에서 모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전세계적 금융위기로 시가평가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금융사들이 전문학적 규모의 당기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이같은 논의의 주된 배경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등 선진국이 시가평가 유예방안을 채택하고 이것이 G20 합의 등을 거쳐 국제기준으로 굳어지면 한국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상장사 등에 대한 시가평가 유예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국제회계기준이 시가평가를 유예하는 쪽으로 정리된다면 우리나라도 조속히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파생상품의 시가평가 유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어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시가평가를 유예하면 금융시장의 신뢰도가 더욱 떨어질 우려가 있고 앞으로 자산을 처분할 때 누적된 손실을 한꺼번에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상배 기자 ppark@

미국의 위기

■ 파생상품 시가평가 유예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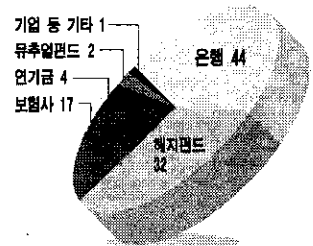
세계경제 동반몰락 막기 손실처리 유예 극약처방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장외거래(OTC) 파생상품의 '시가평가'(mark-to-market) 유예방안은 세계경제의 몰락을 막기 위한 일종의 '극약처방'이다. 시가평가는 자산가치를 시세대로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방식인데 이를 유예하면 시가평가에 따른 대규모 손실을 피할 수 있다. 전세계 금융회사의 연쇄 파산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회계투명성을 희생하자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뛰어나지만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저하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불가피한 사안이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불안이 더욱 거세지면 '교육지책'으로 도입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제2 리먼 사태의 '뇌관' = 지난날 6월 미국 하원이 70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안을 통과시킬 때 마지막까지 논란이 된 이슈가 시가평가다. 많은 의

전세계 CDS 부도위험 보장자 비중
(단위: %, 출처: 크레디트사이트 추정)



미결제잔액은 약 55조달러에 달한다. 지난해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규모 54조6000억달러(미국 중앙정보국 추정)와 맞먹는 수준이다.

지난 9월 CDS시장의 4대 큰손이던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자 '거래상대방 위험'(카운터파트 리스크)이 급증하면서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CDS프리미엄이 치솟았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평가가 그

단기 금융안정 효과는 크지만 신뢰저하 부작용

미결제잔액 55조弗 CDS '제2 리먼사태' 뇌관

원이 구제금융안 처리조건으로 시가평가 유예를 요구했다. 금융사들에 대한 시가평가 회계가 '제2 리먼브러더스' 사태를 몰고올 수 있는 '뇌관'이라는 인식에서였다. 실제로 지난 9월15일 파산보호를 신청한 리먼의 경우 시가평가가 직격탄이 됐다. 파산보호 직전에 발표된 리먼의 3분기 순손실은 39억달러. 시가평가로 인한 손실이 78억달러로 다른 이익을 모두 갉아먹고도 남았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시가평가 유예에 유보적 입장을 보이면서 결국 미국 의회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시가평가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핵심은 CDS=현재 시가평가 회계가 가장 큰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는 CDS시장이다. CDS는 채권의 부도 위험만 때내 거래하는 파생상품으로 그 위험을 떠안은 쪽은 위험부담의 대가로 일종의 보험료(프리미엄)를 받는다. 일종의 '부도위험 보험'인 셈이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전세계 CDS의

대도 적용되면 CDS에 대해 상당한 규모의 당기손실 처리가 불가피하다.

◇'신뢰 훼손 우려' = 주요 20개국(G20) 회담의 3대 의장국 중 하나인 한국은 영국 브라질과 함께 내년 3월 말까지 시가평가 유예를 포함한 파생상품의 위험을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해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4월 열리는 G20회의에서 시가평가를 일시 유예하는 제도를 채택하기로 합의하면 전세계가 이를 도입하게 된다.

미국 및 유럽 선진국들이 시가평가 유예를 선택할 경우에도 국제기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원회는 주요 선진국이 허용할 경우에 한해 한국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가평가를 유예할 경우 회계투명성 저하에 따른 금융시장의 신뢰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시가평가 유예는 사실상 손실을 숨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가뜩이나 금융시장에서 신뢰가 무너져 어려움을 겪는데, 상황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배 기자 ppark@

미국의 위기

증시 당분간 '이벤트 공백'

전문가 "국내외 경제지표 눈여겨보아야"

글로벌 금융시장은 지난 주말 G20 정상회담을 끝으로 당분간 '이벤트 공백기'를 맞을 전망이다.

통화스와프,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리인하, 주요 국가의 정상회담 같은 굵직한 호재가 나오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애기다. 이에 따라 주가 변동성만 크고 방향성을 가늠하기 힘든 장세가 펼쳐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17일 "G20회담은 총론만 있고 구체적인 합의가 부족해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았지만 20개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이벤트였다"고 분석했다.

박 위원은 "다음 주 초 미의회에서 자동차 '빅3'에 대한 구제방안과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 등 민주당이 주장하는 제2차 경기부양안 논의가 가시화되면 이벤트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부시 행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인 이상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에 따라 당분간 국내외 이벤트가 없을 것으로 보여 글로벌 펀더멘털(기초체력) 악화 우려감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대형 이벤트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국내외 경제지표들을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중국 부동산 관련 지표, 미국의 주택착공 실적, 국내 건설사들과 대주단 간 자율협약 등이 경기 침체 심화 여부와 부동산 경기 회복 가능성 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가 될 것으로 꼽히고 있다.

박 위원은 "미국의 경우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등 최대 소비시즌을 앞두고 10월 소매판매가 1992년 이후 가장 크게 감소했다"며 "소매·산업·제조업 관련 지표들의 전망도 좋지 않아 글로벌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해경 기자 selenmoon@hankyung.com

매일경제

2008년 11월 18일 화요일 A22면 16.8 x 10.5 cm

액면가 밑도는 저가주 속출

작년 3.2%서 17.2%로

주가 액면가 밑으로 떨어진 '절대 저가주'가 증가하고 있다.

17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액면가를 밑돌고 있는 주식은 총 121개로 전체 상장종목 대비 17.2%에 달한다. 이는 2006년 6.1%, 지난해 3.2%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김학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주가 선행성이라는 측면에서 절대 저가주가 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징후가 아니다"며 "주가 자체가 시장 효율성을 반영하고 있다면 주가가 액면가를 밑돈다는 것은 영속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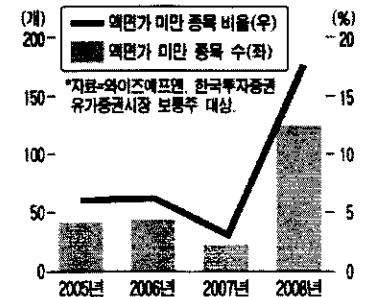
으로 존속하기 어렵다는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요즘 같은 신용경색 상황에서는 주가 자체가 투자자들에게 또 다른 악재에 대한 많은 연상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가의 절대 레벨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절대 저가주 121개 종목 가운데 시가총액 101~300억원 중형주가 20개 종목이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주가 액면가 아래로 떨어졌다고 해서 다 위험기업은 아니지만 최근 글로벌 신용경색을 거치면서 저가주가 크게 늘었다는 것은 개별 기

늘어나는 저가주



업들 재무 리스크가 높아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김영근 한화증권 연구원은 "올해 들어 양산된 저가주에는 주가가 급락하면서 키코 관련 기업과 같이 특정 테마로 빠진 업체와 유동성 우려를 겪고 있는 그룹주에 포함돼 동반 하락한 종목 등 이슈에 의해 빠진 종목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정환 기자

외국인들 왜 주식 파나 했더니 ... 'Z값' 때문

금융위기 땐 PER·ROE 등 기존 잣대 안 믿어

(주가수익비율) (자기자본수익률)

기업이 진 빛과 현금 비교한 '부도 확률' 지표 애용

한국 경제에 대한 안팎의 평가가 크게 엇갈린다. 안에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다. 외환위기 때와 달리 한국 기업들은 빚도 적고 돈도 잘 번다. 경기 침체로 수출이 줄 전망이지만 경쟁국과 비교하면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 게다가 증시 침체에다 환율 상승으로 달러 기준 주가는 전보다 눈에 띄게 싸졌다.

그런데도 외국인들은 색안경을 끼고 본다. 특히 외국계 증권사들은 국내 기업의 투자 등급을 깎아 내리기에 바쁘다. 외국인의 매도 행진도 좀처럼 그칠 줄을 모른다. 도대체 이런 시각차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잣대가 바뀌었다**=각국 정부의 정책공조로 일단 10월의 주가 대폭락은 멈췄다. 그러나 아직 최악의 상황

을 벗어난 건 아니라는 게 글로벌 투자은행(IB)의 시각이다. 이럴 땐 곳곳에 산재한 지뢰를 피하는 게 투자의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된다.

보통 땐 주식을 고르는 기준이 수익성에 집중된다. 영업이익은 얼마나 늘고, 자본을 투입하면 얼마나 돈을 버는지가 주된 관심사다. 주당순이익(EPS)·자기자본수익률(ROE)·주가수익비율(PER)·주가순자산비율(PBR)이 중요한 지표로 쓰이는 이유다. 이런 지표를 만족하는 종목은 대부분 성장지향적인 기업이다.

그러나 요즘 같은 비상 상황에선 이런 지표가 무의미해진다는 게 외국인의 시각이다. 노무라증권은 지난달 말 배포한 보고서에서 "우리는 투자자들

에게 PER과 같은 지표는 당장 집어치우라고 권유한다"고 밝혔다. 대신 기업이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얼마나 큰지에 초점을 맞추라고 조언한다. 시장을 보는 틀 자체가 달라졌다는 얘기다.

◆**"한국은 위험 지역"**=글로벌 IB들이 신용위험 지표로 애용하는 게 'Z값'이다. 이는 유동성 비율과 경영·채무 안정성, 영업활동을 하나의 수치로 표현한 지표다. 총자산 대비 운전자본·이익잉여금·세전이익·매출액의 비율과 총부채 대비 시가총액 비율에 가중치를 줘 구한다. 쉽게 말해 기업이 진 빛과 보유하고 있거나 벌어들인 현금을 비교해 부도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는 지표다.

이 값이 3.0 이상이면 건강하고, 1.8 이하면 위험한 기업으로 분류한다. 대신증권 기업분석부 빌 훈세이커 부장은 "특히 신용경색의 시기에는 현실과 잘 부합하는 것으로 검증된 지표"라고 소개했다.

이 잣대를 들이대면 한국은 결코 안전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는 게 외국인의 평가다. 노무라증권이 300여 개 아시아 기업의 Z값을 구해 본 결과 한국 기업의 30%가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이 비율은 말레이시아 다음으로 높다.

노무라증권은 "한국은 전체적으로 부채 조정이 필요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우리가 아무리 PER이 낮아 주가가 싸고, 이익 전망이 좋다고 주장해도 판단 기준이 다른 사람에겐 쇠귀에 경 읽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건강 기업의 조건**=Z값이 높은 회사는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이 게 위기를 버틸 수 있는 특별한 무

기가 된다. 대신증권이 국내 상장기업을 분석해 본 결과 Z값이 높은 회사는 빛이 거의 없었다. 당연히 단기부채도 거의 없다. 자산도 현금성은 많은 반면 받을 어음 같은 불확실한 자산은 적었다. 특이한 점은 채권 등급도 없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빚을 싫어한 나머지 채권을 발행한 적이 없어서다. 디존 디지털웨어와 크레듀·메가스터디·LG·엔씨소프트 등이 이런 회사로 꼽혔다.

최현철 기자

chdck@joongang.co.kr



◆**Z값**=미국의 경제학자 에드워드 알트만 교수가 부도 예측을 위해 만든 모형. 기업의 총자산 대비 운전자본·이익잉여금·세전이익·매출액의 비율과 총부채 대비 시가총액 비율에 가중치를 줘 구한다. 3.0 이상이면 건강하고 1.8 이하면 부도위험이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

사라지는 무상증자 '무슨 일?'

4분기들어 불과 3곳 공시 증시하락·경기침체 원인

코스닥시장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상장사들의 무상증자가 점차 그 자취를 감추고 있다.

무상증자란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재평가 적립금 및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등을 이사회 결의에 따라 자본으로 전입해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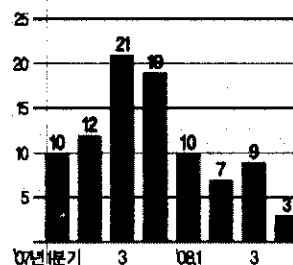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4분기 들어 무상증자 결정을 공시한 코스닥상장사는 3곳.

이는 전년 같은 기간(6건)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 4분기 절반을 넘긴 상황에서 이번 분기에 무상증자를 선언한 상장사의 수는 지난해 동기(19건)의 6분의 1에 그쳤다.

지난 3·4분기에도 9건으로 전년 동기(21건)에 비해 57.14% 줄었다.

올해 1·4분기 10개 코스닥 상장사가 무상증자를 결정한 이후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 무상증자 추이
(단위:건)



※ 2008년 4분기는 11월17일까지의 수치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지난해 62개 코스닥 상장사가 무상증자를 공시한 반면 올해는 절반 수준인 단 29개사만이 이를 결정했다. 코스닥 폭락세 및 국내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무상증자를 결정하는 상장사도 급감하고 있는 것이다.

코스닥시장 하락세로 유동성 확보가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며 상장사들의 무상증자가 크게 줄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코스닥시장의 침체 속에서 무상증자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해 봤자 큰 효과를 볼 수 없어 무상증자가 크게 감소했

다는 분석이다.

또 미래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사내재원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무상증자 실시를 꺼리고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하나대투증권 이영근 투자정보팀장은 "무상증자의 급감은 현재의 국내증시 상황과 관련이 깊다"며 "잇따라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시장에서 유동성을 증가시켜 봐야 상승세를 이끌기보다는 물량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무상증자를 꺼리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의 기업들이 무상증자로 유동성을 증가시키기보다 향후에 대비하고 있다"며 "무상증자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G투자증권 서정광 투자전략팀장도 "상장사들이 무상증자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향후에 대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현재 대부분 상장사들은 무리하게 무상증자를 시행하기보다 향후 신사업 및 설비투자 등에 대비해 현금보유량을 늘려 가고 있다"고 말했다. **■안현덕기자**

東亞日報

2008년 11월 18일 화요일 B02면

증권사 영업점 펀드판매교육 강화

투자자 집단소송 대책 부심... '불완전 판매' 예방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에 대한 집단 소송 움직임이 투자자들 사이에 확산되면서 상품을 판매한 증권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증권사들은 영업점 직원 상대로 교육을 강화하거나 자체 판매규정을 보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우리투자증권은 지난달 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지점의 컴플라이언스 매니저를 대상으로 금융상품 판매에 대해 교육을 했다. 컴플라이언스 매니저는 금융상품 판매 시 제공하는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가 적절한지 점검하는 일을 맡는다. 이 증권사는 다음달부터 펀드 등 특정 금융상품에 대

한 교육을 받은 직원만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상품교육 인증 시스템'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우증권은 지난달부터 '미스터 리 쇼핑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객을 가장한 직원이 영업점에서 직접 투자 상품에 가입해 투자 권유가 적절한지 평가하는 제도다.

하나대투증권은 이달 10일 실무자 회의를 열어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임직원 교육용 자료집을 발간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농신한증권은 금융감독원에서 제시한 '표준판매 매뉴얼'을 기준으로 '펀드판매 매뉴얼'을 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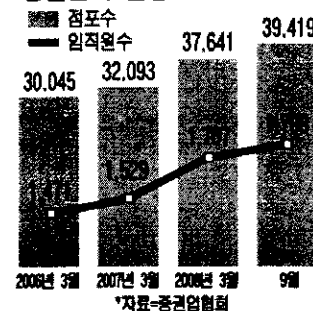
중이다.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고객의 성향과 펀드상품의 위험도를 분류하고, 판매 제도, 교육에 대한 내용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서현 기자 balika7@donga.com

지난 2년 새 몸집을 2배 넘게 키워온 미래에셋증권이 17일 수익성이 낮은 지점 20개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하나대투증권은 26개 지점을 출장소로 전환했고, 동양종합금융증권은 최근 3개 점포를 통·폐합했다. 내년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시행과 증시 활황, 증권사 신설 등에 힘입어 2년 새 '스카웃 경쟁'을 벌이며 몸집 불리기에 나섰던 증권사들이 최근 거꾸로 몸집을 줄이고 있다. 일부는 은밀히 '구조조정계획'을 세워놓은 채 노조와 다른 증권사들 눈치만 살피고 있는 실정이다.



증권업계 현황 (단위=명·개)



몸불리던 증권사 '다이어트' 나섰다

**미래에셋證 低수익성 점포 20개 폐쇄
하나대투·동양종금證도 조직 슬림화**

17일까지 150여 명의 명예퇴직을 받은 하나대투증권에 이어 명예퇴직 형식의 구조조정 바람이 불 것이라는 추측이 증권가에 난무하다.

구조조정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들 회사 측은 한결같이 "절대 계획이 없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주식 시장에 한파가 몰아치면서 증시 활황 붐을 타고 2년 새 늘어난 1만명의 인력과 신설된 점포 320여 개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실적 악화로 국내 10대 증권사들의 상반기(4~9월) 영업 이익이 66.12% 급감하면서 생존 경쟁이 새로운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3월 말 결산일 기준 53개 증권사 3만45명에 달했던 임직원 수를 11월 현재 63개 증권사 3만9419명으로 2년 새 9374명이 늘어 31.2%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53개 증권사 1471개에 그쳤던 점포 수는 점포 확장 경쟁에 힘입어 63개 증권사 1798개로 327개(22.2%)나 늘었다. 이 사이 미래에셋증권은 105개(22.3%)나 점포를 신설해 47곳을 152곳으로 늘렸고, 동양종합금융증권도 81개(95.3%) 증설해 166개로 늘었다.

하지만 증권사 수익을 창출해 줄 것으로 믿었던 점포와 임직원들이 증권사 실적 악화와 겹쳐 비용으로 전락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점포 한 곳을 운영하는 데 연간 10억~30억원의 비용이 든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점포 증설 경쟁으로 최대 1조원 가량의 적자 점포 부담이 증권 업

계에 떨어지고 있는 셈"이라며 "점포 개설 뒤 손익분기점에 이르는 데 통상 2~3년 걸리기 때문에 최근 증설된 300개 이상의 점포는 대부분 적자 상태라고 봐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 증원 바람이 시작된 것은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부터다. 증권업계는 2006회계연도에 2048명을 뽑은 데 이어 2007회계연도에 5548명을 증원에 전체 인력이 17% 늘었다.

이어 지난 5월 금융위원회가 6년여 만에 신규 증권사 설립을 허가하면서 KTB투자증권과 IBK투자증권 등 8개 신설 증권사가 '인력 스카웃 전쟁'을 통해 828명을 더 충원했다. 최은수 기자

JP모간, 하나금융 보고서 수정했다

금감원 주의 받고 NPL 수치 4.76%→1.68%

하나금융, 스톡옵션 반납·감원 등 자구노력

하나금융지주와 JP모간증권의 대립이 일단 JP모간 측 후퇴로 소강 국면에 들어섰다.

JP모간증권은 하나금융지주에 불리한 보고서를 써서 하나지주 측과 갈등을 빚어왔지만 이례적으로 해명(Clarification) 보고서를 17일자로 냈다. ▶17일자 A1·5면 참고

이는 금융감독원이 비공식적으로 JP모간 측에 '무수익여신(NPL)이란 용어를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라'는 주의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지주는 그러나 최근 주가 하락을 놓고 JP모간증권의 부정적 보고서 탓만 하고 있을 처지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하나지주는 더 근본적인 것은 시장 신뢰 문제라는 판단 아래 증자, 스톡옵션 회수, 임원 감축 등 추가적인 자구노력을 계획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의 자구노력과 JP모간증권의 해명이 겹쳐진 17일 이 회사 주가는 13.4% 오른 1만6500원에 마감했다.

◆“정부당국이 정의하는 NPL은 1.68%”

JP모간증권은 17일 발간한 해명 보고서에서 '정부당국이 정의하는 무수익여신 비율은 1.68%가 맞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쓴 사람은 최근 하나금융지주의

NPL이 4.76%라고 밝힌 보고서 집필자와 같은 필진 그룹의 한 명이다.

지난 2일과 6일 각각 발표한 JP모간의 보고서에는 하나금융지주의 NPL 비율은 요주의 이하여신 비율로 판단했을 때 전분기 3.75%에서 3분기에 4.7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하나금융지주는 “이 같은 산출 방식은 NPL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처럼 보이는 혼란을 초래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금기야 금융감독원도 “NPL이란 용어는 감독당국이 규정하는 ‘고정이하여신’으로 보통 분류하는 경향이 있으니 그 범용성을 생각해 주의해서 사용하라”고 비공식 주의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증권업계는 NPL 비율이라는 용어를 ‘고정이하여신비율’로만 한정해서 쓰라는 법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JP모간증권도 ‘정부당국이 정의하는 NPL 비율이 1.68%’라며 단서를 달았다.

◆하나금융지주 자구노력

하나지주는 태산LCD와 파생상품 계약으로 이미 2000억원이 넘는 평가손실이 났지만 환율이 하락하지 않는 한 추가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시장의 전망이 있다. 일부 악성 투머이

2008년 11월 6일자 내용 중

달라진 JP모간 하나금융지주 보고서

...growth made in 2006 (+46.1%), persistently evidenced by rising NPL ratio (Precautionary and below) in SME loan segment (from 3.75% in 2Q08 to 4.76% in 3Q08). However, we have become more concerned on...

“중소기업 대출의 NPL 비율(요주의 이하)이 2분기 3.75%에서 3분기 4.76%로 상승해...”

2008년 11월 17일자 내용 중

• The regulatory NPL ratio for SME loans: The regulatory NPL ratio of SME loans at Hana Bank, which includes substandard and below loans, is 1.68% as of 3Q08, 1.28% as of 2Q08, and 1.19% as of 3Q07...

“하나은행 중소기업 대출에서 정부당국이 정의하는 NPL 비율이 2분기 1.28%에서 3분기 1.68%로 변화...”

긴 하지만 자금이탈설 등이 난무하며 그만큼 시장의 신뢰를 못얻고 있는 것에 대해 하나지주는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하나지주는 18일 이사회를 열어 1조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통한 하나은행의 유상증자와 5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 자본비율을 높여 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추가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구책이다.

또 하나지주 관계자는 “임원 임금 10%를 삭감한 데 이어 지난주 이사회에서 2008년에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나지주는 지난 3월 김승유 회장 8만주 등 임직원 203명에게 총 164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한 바 있다. 또 하나지주는 연말 정기인사 이전에 추가적으로 임원을 교체할 계획이다.

이미 하나대투증권에선 200여 명의 인원이 감축될 것이라 예상 속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 앞서 태산LCD와 파생상품 계약에 따른 평가손실 발생으로 이미 2명의 임원이 해임됐다.

하나지주는 이처럼 ‘고난의 행군’을 본격화하며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나지주 관계자는 “추가적인 자구책이라면 결국 인원이나 점포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하나금융에서 투자은행(IB) 부문을 담당했던 이찬근 하나IB증권 대표와 장하원 하나금융연구소장이 회사를 떠났다.

임성현 기자

갈등 부른 NPL 비율이란

하나금융지주와 JP모간증권 간 대립의 발단은 무수익여신(NPL) 비율이다. NPL(Non Performing Loan)은 부실대출금과 부실 지급보증액을 합친 것으로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뜻한다.

은행 대출의 건전성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가지로 구분된다. '고정' 이상 여신은 담보를 확보해 돈 상태로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대출금이다.

보통 3개월 이상 연체된 여신을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한다.

금융감

독원에서

는 NPL

비율을 고

정이하 여

신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가 JP모간의 보고서를 문제삼은 이유는 JP모간이 통상적인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아닌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요주의 이하 여신 비율을 기준으로 NPL 비율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하나지주의 경우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1.68%에 불과하지만 요주의 이하 여신 비율은 4.76%에 달한다. 하나지주는 또 이런 JP모간증권의 처리가 다른 은행과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나지주 관계자는 "지금까지 하

나지주에 적용해 왔던 기준은 물론 같은 기간에 다른 금융사에 적용한 기준과 달리 하나지주에만 요주의 이하 여신 비율을 적용했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NPL 비율에 반드시 고정이하 여신만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금융감독 당국의 리스크 관리 편의상 지정된 용어일 뿐 은행의 부실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때그때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때는 NPL

이 어떻게

산출된 것

인지를 정

확하고 오해없이 밝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JP모간이 이에 대해 소홀했을 수 있다는 것이 증권업계의 시각이다.

한편 '정상' 여신은 말 그대로 충분히 회수가 가능한 양호한 대출을 뜻한다. '요주의' 여신은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됐을 경우다.

반면 '고정' 이하 연체 중 담보가 있어 회수가 가능하면 '고정', 담보가 없어 돈을 떼일 우려가 크면 '회수의문',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 손실처리하는 여신은 '추정손실'로 분류된다.

임성현 기자

회수 가능성이 낮은 부실채권 비율로

금융기관 건전성과는 반대로 움직여

금융위기에 피멍든 금융사

리먼·태산LCD관련 수천억 손실 반영... 7~9월 실적 타격

금융사들의 7~9월 실적 집계 속속 이뤄지는 가운데 미국발 금융위기와 국내 경기침체의 상충들이 재무제표에 속속 반영돼 혼적을 남기고 있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은 파생상품 투자 손실, 대출 부실화 우려, 출자지분 손실 등을 7~9월 실적에 연이어 반영했다.

한국금융지주는 주력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부실 반영으로 7~9월 실적이 적자 전환했다. 한국증권은 리먼브러더스와 관련된 신용연계증권(CLN) 1690억원 중 1284억원을 7~9월에 손실로 반영했다. 주기연계증권(ELS) 등 신종증권 판매수수료가 급감하면서 순이자수익이 감소한 것 등도 부진한 실적의 원인이었다. 푸르덴셜투자증권은 "한국증권이 리먼 관련 CLN의 78%를 손실처리했다"며 "한국금융지주도 저축은행과 한국증권의 자기자본투자(PFI)로 보유한 2715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I) 여신이 부실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지주는 하나은행의 태산

금융사 7~9월 감액손실·충당금 적립 현황

회사	내용
한국금융지주	리먼브러더스 관련 CLN 손실 1284억 반영 계열사 PFI투자 중 PFI여신 2700억도 일부 우려
하나금융지주	태산LCD 관련 부실 2507억 반영
신한지주	리먼 관련 784억 감액손실 처리 태산LCD 관련 부실 733억 반영
우리금융지주	파생상품 손실 4179억 반영 C&그룹, 태산LCD 관련 450억 충당금
미래에셋증권	리먼 관련 ELS 가액손실 68억 반영 홍콩 현지법인 자본금 손실 40억

(자료: 주요 증권사 보고서, 전자공시)

LCD 대출과 통화옵션 상품과 관련한 부실을 대거 반영했다. 하나은행은 태산LCD와 관련해 대출 354억원의 50%인 177억원과 통화옵션 시가 평가 관련 금액 4660억원의 50%인 2333억원 등 모두 2507억원을 충당금이나 감액손실 등의 방법으로 처리했다.

유진투자증권은 태산LCD 관련 충당금은 환율이 하락 안정되면 환입이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신한지주도 리먼브러더스와 태산LCD 관련 손실을 연이어 반영했다. 신한지주는 리먼 관련 손실(국토부

신한증권의 CLN 투자 등) 총 904억원 중 787억원을 감액손실 처리했다. 나머지도 화수문의문으로 분류해 충당금을 적립했다. 또 태산LCD 관련 손실에 733억원을 반영했다.

우리금융지주는 파생상품 손실과 C&그룹, 태산LCD 여신 등이 수익에 악영향을 줬다. 파생상품(CDO, CDS) 손실은 4179억원에 달하고 C&그룹 관련 여신에 대해서도 357억원의 충당금을 쌓았다. 태산LCD 여신에 대해서도 100억원의 충당금 전입이 있었다.

미래에셋증권도 파생상품 관련 손실과 해외법인 관련 지분법 평가손이 반영됐다. 대우증권은 "리먼브러더스 대상 FLS 거래 손실(69억원)과 홍콩 현지법인 등의 지분법 손실(48억원)이 중첩되면서 미래에셋증권의 7~9월 영업의 손실이 60억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환율 안정과 미국의 금융위기 진정 등에 따라 손실로 처리된 부분의 규모가 일부 줄어들 수 있지만 기업부실, PFI대출 관련 손실 등으로 실적이 여전히 불투명한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배성민 기자 baesm@

한국경제

2008년 11월 18일 화요일 A01면 16.0 x 11.2 cm

정부 달러 풀어봤자... 외국계은행이 절반 가져가

국내銀, 입찰제 폐지 주장

한국은행이 국내 은행의 외화 유동성 지원을 위해 방출하는 달러의 절반가량을 외국계 은행 서울지점이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은행들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금리 입찰 제도를 없애고 달러가 필요한 곳에 직접 투입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기사 A5면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은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네 차례 실시한 달러 스와프 입찰에서 모두 67억2000만달러의 방출이 이

뤄졌으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을 외은 지점이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달 4일 이뤄진 3차 입찰에서는 국내 은행이 낙찰받은 달러가 4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A은행은 지금까지 네 차례의 입찰에서 단 1달러도 배정받지 못했으며 B은행은 이달로 끝난 1차 때만 달러를 받았을 뿐이다. 한은이 달러를 풀었는데도 시중은행들은 달러가 모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다.

국내 은행 관계자들은 한은이 높은 금리를 써낸 곳에 우선 배정하는

방식(금리 경쟁 입찰)으로 달러를 방출하다 보니 고금리 작전을 쓴 외은 지점이 물량을 대거 받아가 이 같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은 지점이 높은 금리를 마다하지 않고 적어내고 있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과 맺은 통화스와프 계약에 따라 외국인들의 국내 매도대금을 달러로 바꿔주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한은의 달러 방출이 외국인들의 국내 매도 후 달러 환전 및 본국 송환에 쓰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은은 "달러 방출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낙찰금리도 시장금리보다 높지 않은 만큼 달러가 급하면 국내 은행도 높은 금리를 써내면 된다"는 입장이다.

백준동/주용복 기자 jdpower@hankyung.com

국내 은행 “한은 방출 달러는 그림의 떡” 하소연

4차례 입찰에 1弗도 못받은 곳 있어

“필요한 은행에 직접 투입 해야” 주장
한은 “달러 가져가려면 금리 더 써라”

한국은행의 금리 경쟁 입찰 방식 달러 공급이 도마에 올랐다. 국내 은행의 외화자금 사정 개선을 위해 실시한 달러 방출에서 월등히 높은 금리를 써내는 외국계 은행 서울지점이 절반가량을 가져가버려 정작 달러가 절실한 국내 은행에는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은행은 이런 상태가 이어지면 외국계가 외환보유액에서 방출되는 달러를 ‘싸쓸이’해 갈 것이라며 국내 은행에 직접 배정해 주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은은 경쟁 입찰은 시장친화적이며 외은 지점이 달러를 가져가도 시장 전체적으로 달러 유동성이 늘어나는 효과가 같은 만큼 문제가 없

다는 입장이다.

◆달러 어떻게 공급되길래

외환당국은 달러자금 경색을 풀기 위해 두 가지 방식으로 달러를 공급해 오고 있다. 하나는 수출입 은행을 통하거나 한은이 직접 국내 은행의 수출환어음 매입자금을 대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한은이 외환 스와프를 통해 달러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은의 외환 스와프는 국내 은행이나 외은 지점 등이 원화를 맡기면 적절한 금리를 받고 달러를 빌려주는 형식이다.

한은은 지금까지 4차례의 입찰을 통해 총 67억2000만달러를 공급했다. 낙찰 금리는 △1차 연 8.23% △2차 연 9.02% △3차 연 9.64% △4차 연 9.59% 등이다. 낙

찰은 높은 금리를 써낸 순서대로 이뤄진다. 금융계에선 한은이 공급한 달러 중 절반가량을 외은 지점이 받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국내 은행은 한은의 달러 공급 자체가 국내 은행의 신규 차입 및 만기 연장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은행 위주로 달러 방출이 이뤄지는 것이 정책 목표가 되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한은이 고금리 입찰을 진행하다 보니 입찰에 참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한은은행 관계자는 “해외 은행과 힘들게 만기 연장 협상을 할 때도 금리는 LIBOR(런던 은행 간 대출금리)에 4~5% 정도를 더하는 수준”이라며 “한은이 은행을 지원한다면서 7%의 가산금리를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은이 공급하는 3개월물 달러의 리보금리는 연 2.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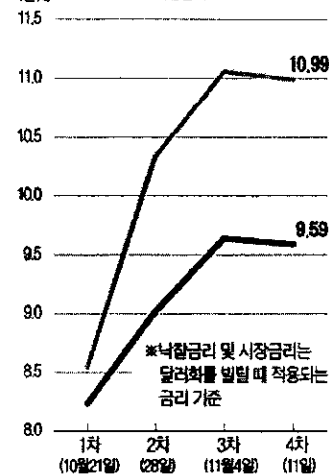
수준이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이렇게 높은 금리로 받아오면 수출 환어음 매입 등 기업에 나가는 금리는 가산금리가 10%를 넘게 된다”며 “기업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외은 지점이 고금리 입찰에 뛰어드는 것은 먼저 본점의 지원이 끊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기존 외국인투자자와 달러를 제공하겠다는 통화 스와프 거래를 맺었는데 이에 응하자면 고금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으며 일부 외은 지점은 조선업체의 신규 선물환 매도를 받아주는 용도로도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필요하면 더 적어내라”

한은은 국내 은행의 주장에 대해 “억지나 다름없다”는 반응이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의 외환 스와프는 국내 외화자금시장에 달러를 공급함으로써 꼬인 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며 무역금융 지원 등을 위해 국내 은행에 달러를

한국은행의 ‘달러 입찰’ 낙찰금리와 시장금리



공급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내 은행에 외환스와프를 우선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은에선 전반적으로 “국내 은행이 너무 한다”는 기류가 강하게 형성돼 있다. 스와프 시장에서 달러를 구하려면 조달 금리가 연 10%를 훨씬 웃도는데 한은의 공급 금리는 연 9% 수준이기 때문에 저렴하다는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일부 국내 은행의 입찰금리를 보면 가산금리가 2~3% 수준인데 이는 거저 먹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용석/백준동 기자 hohoboy@hankyung.com

“대주단가입 건설사 선별 지원”

은행권, 가능한 한 많은 업체 협약신청 유도키로

은행권이 보다 많은 건설회사들을 대주단 협약에 가입시키며 신규 자금을 선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연스레 구조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사중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17일 “은행들이 최근 여신 담당자 모임을 갖고 ‘금융권의 무차별적인 자금화수가 건설사의 연세 부도를 가져오고 이는 곧 금융권의 대규모 부실로 이어진다’는 인식 아래 가능한 한 많은 건설회사를 대주단 협약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7·17면

건설회사가 대주단 협약에 가입하면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가 1년간 자동 연장돼 자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

다. 대주단 가입으로 기존 채무의 만기가 연장되더라도 정상 채무로 분류되고 기존 대출금리가 올라가지 않는다. 은행권은 1년간 채권 행사를 유예하되 선별적으로 신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시장에서 자연스레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은행들은 이를 위해 삼성물산·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회사들을 포함해 시공능력 100위권 기업을 중심으로 대주단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은행들은 이번주 안에 상당수 건설회사들이 대주단 협약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건설업체가 부도·화의 상태가 아닌 한 대주단 가입을 신청할

경우 은행들은 이를 무조건 받아들이 수 밖에 없다”며 “가입은 모두 받아주지만 신규 자금 지원 대상은 심사를 통해 선별하기 때문에 우량기업과 부실기업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견·중소 건설회사들의 경우 대주단 협약 가입 신청과 함께 하청업체나 협력업체들이 현금결제나 채권회수를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로 가입을 꺼리는 만큼 대형 건설회사들이 먼저 대주단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주채권 은행이 나서서 대형 건설회사에 대한 대주단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은행권 “대주단가입 건설사 선별 지원” /

‘가입=부실업체’ 등식 깨기에 주력

은행들이 건설사들의 대주단 가입을 적극 유도하되 가입을 신청하면 모두 받아들이는 한편 신규 자금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은 대주단 가입과 추가 자금지원 문제를 분리함으로써 대주단 가입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은행권은 건설사들의 부채상환을 1년간 유예한 후 선별적인 추가 자금지원을 통해 유석을 가리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은행들은 일단 대형 건설사들의 대주단 가입을 성사시켜 ‘대주단 가입-부실 건설회사’라는 등식을 깨뜨리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그레야 중 소형사들도 하나둘씩 참여함으로써 은행입과 건설업의 상생전략이 성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업은 별다른 부담이 없다”고 말했다. 임 차장은 “대주단 가입은 ‘살생부’가 아니라 ‘상생부(相生簿)’를 만드는 것으로 정부도 은행권과 함께 건설회사의 조기가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부정적 인식’ ‘대형사 가입’ 등이 관건-은행들은 일단 건설회사들을 대주단에 가입시킨 후 추가 유동성 지원 여부를 통해 부실가입을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건설회사들이 ‘대주단 가입-부실 건설사, 유동성 부족’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게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된다. 은행들이 추가 대출을 해줄 것인지에 대한 확신도 없이 선불리 대주단에 가입했다가 이미지만 나빠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대주단 가입이 알려질 경우 거래기업이나 하청업체에서 채권상환-현금결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 건설사의 대주단 가입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 우리-국민-농협-신한 등 은행들은 주거래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대주단 가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 대형사가 가입해야 30~50억원과 100억원 밖에 있는 건설사들을 줄줄이 끌어들이 수 있기 때문이다. 임 차장은 “아직 대주단 가입을 신청한 곳은 없지만 주채권 은행이 개별 건설사를 접촉해 권유하고 있는 만큼 곧 산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연합회가 18일 오후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는 대주단 가입 관련 설명회에는 300여개 건설사 관계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승호기자 darrida@sed.co.kr

추가 자금지원때 가입과 달리 엄격하게 심사 거쳐야 대형사 끌어들이기가 관건... “조만간 효과 나타날것”

◇ 대주단 가입 신청만 하면 승인-대주단 가입은 건설사들이 주채권 은행에 신청하면 은행이 심사한 후 최종 결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임승태 금융위원회 사무차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이 아무 건설회사나 무조건 받아주지는 않는다”며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면 대주단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주거래 기업이 대주단 가입을 희망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사중은행의 여신담당부장은 “건설회사가 줄줄이 부도 나기를 바라는 은행은 한 곳도 없다”며 “건설사들을 대주단에 참여시켜 부채를 1년간 유예해주면서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단 대주단 가입을 다 받아준 후 선별적으로 추가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유석을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주단 가입은 받아주되 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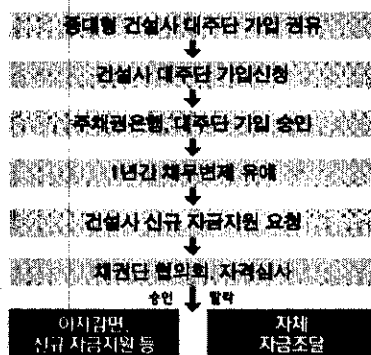
아날 가능성이 없다면 추가 자금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단 부도·화의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은 제외된다.

◇ 추가 자금지원 대상은 엄격하게 심사-대주단 가입은 주채권 은행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추가 자금지원은 채권단 협의를 거쳐야 한다. 건설회사가 신규 자금, 이자 감면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어음발행 현황 등 현금흐름을 은행에 밝힌 후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 사중은행 여신담당부장은 “건설회사들이 지금까지 은행 눈치를 보지 않고 경영하다가 은행의 간섭을 받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그러나 추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우량기

● 은행별 100대 건설회사 주거래 가입 현황 (단위:개)

은행	우리	국민	농협	신한	산업	외환
가입 수	21	19	16	12	12	4

건설회사 대주단 가입 및 신규 자금 지원 절차



정부가 규제를 풀어도 은행이 '돈줄'을 안핀다

심층
분석

투기지역 해제에도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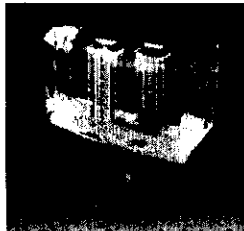
지난주 경기도 고양시에서 162㎡(49평)짜리 아파트(분양가 6억5000만원)를 분양 받으려던 중견기업 부장 박모(44)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박씨는 정부가 지난 7일자로 서울 강남·서초·송파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는 소식에 집값의 절반을 대출 받아 계약하려 했다. 하지만 대출 상담을 위해 찾았던 모텔하우스 인근 N, W은행 관계자로부터 모두 '대출해 줄 수 없다'는 대답만 들은 것. 박씨가 '투기지역에서 풀렸으면 집값의 60%까지 빌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지만, 두 곳 모두 '지금 분위기에선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박씨는 "일산 102㎡(31평) 아파트서 살다가 예들도 크고 해서 큰 평형으로 옮기려던 참이었다"며 "요즘 대출 금리도 7% 후반으로 떨어지고 대출 규제도 풀렸다고 해서 찾았는데, 역시 정부 발표는 믿을 게 못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7일자로 거의 대부분의 투기지역을 풀었지만 상당수 은행들이 해당 지역 주택 담보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내놓은 투기지역 해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치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곳곳에서 대출 불가

기존 아파트 거래 시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최모(50)씨는 이번 투기지역에서 풀린 서울 양천구 목동의 115.7㎡(35평)짜리(시세 8억~8억5000만원)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하고 인근 K은행 대출 창구를 찾았다. 하지만 은행 직원은 최씨에게 "미국 금융위기 여파로 11월 들어 주택담보대출은 거의 나가지 않고 있다"며 "요즘은 예금 담보대출도 뭘까 말까 한 판"이라고 했다.

또 용인 수지나 경기도 분당 등 이번엔 투기지역에서 풀린 다른 지역 은행들도 대출을 꺼리는 마찬가지였다. 일부 은행은 자체적으로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분당 H은행의 경우 대출 창구에서 "DTI제도가 없어지긴 했지만, 사실상 DTI규정에 준한 연



은행 "우리도 어려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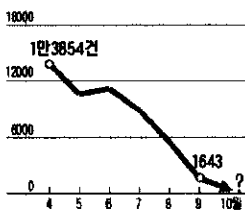
돈 빌려줄 여유 없다"

대출 여전히 꽉 막혀

아파트 거래 '빙하기'

어떤 대책도 안통해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



소득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은행들 몸 사리기, 정부 정책은 유명무실

은행들이 이처럼 대출에 안색한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 여파로 은행 스스로가 신용 경색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동지역의 한 대형은행 김모(45) 지점장은 "연말까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따지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등 여유가 없는 만큼, 가급적 주택담보대출 등을 자제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집값 하락세가 멈추지 않는 것도 한 이유로 꼽히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파트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 제 아무리 60% 선에서 대출해줘도 아예 나중에 80%, 90%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더 감' 이기성 사장은 "투기지역 해제로 대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었지만 시장 분위기는 영 딴판"이라며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겨우 될 만한 거래



투기지역= 지난 정부가 주택 수요 억제책 위해 도입한 제도 이 지역의 6

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집값의 40% 범위 내에서 DTI 40% 규제를 적용해 대출해줬다. 하지만 지난 7일 정부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함으로써, 원론적으로 이들 강남 3개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집값의 60%까지, DTI 규정 없이 빌릴 수 있게 됐다.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 비율)=매년 갚아야 할 대출원리금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DTI 40%라면 매년 상환하는 원리금이 연소득의 40% 이내가 되도록 대출 한도를 정해 그 한도 내에서만 대출해 준다는 뜻이다.

마저 다시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11·3대책 이후 재건축 담보물 위주로 거래됐던 일선 아파트 매매 시장은 최근 다시 침체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연구위원은 "정부가 정책 효과를 제대로 예측 못하는 데다, 그나마 정책을 내놓고 현장에서 통하지 않아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금융·주택거래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종합적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기자 if@chosun.com

‘위기의 은행’ 긴급점검

(1) 건설사 부도공포, 은행 옥전다

외환위기 때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성장을 거듭했던 은행이 10년 만에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원화, 외화유동성 경색은 다소 완화됐지만 실물경제 침체가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 여기에다 경기둔화

를 막기 위해 대출확대에 나서려는 정치·사회적 요구와 건전성 강화라는 내부 경영방침이 충돌하면서 이도 저도 못하고 있는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 위기에 처한 은행의 진로를 6회에 걸쳐 진단해 본다.

부동산대출 수 십조, 언제 터질지 몰라

국내 은행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시련을 맞고 있다.

자신의 건전성이 당시와 비교해 훨씬 나아졌지만 3개 은행 중 1개가량이 합병 등을 통해 정리된 97~99년을 떠올릴 정도다. 이처럼 은행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해외 조달여건 악화 등 대외 요인도 있지만 건설·중소기업과 가계관련 대출의 부실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시공능력 41위 건설사인 신성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이 건설사 연쇄부도를 몰고 와 은행 부실의 ‘트리거(방아쇠)’가 될 것이란 지적까지 나올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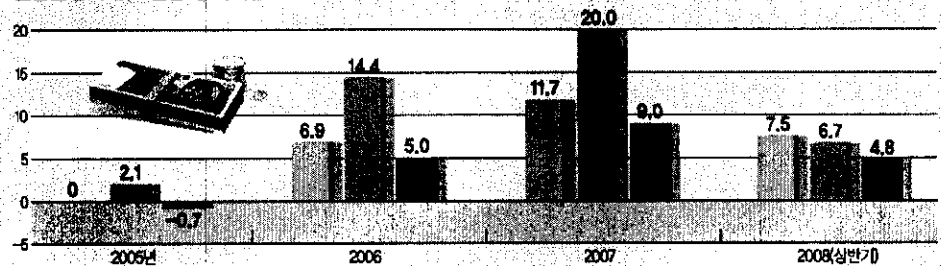
연체율이 낮은 가계대출도 고용한파가 휘몰아쳐 실직자가 양산되면 원금과 이자부담을 이기지 못한 가계를 중심으로 ‘주택 투매→가격 급락→금융권 동반 부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건설·중기 대출 ‘발등의 불’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은행들을 가장 옥죄는 것은 건설사 등 중소기업 대출의 건전성이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하향했던 국제신용평가사 피치한국사무소의 장해규 이사는 “(한국의 은행들은) 최근 2~3년 동안 건설사 등 중소기업 쪽에 많은 대출을 한 데다 특히 신용경색이 발생한 올해까지도 대출을 많이 했다”며 “잠재적인 부실 가능성이 높은 신용사이클의 꼭지에서 대출을 늘린 탓에 지금처럼 경기가 악화되고 신용경색이 심화되면

일반은행의 주요업종 장기대출 증감액 추이 (단위: 조원)



자료: 한국은행

경기침체에 연체율 급증 ‘위험’ 가계 주택대출도 ‘잠재적 폭탄’

부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일반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2005년 1조4000억원이 늘었지만 2006년에는 3조9000억원으로 증가했고 2007년에는 5조6000억원까지 급증했다. 올 상반기에도 24조7000억원이 늘었다. 특히 2007년 5조6000억원가량 늘어난 중기대출 중 건설·부동산 관련 대출은 2조원에 달한다.

직접적인 연관성은 적지만 저축은행 등의 프로젝트파인낸싱(PF) 대출 부실화가 빠르게 진척되고 있는 것도 은행권에는 잠재적 위험요인이다. 금융시스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탓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말 현재 저축은행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12조2100억원으로 전체 대출금

의 24.0%를 차지한다. 연체금액은 1조7440억원, 연체율도 14.3%로 은행권 연체율의 2배에 달한다. 연체율은 3·4분기(7~9월)에도 계속 상승세여서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주택대출은 잠재적 ‘폭탄’

중기대출에 비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이 상대적으로 건전하다는 데는 금융감독국, 한은, 은행 모두 동의한다. 이는 수치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06년부터 1% 아래로 떨어져 0.5%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긍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부실화 조짐은 있다. 우선 부동산경기가 호황이었던 2~3년 전 급증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분할상환 시기가 올해부터 대거 도래한다. 국민·신한·우리·

하나은행 등 4대 은행에서 올해 분할상환이 개시되는 주택담보대출금액은 총 11조7250억원이며 내년에는 26조9923억원으로 두배 이상 늘어난다.

문제는 주택경기가 좋을 때는 주택을 팔아서 원금을 갚으면 되지만 현재는 정부가 주택관련 규제를 거의 다 해제했는데도 집값은 반등 기미조차 없다.

나아가 ‘고용한파’까지 엄습하고 있다. 올 10월 신규 취업자 증가 폭이 9만7000명으로 3년8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을 정도다.

고용불안이 확대되면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축소돼 가계 부실, 금융권 부실이라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유신익 LG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경기침체로 금융기관의 연쇄적 부실 우려가 가중되는 가운데 자산가격 급락에 따른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와 부도 등은 국내 경제 디플트를 좌우할 정도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말했다.

minor@tnnews.com | 김규성기자

보험사 '자기자본 규제' 사실상 유예

금융당국, 자본확충 필요한데 증자 힘들어...現제도와 병행 검토

금융당국은 내년 4월부터 보험업계에 적용할 예정이었던 '리스크기 준 자기자본 규제제도(RBC)'를 사실상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최근 금융위기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보험사들이 RBC가 시행되면 지급여력비율이 지금보다 20%포인트가량 떨어져 자본 확충에 나서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선 증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RBC제도 병행 시행 검토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RBC 도입으로 보험사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악영향을 받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17일 밝혔다.

RBC는 2007년에도 한 차례 연기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다시 늦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지급여력비율 제도와 RBC를 1~2년간 병행하는 방안 △RBC 위험계수를 3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등을 따져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까지 RBC 적용시기 등을 규정할 보험업 감독규정을 확정하고 12월 금융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보험사 재정건전성 급격 악화

금융당국이 RBC제도 시행연기 등을 검토하는 이유는 보험사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금융위기 여파로 크게 악화된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지급여력비

율은 9월 말 184.4%로 6개월 전보다 무려 52.7%포인트나 떨어졌다. 주가하락과 금리상승 등 시장상황 악화로 인해 장기보유 유가증권(매도가능증권)의 평가이익이 크게 감소(3조6000억원)한 것이 주원인이다. 손해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도 260.5%로 같은 기간 28.2%포인트 하락했다.

생보사의 2008회계연도 상반기(3~9월) 순이익도 7474억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45.7% 줄었고 손보사는 1조109억원으로 0.77% 감소했다. 생보사는 15개사가 흑자를 냈지만 7개사는 적자를 냈고 손보사는 22개사가 흑자를, 5개사가 적자를 기록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용어풀이

◆RBC(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 Risk Based Capital)=보험사가 안고 있는 각종 위험(보험, 금리, 시장, 신용, 운영리스크)을 정밀히 측정해 이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갖도록 요구하는 제도로 현행 지급여력비율 제도를 대체할 예정이었다. 현행 지급여력비율 제도는 자산운용리스크와 보험리스크를 산출한 뒤 자기자본을 확보토록 요구하는 반면 RBC는 각 자산과 부채별 특성을 체계적으로 계산해 그만큼의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기자의 눈〉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심사숙고 해야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공기업 민영화' 방안의 핵심은 시장에 '자율성'을 주자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수장도 얼마 전까지 '공기업 민영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은 증권선물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움직임이 최근 정부기관에서 일고 있는 것이다.

정부 측에서 주장하는 논리를 간추리면 '실질적인 감독 기관인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즉 '방만경영' 가능성을 막자는 것이다. 하지만 거래소의 '방만경영' 가능성은 기존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사 기능으로 견제가 가능하다. 굳이 멸망한 민영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바꾸는 '무리수'를 뒤흔들며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공기업의 고질적인 '방만경영'에 감사원·감사·국정감사 등에 대비한 '보신주의'로 '현실안주형'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거래소에서 성사시킨 '파이낸셜



황정수 기자
(증권부)

타임스톡익스체인지(F-TSE) 선진지수 편입'과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에서는 "선진지수 편입과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상관관계가 없다"며 반론을 편다. 하지만 FTSE 선진지수 편입 요건의 '기타항목'을 살펴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기타항목에서는 '시장의 성숙도'가 포함돼 있다. 만약 정부의 논리대로 '감독기관의 방만경영 가능성' 때문에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 우리 스스로 '거래소를 포함한 시장이 성숙하지 못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꼴이 된다.

굳이 정부가 거래소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앞장서고 싶다면 '공공기관' 지정이 아닌 복수거래소 설립, 거래소 기업공개(IPO) 추진을 독려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다. 주주 감사와 상호 경쟁을 통한 효율성, 투명성 제고가 확실적인 관(官)의 규제보다 시대 흐름에 적합하다. 정부 당국의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psd@sed.co.kr

JP모건은 '이중잣대'부터 해명을

'종목 보고서'를 둘러싸고 하나금융지주와 갈등을 겪고 있는 JP모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비공식 주의 조치'를 내렸다. 지난 2일의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한 종목보고서는 다른 금융기관에는 적용하지 않은 기준으로 평가한, 다시 말하면 이중 잣대로 재단한 것임을 생각할 때 비록 비공식적이거나 감독당국이 개입, 주의조치를 내린 것은 당연하다.

신용국가로 분류되는 우리 금융기관은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에 대해 '올'의 입장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번엔 문제가 된 JP모건의 하나은행 종목보고서는 '갑'의 입장인 신용평가기관의 횡포의 일단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JP모건이 '하나은행의 무수익 여신(NPL)비율이 전 분기의 3.75%에서 4.76%로 높아졌다'면서 '자산건전성 훼손우려가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한데 대해 하나은행측은 '3개월 이상 연체의 고정여신이 아니라 이보다 건전성이 더 엄격한 요구의 여신까지 포함시킨 결과'라면서 유독 하나은행에 대해서만 '요주의 여신'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승복할 수 없다고

반발한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다. 그러나 JP모건은 이에 대해 한결을 더 나가서 하나금융에 대한 '종목 분석'을 중단했다. 하나은행이 정보 접근을 막았다는 것이 이유이지만 하나은행측은 이를 즉각 부인하고 있다.

문제는 다른은행에 적용하지 않은 기준을 유독 하나은행에만 적용한 이유, 다시 말하면 이중잣대 적용에 대해 JP모건측이 아직까지 당사자나 시장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또 '정보 접근을 막았다'면 언제 어떤 정보를 요구했는 데 하나은행이 응하지 않았는지도 명쾌하게 밝히지 않은 것도 문제다. 그저 막연하게 '기준적용은 애널리스트 고유 권한'이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신용국 금융시장을 깔보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며 그 피해는 JP모건에도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JP모건은 이중잣대 적용과 종목분석 중단에 대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 당국 또한 '비공식 주의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증권사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검사 대상에 포함시켜 시장 정화에 나서야 한다.

펀드 손실의 책임 문제

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의 집단 대응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우리파워인컴펀드'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판매사인 우리은행 측에 손실액의 절반을 가입자에게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린 게 큰 영향을 미쳤다. 금감원에 접수된 펀드 관련 민원은 종전 하루 평균 20여 건에서 100여 건으로 크게 늘었다. 일부 투자자는 손실 규모가 큰 특정 펀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 위해 인터넷 카페에서 비슷한 처지의 투자자들을 규합하고 있다.

펀드 수익률 하락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각국의 주가가 급락한 점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하지만 유독 한국에서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은 것은 펀드를 팔 때 판매사들이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고수익이 보장되는 상품인 것처럼 선전해 기대를 부풀린 탓이 크다. 상당수 은행은 수수료 수입에 눈이 어두워 펀드가 기본적으로 '고위험 고수익 상품'임을 알리는 데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다.

판매사의 과실 여부는 사례별로 따져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다. 그러나 펀드 투자로 돈을 잃게 됐으니 판매사나 운용사가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단순 논리는 시장 자체를 흔들 소지가 있다. 불완전 판매에 따른 피해와 일반적 펀드 투자 손실은 구분돼야 한다.

투자는 기본적으로 자기책임과 자유계약의 원칙 아래 이뤄져야 한다. 호황기에 펀드로 벌어들인 이익이 투자의 정당한 대가라면 손실 또한 투자자의 몫일 수밖에 없다. 이 와중에 일부 변호사가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마구잡이로 소송을 권유하고 나서는 것은 투자자들의 상실감을 이용해 한몫 챙기려는 혐의가 짙다.

펀드 투자 못지않게 소송에도 비용과 위험이 따른다. 증권 피해 관련 소송에 정중환 김주영 변호사는 "소송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소송을 권유하는 것은 또 다른 불완전 판매"라고 지적했다.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금융투자 역사가 짧은 탓에 이런 일로 값비싼 수업료를 치렀다. 판매사는 과도한 수수료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고 그동안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되풀이해 왔던 불완전 판매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파이낸셜
뉴스

금융투자협회 초대회장 누가?

금융권 협회 신경전 치열

금융권 최대 규모의 협회가 될 금융투자협회 출범이 임박하면서 초대 회장 선출을 둘러싸고 각 해당 협회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한국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 등이 통합되는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자체 예산만 500억원에

달하는 거대 협회인 탓에 누가 초대회장이 될지가 조미의 관심사다. 특히 최근 폐뚫한 일정 등으로 인해 선거 없이 회장을 선출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행여 정부의 입김이 미칠까 가뜰이나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다. 17일 각 협회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초대 회장 선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2인 이상의 복수후보를

2008년 11월 18일 화요일 031면 21.6 x 6.8 cm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권업협회와 자산운용협회 노조는 이날 성명서에서 "후보추천위원회는 초대 회장의 경선 선출을 위해 2인 이상의 복수후보를 추천해야 하고 후보 추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특정 집단의 이해나 압력이 있을 경우 이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호 노조위원장은 "18일 8차 설립위원회가 있어서 초대 회장 선출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

면서 "우리 협회는 통합 협회장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출되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증권산업 노동조합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새로운 협회 출범에 대해서 "협회장 선출 방식에 관치와 정치적 이해가 반영될 통로를 차단하고 증권산업 발전을 위해 능력 있는 인사가 선출되도록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협회 통합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mchen@fnnews.com |한민정기자

포커스

스티브 마빈의 후예들

요즘처럼 증시가 공포심리에 새파랗게 질려 있었던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 스티브 마빈이라는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있었다.

지금은 여의도 증권가에서 거의 잊혀진 인물이지만 당시에는 그의 말 한마디, 보고서 한 줄이 한국 증시를 쥐락펴락했다. 쌍용투자증권 조사 담당 애널리스트로 일했던 그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한국에 닥쳐올 것”이라며 외환위기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해 초 700을 웃돌았던 주가지수는 300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의 말대로 이듬해인 1998년 6월 한국 종합 주가지수는 280선까지 곤두박질쳤다. 이 덕분에 그는 당시 ‘족집게 애널리스트’라는 명성과 함께 ‘연봉 100만달러 사나이’로 불릴 정도로 부까진 한 손에 거머쥐었다. 하지만 그의 말로는 순탄치 못했다. 그는 2005년에는 “외환위기 때와 비슷한 제2 구조조정 태풍이 한국 기업에 몰아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정 반대로 그해 주가지수는 6년 만에 다시 1000고지를 탈환했다. 허구한 날 “늑대가 온다”고 외쳐대다 양치기 소년 취급을 받던 그는 결국 한국을 떠나 일본계 증권사로 자리를 옮겼다.

꼭 11년이 지난 지금, 후대가 혹 ‘제2 스티브 마빈’이라는 별칭을 붙여줄지도 모를 스타급 애널리스트들이 속속 강호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JP모간 서울지점 리서치센터장이자 은행업종 애널리스트를 맡고 있는 관계자는 최근 발표한 ‘하나금융지주 리포트’로 여의도에서 일약 유명인사로 등장했다. 그는 “하나은행의 중소기업 부실채권(NPL·무수익여신) 비율이 4.76%로 높아졌다”며 목표주가를 7월 4만원에서 단번에 1만4550원까지 떨어뜨렸다. 이 리포트 영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금융지주 주가는 14일까지 직전 나흘 동안 40%나 폭락했다.



설진훈 증권부 차장
jhseol@mk.co.kr

이 리포트 발간을 둘러싼 논란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17일 주가는 장중 상한가까지 기록할 정도로 급반등했다. 누구 말이 옳은지 말들이 많지만 일단 하루 주가만 놓고 보면 하나금융지주에 유리한 쪽으로 반응했다.

물론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매수든 매도든 투자 의견을 내는 것은 고유권한이다. 주가를 떨어뜨릴 위험요소가 많은 데도 투자자나 펀드매니저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무능 내지 직무유기라고 비판할 만하다. 문제는 리포트가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작성됐느냐에 달려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6899억원에 달하는 키코손실로 워크아웃상태에 들어간 태산LCD에만 3분기 말 현재 2500억원이 물려 있는 등 잠재부실요인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JP모간 리포트가 국내 모든 은행에 똑같은 잣대를 갖다댔는지는 의문이다.

UBS는 지난달 말 한국의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1%로 전망한 보고서를 내놴다. 한 달도 채 안 돼 2.9%에서 절반 이하로 확 낮춘 것이다. 이 리포트를 작성한 던컨 울드리지 UBS 수석 애널리스트는 홍콩에서도 꽤 명성을 날리는 인물이다. 그의 예측이 맞다면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던 98년(-6.9%) 이후 10년 만에 또다시 ‘제2 환란’에 버금가는 위기를 맞게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KDI는 물론 민간연구소들이 3%대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들 외국계 애널리스트의 공격적인 ‘셀 리포트’가 과연 투자자들에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금융권 3대 협회장 선거 관전포인트

청와대발 낙하산 또 내려오나

은행연합회장, 신동규 전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 유력
생보협회장, 남궁훈 현 회장-‘소망회’ 이우철 부원장 접전
금융투자협회장 안궫숙, 교수로 구성된 후보추천위 변수

3개 금융업계 수장을 새로 뽑는 선거가 한 달 내에 동시에 이뤄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황건호 증권업협회장과 남궁훈 생보협회장이 연임을 노리고 있어 청와대발 낙하산 인사와의 한판 대결이 불가피해 보인다. 신동규 전 수출입은행장과 이우철 금감원 부원장이 은행연합회장과 생보협회장에 유력한 인물로 부상한 가운데 금융투자협회장 자리는 예측하기 어려운 안개 속에 빠져있다. 초대 통합금융투자협회장 자리는 증권업계와 자산운용업계, 선물업계가 하나로 합쳐져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연합회장과 생보협회장은 이달 25일과 28일에 뽑힌다. 다음 달 중순쯤엔 통합금융투자협회장이 선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연합회 낙하산 안착에 좋은 토양 = 유치장 은행연합회장의 임기가 이달 24일에 만료됨에 따라 다음날인 25일에 은행들의 모임인 회원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은행

연합회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공모하는 등의 방식을 택하지 않고 있다. 회원총회에서 은행장의 추천을 받아 곧바로 투표에 들어간다. 따라서 정부에서 내정한 낙하산 인사가 대부분 회장으로 선임됐다.

요즘과 같이 정부에 손을 대릴어야 하는 금융위기사태에서는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입김이 더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보험 증권 쪽과 영여다름을 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힘 있는’ 회장을 원하는 분위기도 한 몫하고 있다. 유 회장은 연임에 도전하지 않을 것임을 공식적으로 말한 바 있다.

◆남궁 회장 연임 성공할까 = 생보협회는 이미 후보자 선정과정에 들어가 있다. 이달 초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한국보험협회장 국민대 김동훈 법학과 교수, 전 보험협회장 김성태 연세대 법학과 교수와 함께 대형 3대 보험사인 삼성, 교보, 대한생명 대표와 중소형사 동아,

ING 대표가 포함됐다. 따라서 보험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공모 절차 없이 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단독이나 복수로 28일 열리는 회원총회에 후보를 올릴 예정이지만 최근엔 단수로만 후보를 추천해왔다. 남궁 훈 현 회장이 연임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막강해진 금융투자협회장자리 ‘안궫숙’ = 금융투자회사의 회장선출이 가장 큰 관심사다. 현재 각 협회(3명)와 금융위(2명)에서 추천한 5명의 교수로 구성된 설립위원회가 회장후보추천위원회까지 맡으면서 위원수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설립위원장은 윤계식 서울대 교수(금융위 추천), 최은열 서강대 교수(금융위 추천), 최홍식 연세대 교수(자산운용협회 추천), 황선웅 중앙대 교수(선물협회 추천)가 위원직을 맡고 있다.

18일 정관이 확정되면 곧바로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모기간은 통상 공공기관의 관례에 따라 2주정도로 예상되며 서류와 심층면접을 거쳐 단독후보로 회원총회에 추천될 전망이다. 자산운용협회와 증권업협회가 그동안 복수후보를 놓고 회원총회에서 경선을 해왔기 때문에 복수추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에선 내년 2월 4일 금융투자협회 출범 때까지 이사진 구성, 조직 및 급여 통합 등을 다루기 위해 다음달 15일 이전에 회장 선출이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원들은 화비납부액에 따라 투표권의 상하한선이 정해진 ‘제한된 차등투표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독후보가 회원총회에 올라갈 경우 회원들의 투표권은 힘을 발휘할 수 없다.

◆낙하산 파상공격 예상 = 연임을 생각하는 황건호 증권업협회장과 남궁훈 생보협회장은 대체로 업계 평가가 나쁘지 않다. 황 회장은 자물병의 산파 역할을 했고 소액지급결제, 인제 양성, 해외진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남 회장 역시 4단계 방카슈탈스를 막은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연임 성공의 열쇠는 역시 ‘외풍’에 대한 반발여론이다. 생보협회와 은행연합회에서는 외풍을 막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힘 있는 낙하산을 선호하는 경향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협회



에서는 금융위기로 지급결제 등 현안이 많이 남아있어 남궁 회장의 연임에 손을 들 가능성도 있다. 반면 은행연합회는 정부에 손을 내민 상황이라서 낙하산 저지가 힘든 상황이다.

금융투자협회에선 유일하게 공모과 정을 거칠 계획이므로 외풍에도 불구하고 의외의 인물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초 증권선불거래소 이사장 선임과정에서 후보추천위원회가 청와대 입김에 배치된 인물을 주주총회에 올린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생보협회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이우철 금감원 부원장은 소금회(소망교회 금융인 선교회)소속으로 다음달 임기를 끝낸다. 재경부를 거쳐 금융위 상임위원을 지냈다.

신동규 전 수출입은행장은 행시 14회

로 강만수 재정부장관과 같은 경남고 출신이며 재무부 재경부에서 주로 금융과 국제금융쪽을 맡아왔다. 이명박 당선인 시절 인수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을 맡기도 했다. 은행장 출신으로 청와대와 밀접해 은행연합회장으로 유력한 상황이다.

관건은 금융투자협회장자리다. 업계에선 황건호 증권업협회장, 윤태순 자산운용협회장, 이종남 선물협회장 등 협회장과 함께 박종수 우리투자증권 사장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에선 임영록 전 재경부 차관, 이승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 전홍철 전 금감원 부원장, 유지창 은행연합회장, 김성진 전 조달청장이 후보군에 들어가 있다.

김선일 정재철 박종규 기자 jkpark@naeil.com

외환관련 증권 신상품 출시 어려워질듯

자통법 포괄주의 일보후퇴

‘금융상품을 만들고 거래할 때는 정부에서 금지한 것 아니면 모두 가능하다.’

자본시장통합법 기본 철학 중 하나인 ‘포괄주의’다. 하지만 이런 포괄주의를 외환 거래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정부 방침이 정해진 사실이 확인됐다.

금융투자회사(현 증권사·자산운용사)가 외환 관련 증권·파생상품을 거래할 때는 정부에서 열거하는 상품만 가능하도록 방침이 정해진 것이다.

이는 한국 외환시장이 아직 성숙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각종 파생상품으로 인해 시장이 어지러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 설명이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외국환거래법도 자본시장통합법과 맥을 같이해서 포괄주의를 도입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었다.

특히 자본시장통합법이 갖고 있는 포괄주의 철학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다양한 공격을 받아왔지만 정부 차원에서 그 뜻을 먼저 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자본시장통합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만들어 지난 11월 국회에 제출했다”며 “하지만 그 업무규정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외국환 거래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증권업계 주장과 상반돼 논란이 예상된다. 증권업협회 등은 외환 관련 거래에 있어서도 내국환 거래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그래야 금융투자회사들이 국내에서 만들어진 각종 파생상품을 외환으로도 만들어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외환시장 불안을 조장할 수 있으니 내국환으로만 포괄주의를 적용한다’는 취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현규·김동은 기자

코스닥 사이드카 규정 고친다

금융위, 요건 강화해 발동횟수 줄이기로

제 구실을 못하는 코스닥시장 사이드카 규정이 개정된다.

최근 하루에도 주가 등락폭이 워낙 커 현행 규정대로라면 투자자들에게 시장 급변을 알려주는 시그널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곽성신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 본부장은 17일 “사이드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며 “현재 금융위원회

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17일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도 “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코스닥시장에서 사이드카 발동 건수는 2006년 7건, 2007년 4건이었지만 올해는 17일 현재까지 17건을 기록했다. 이 중 15건이 10건 미만의 선물 계약에 의해 이뤄졌으며 1건 또는 2건의 계약으

로 사이드카가 발동된 경우도 4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고려할 때 사이드카 발동 기준 중 유동성 상한선을 확대해 선물 거래량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선물 가격과 상관없이 사이드카를 발동하지 않거나, 현물지수와 선물지수가 동시에 출렁여야 한다는 식의 개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원 기자

용어 사이드 카(sidecar): 선물시장이 장중 5~6% 급변할 때 현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물시장 프로그램 매매호가 효력을 5분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

고위험 파생상품에 '적색 경고문'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의무화... 장외 상품별 판매한도도

감독강화방안 최종 조율

이르면 내년 2월부터는 고위험 파생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서 상단에 투자 위험을 알리는 '적색 경고문' 부착이 의무화된다. 또 장외 파생상품 취급에 대한 총한도 외에도 파생금융 상품마다 개별적으로 판매 한도를 두는 것도 고려 중이다.

17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파생상품 종합 감독 대책 수립을 위한 외부기관의 연구용역이 완료돼 이를 토대로 다양한 방안을 논의·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금융당국 파생상품 감독 강화 방안

- 투자자 등급별 고객보호
- 투자경험·성향·지식에 따라 분류 후 위험등급 투자자에 대한 상품별 판매 한도 강화
- 고 위험 파생상품 적색 경고문 도입
- 파생상품 설명서 상단에 적색 경고문 부착
- 장외 파생상품에 대해 상품별 한도 설정
- 신상품 개발 및 판매 시 감독당국 심사 절차 강화

파생상품 종합 감독방안을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완료,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4일에 맞춰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우선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일환으로 금융기관이 파생상품 판매시 투자경험·성향·지식 등에 따라 소비자를 분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분류 결과 취약 등급 투자자에게는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덧붙여 금융당국은 고위험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적색 경고문을 도입하기로 했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고위험 파생상품의 경우 투자자가 본능적으로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서 상단에 적색 경고문을 부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배기자 jib@sed.co.kr

한겨레

2008년 11월 18일 화요일 005면

금융사·연기금 "채권안정펀드, 뉴스 보고 알았다"

금융위 '독단 정책'...시장불안 키워

금융위원회가 지난 13일 발표한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 조성 방안은 금융위의 독단에 가까운 방식으로 추진됐다는 정황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금융위는 10조원 가운데 2조원은 산업은행 출자금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8조원은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와 연기금을 통해 조달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돈을 내야 할 금융회사와 연기금 측은 "무슨 소리냐"며 기초적인 협의와 상의도 없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희주 보건복지가족부 연금정책관은 최근 <한겨레>와 한 전화 통화에서 "나한테 전화 한 통 없었다"며 "그런 중대한 사안을 발표하려면 최소한의 협의라도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한 간부도 "여러 경로를 통해 (정책 협의 사실을) 확인해봤지만, 연기금을 출자한다는 사실은 없었다"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

부의 독립성에 의심을 받지 않을 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한 간부는 "뉴스를 보고서야 내용을 접했다"며 "우리도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판에 또 돈을 내라고 하니 내지 않을 수도 없고,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청와대 질책받은 전광우위원장 '문책 피하러 서둘러 발표' 추측

일각에선 금융위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채권시장 안정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한 데는 다른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한다. 바로 전광우 위원장 문책 설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 각종 유동성 확대 대책에도 신용경색이 여전한 것에 청와대의 책임추궁이 있었고, 이 때문에 금융위원장이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는 펀드 조성 계획을 부랴부랴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예초 채권시장 안정펀드 조성 등 금융경색 완

화 방안은 2~3주 정도 더 검토를 마친 뒤 발표될 계획이었다. 전 위원장은 13일 기자간담회 직후 질의응답을 피하면서 "상세한 내용은 1~2주 뒤에 다시 발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설익은 정책 발표는 채권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지표물인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지난 13일 0.30%포인트 급등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도 0.16%포인트 올랐다. 특히 13일 상승폭은

지난 2003년 3월12일 에스케이(SK)글로벌의 대규모 분식회계 파문으로 0.46%포인트 급등한 뒤 5년8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었다.

공통락 하나대투증권 애널리스트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장의 흐름을 봐가면서 발표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며 "시장의 가력은 한번 무너지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책당국도 조급증과 한전주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韓銀, 시장에 1兆푼다 내일 국고채 매입키로 국고채 금리 급락

한국은행은 19일 1조원어치의 국고채를 유동시장에서 단순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주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에 따른 국고채 구축 효과(국고채를 팔아 회사채를 사는 것)로 급등세를 보였던 국고채 금리가 이날 급락세로 돌아섰다.

대상 증권은 국고채권 3년물, 5년물, 10년물이다. 입찰은 19일 오전 10시부터 20분간 실시되며 대금 결제일은 21일이다. 한은이 시장 안정을 위해 국고채를 단순 매입하는 것은 작년 11월31일 이후 1년 만에 처음이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일부 금융회사가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만큼 유동성 공급의 필요성이 생겼고 국고채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의 국고채 매입 소식으로 이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주 말보다 0.17%포인트 내린 연 5.23%,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0.20%포인트 내린 연 5.40%에 거래를 마쳤다. 회사채 금리(3년 만기, AA- 기준)도 0.13%포인트 하락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대출사기·카드깡 원천봉쇄” 금융기관 공동시스템 가동

16곳 가입 예정… 내달 시범운영

‘금융사기 방지시스템’이 내달부터 가동된다.

대출사기, 서류위조, 명의도용 대출, 카드깡 등 경범죄와 함께 서민층을 상대로 갈수록 교묘해지는 ‘신종 금융사기’에 대해 금융권이 집단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금융사기는 물론 부정거래 등의 수법과 유사하거나 혐의나 징후가 보이는 대출 및 부정 카드발급 등이 원천 봉쇄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개인신용평가 전문업체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신용정보업체인 한국신용정보(한신정)는 내달부터 금융사기 방지시스템을 시범 가동하기로 했다.

KCB는 이날 말까지 부정거래 방지서비스 및 경고서비스 개발을 완료해 내달부터 시험운영(파일럿테스트)에 들어가 내년 1월 정식 가동할 전망이다. 부정거래 방지서비스란 부정거래 징후가 포착될 경우 대출이나 카드발급을 2~3일간 유예하는 것을 말하고, 경고서비스란 부정거래 수법의 진행 가능성에 맞춰 1~3단계로 대처하도록 한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시험운영 전인 데도 은행, 카드, 캐피탈, 저축은

행 등 11개 금융기관이 이 서비스에 공동가입했고 올해 말까지 16개 금융기관으로 가입이 늘어날 예정이다.

또한 한신정 역시 미국 3대 신용정보업체인 익스페리온사와 업무제휴를 통해 ‘헌터2’라는 신형사기 방지시스템 개발을 이달 말까지 완료해 내달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가 내년 2월 초 정식 가동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시스템에는 KCB와 한신정 양사에 20여개 금융기관이 참여함으로써 그동안 발생한 서류조작대출, 전세자금대출 사기 및 타인 명의 카드 발급 및 대포차, 대포폰을 활용한 신종 사기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신용정보사 관계자는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선 금융사기 방지시스템 구축에 금융권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초 금융사기 방지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참여할 금융사는 한국씨티은행 등 1금융권과 삼성,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대우캐피탈, 우리파이낸셜, 하나캐피탈, 기은캐피탈, 솔로몬저축은행,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한국DB금융 등이다.

poweranic@fnnews.com | 안대규기자

대출로 몸집불리기 3년... 글로벌 위기에 '휘청'

한국 시중은행들 '위기관' 왜 자꾸 불거지나

'9·15 리먼브러더스 부도' 이후 국내 은행들에 대한 '위기관'이 수시로 나오면서 우리나라 은행이 정말 취약한지, 취약한 점이 있다면 과연 누구의 책임인지 하는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

외화 및 원화 유동성 위기는 넘겼지만 2005년 이후 대출을 급격히 늘리며 외형 경쟁을 한 후유증으로 대출 건전성과 수익성이 조금씩 나빠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선진국 은행들보다는 나은 상황이지만 세계 경제가 악화되면 어떻게 될지도 불안하다.

금융 전문가들은 대출을 통한 몸집 불리기에 치중한 은행들,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감독당국, 유동성을 관리하지 못한 한국은행 모두가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 주택담보대출 급격히 증가

2005년경부터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은 급격히 증가했다. 아파트 값이 급등하자 많은 사람이 앞 다투어 은행에서 돈

없다.

평균 3년인 '거치 기간' 때문에 대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은 3년 뒤에 나타난다. 올해 9월 말 시중은행들의 부실채권비율은 0.81%로 지난해 말의 0.72%보다 높아졌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0.79%로 지난해 말의 12.31%보다 떨어졌다.

이 같은 지적에 반론도 만만찮다. 황영기(현 KB금융지주 회장) 전 우리은행장(2004년 3월~2007년 3월)은 "행장들이 당시 시장 여건에 맞춰 열심히 한 것을 비판하면 누가 남들과 다르게 새로운 일을 하려 하겠느냐"면서 "연체를 등에서 우리 은행 상황이 나쁘지도 않다"고 말했다.

● 금융당국, 한은의 역할에도 비판 제기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도 있다. 유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2004년 8월~2007년 8월)은 "당시 외형 경쟁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은행들이 자금과 같은 위기상황을 평소 대

2005년부터 본격 경쟁... 시중銀 총자산 654조→873조
(2004년말) (2007년말)

예대율 상승 등 건전성 악화... 경기침체 땀 타격 불보듯
제동 못건 금융당국-유동성 방치 한은도 책임 못면해

을 빌려 집을 샀기 때문이었다.

몸집을 불리고 싶어 하던 은행들에는 좋은 기회였다. 은행 외형(총자산)은 대출을 늘리면 커진다. 당시 총자산 규모에서 국민은행 등에 밀린 우리은행은 특히 공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늘렸다. 국민, 신한, 하나, 기업은행 등도 바로 뒤를 따랐다.

2006년 3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을 도입한 '3·30 부동산대책'이 시행된 이후 가계대출 확대가 한계에 이르자 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을 늘렸다.

그 결과 국내 시중은행들의 총자산은 2004년 말 654조 원에서 3년 뒤인 지난해 말 873조 원으로 3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우리은행의 총자산은 105조 원에서 188조 원으로 79%나 늘었다.

● 3년 뒤 나타나는 후유증

하지만 은행예금은 대출만큼 늘어나지 않았다. '예금액 대비 대출액 비중'을 뜻하는 예대율은 급속히 높아졌다.

2005년 말 103.12%였던 시중은행들의 평균 예대율은 올해 6월 말에는 127.08%로 상승했다. 부족한 돈은 예금보다 조달비용이 비싼 은행채, 양도성예금증서(CD)를 팔아 때웠다. 수익성은 나빠질 수밖에

비하는 게 쉽지 않았던 것"이라며 "은행 문제에 대해서는 감독당국, 중앙은행도 책임을 공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은이 낮은 금리를 유지해 유동성이 넘쳐나게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2004년 11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한은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인 3.25%였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2002년 4월~2006년 3월)는 "당시에는 경기침체 속에서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한은으로서 양자택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 국내 은행들의 건전성에 큰 문제는 없으며 조선업과 해외투자펀드의 환헤지에서 발생한 외화차입 문제가 은행들이 겪는 문제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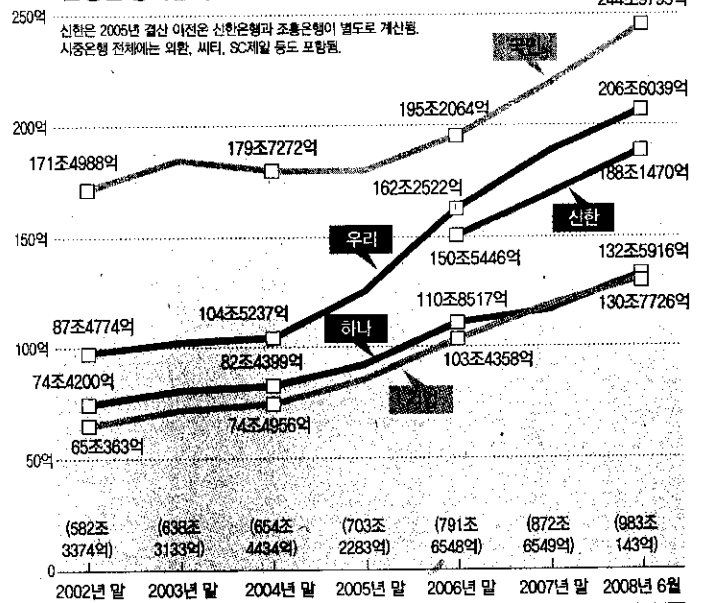
경제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최악의 상황이 닥치지 않은 만큼 지금이라도 지난 몇 년간의 문제점을 분석해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선임연구위원은 "은행의 과도한 외형경쟁 문제를 해결하려면 은행장들을 단기 실적에 매달리도록 만드는 '3년 임기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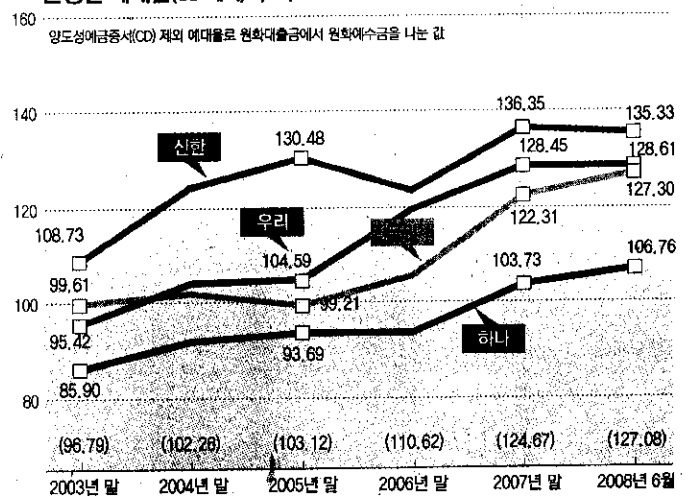
정재윤 기자 jeyuna@donga.com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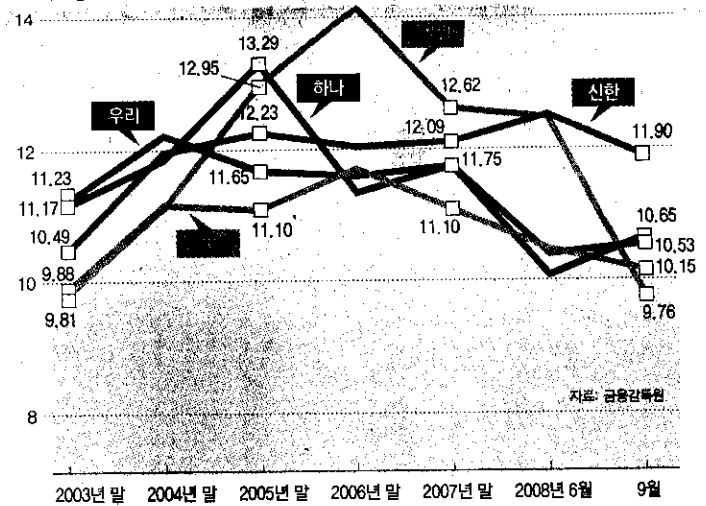
은행별 총자산 추이 (단위: 원, ()는 시중은행 전체.



은행별 예대율(CD 제외) 추이 (단위: %, ()는 시중은행 전체.



은행별 BIS 자기자본비율 (단위: %)



■ 한국 대응, 美-英과 '온도 차'

미국 투자은행(IB)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보호 신청 이후 정부와 한국은행은 금리를 파격적으로 인하하고 금융기관에 달러와 원화 자금을 공급하는 응급처방에 나섰다. 하지만 한국의 외환위기 때처럼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일부 은행 국유화까지 단행한 미국 영국 정부와 한국의 대응 강도에는 차이가 있다.

리먼 사태 이후 세계 각국의 금융시장 안정 조치 비교

구분	세계 각국	한국
정책금리	미국 1%포인트 인하 등 주요국 금리 파격적 인하	기준금리 1.25%포인트 인하
은행 간 채무보증	영국이 2500억 파운드 등 세계 각국 은행간 거래 지급보증	1000억 달러 외화 차입 지급보증
통화스와프 및 달러 유동성 공급	미국 연방준비제도(FRB), 한국 등 14개국과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	외화자금 시장 등에 550억 달러 규모 유동성 공급, 미국과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체결 및 한중일 확대 추진
예금지급보장 확대	미국이 보장 한도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유럽연합 27개국이 2만 유로에서 5만 유로 등으로 보장 금액이나 기간을 확대	5000만 원까지 예금보장 현행 유지
회사채, 기업어음(CP) 매입	미국, 2573억 달러 규모의 CP를 직접 매입	한은, 은행채 5조~10조 규모 RP 방식 매입, 정부 10조 원 규모의 채권 안정펀드 조성 추진

美-英 파격적 조치로 연쇄도산 진화 한국 "상황 다르다" 구제금융엔 신중

한국 정부는 금융 및 실물 침체가 지속되면서 개입 범위와 대책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연쇄 도산과 '뱅크런(예금 인출 사태)' 현상이 나타난 미국 유럽과는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다.

● 세계 각국 '돈줄 풀기' 공조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세계 각국 정부는 금융시장의 '연쇄도산 공포'를 진화하는 파격적 방안을 잇달아 내놓았다.

특히 미국과 유럽 각국 정부는 우선 은행 간 거래에 대해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해주고 예금 보장 한도와 기간을 확대했다. 미국 머니마켓 펀드(MMF)의 일부 환매 사태 등 '뱅크런' 조짐이 보이자 사전에 불안감 해소에 나선 것.

유동성 공급도 함께 이뤄졌다.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지난달 말 금리를 한꺼번에 0.5%포인트 끌어내리는 국제 공조에 나섰다. 미 연방준비제도(FRB)는 지난달 두 번에 걸쳐 금리를 모두 1%포인트 내렸다. FRB는 2573억 달러의 기업어음(CP)을 매입해주는 방식으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채권시장에도 '뒷돈'을 댔다.

이 밖에 미국과 유럽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부실 금융기관의 지분을 매입하고 부실 자산을 인수하는 구제금융에도 나섰다.

● "금융기관-기업 부실 크지 않아"

한국 정부와 한국은행도 지금까지 총 550억

달러의 외화 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미국과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해 1000억 달러까지의 지급 보증도 서 주기로 했다.

한은은 또 기준금리를 10월 9일 이후 세 번에 걸쳐 1.25%포인트 파격적으로 인하했다. 환매 조건부채권(RP) 매매 방식으로 증권, 자산운용사에 2조 원을 풀고 은행채도 매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은행에 대한 직접적인 공적자금 투입 부분에 대해 한국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은행들의 외국인 주주 비중도 높아 선불리 꺼졌 다간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부실대출 증가로 건전성이 훼손된 은행이 자기자본비율 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본 확충이 필요한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자기 자본비율이 낮다 보니 대통령의 잇따른 중소기업 대출 독려에도 은행이 꺾이지 않았던 것. 이런 점 때문에 금융당국은 우선 은행들에 후순위채 발행을 통한 보완자본 조달, 증자, 배당 유보 등을 통해 자본금을 확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한국은 유동성이 문제지 금융기관과 기업의 부실은 크지 않아 구제금융을 당장 투입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내수 침체가 길어지고 기업 구조조정이 더더 금융기관 부실이 커지면 대책의 강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위기의 시계는 지금 21시 10분

한국경제 카드사태때보다 심각

본지 17개 경제변수 분석

위기에보 넘어 경보단계로

한국경제에 실물·금융위기의 경고 등이 켜졌다. 본지가 17개 경제 변수로 구성된 위험예측 모델을 분석한 결과 △교역조건 △국내신용 △주가 △단기외채/국내총생산(GDP) 등 4개 변수에서 위기 징후가 포착됐다.

이 신호를 분석해 위험 시계로 환산하면 한국경제의 위기 시간은 '21시 10분'이었다.

21시 10분은 이번 모델에서 '위기 경보' 시간(21~23시)의 초입단계로 이미 2000년 버블 위기, 2003년 카드사태 때보다 위기 수준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 수준은 아직 본격적인 경제위기에는 진입하지 않았지만 위기가 발동하는 (23시) 시점으로 다가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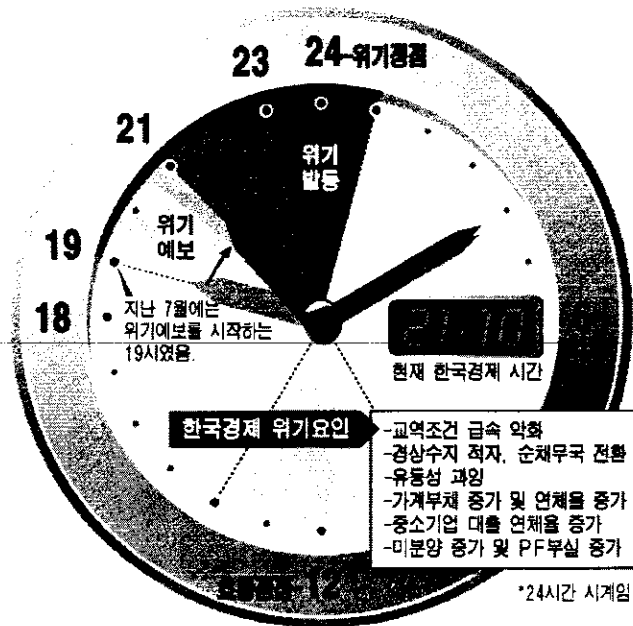
이번 분석 모델은 그라시엘 커민스키 조지 워싱턴대 교수의 위기 예측 분석법을 응용한 것이다.

17개 경제 변수를 분석해 한국 경제의 취약점이 어디인지를 분석하고 경제 전체 위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별한다.

이 모델은 정오를 경제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시간으로 정하고, 자정이 되면 국가 부도사태에 빠지는 상황을 나타낸다. 외환위기의 정점이었던 97년 12월이 자정을 나타냈고, 2000년 IT버블 붕괴, 2003년 카드사태 때가 각각 21시 상황이였다. 지난 7월 같은 모델로 분석한

2008년 11월 한국경제 위기의 시간은



한국 경제의 위기 시간은 19시로 위기에보가 막 시작되는 단계였다.

▶ 7월 21일자 A1·4·5면 보도

당시 교역 조건(2개월), 국내 신용(7개월)에 켜져 있던 경고등은 지속돼 이번 조사에서는 지속 기간이 각각 3개월, 10개월로 늘어났고 10

월 들어 변동이 심했던 주식도 경고등이 켜졌다. 한편 최근 외환시장 불안으로 주목됐던 GDP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8개월 동안 경고등이 켜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위기의 징후가 경제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GDP 대비 단기외채 비율이 높아 외환시장의 불안도 염려되고 있고, 올 3분기에 최악을 기록한 교역조건, 최고치 대비 절반가량으로 폭락한 주가지수는 실물경제에서 위험 징후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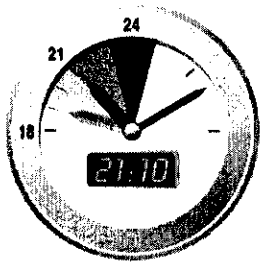
국내 신용이 위기 수준에 달하고 있다는 것은 금융시장도 위태롭다는 것을 말해준다. 경고등 수만 비교하면 외환위기(3개) 때보다 더 많다.

다만 위기의 깊이를 나타내는 경고등 지속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아직 지금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카드사태 때와 달리 지금은 전반적으로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정부 정책뿐 아니라 선진국 등 해외 국가들과 조화로운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조언했다.

▶ 관련기사 A4·5면

안정훈 기자



한국경제는 지금 위기경보 단계

위기 예보 단계는 이미 넘어섰다. 17개 위기 징후 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 경제는 △교역조건 △국내신용 △GDP 대비 단기외채 △주가 등 4개 지표에서 경고등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 수준의 위기국면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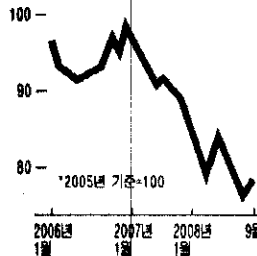
사실화하는 위기 경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현재 위기 시계가 가리키고 있는 시간은 21시 10분. 한국 경제를 감당했던 2000년 IT 거품 붕괴와 2003년 카드 사태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다.

낙달새 주가 30%·원화값 28% 급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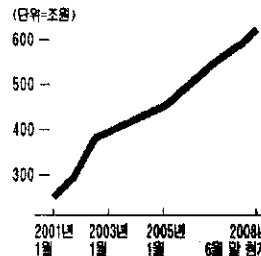
2008년 위기사계 비교해보니

구분	7월 21일	11월 17일
위기사계	19시	21시 10분
경고등 (지속기간)	교역조건(2개월) 국내신용(7개월)	교역조건(3개월) 국내신용(10개월) 주가(1개월) 단기외채(8개월)
위기등급	위기에보	위기경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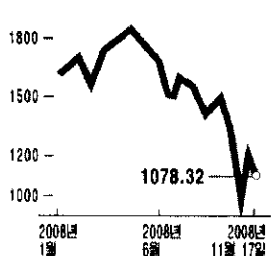
교역조건 갈수록 악화



2분기 가계대출 600조원 넘어



최고가 대비 반토막 난 주가



◆과도한 국내 신용 증가세

금융위기 징후를 나타내는 국내 신용은 최근 24개월 사이에 10개월 동안이나 경고등이 켜져 있었다.

1996년 8월부터 켜져 있던 국내 신용부문 경고등이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이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심상치 않은 징후가 분명하다.

특히 최근 신용 증가와 신용 부실은 외환위기 이전 상황과 유사한 수준이다. 가계대출은 지난 2분기를 기준으로 약 622조원에 달하고 있고 최근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대출도 2006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다.

과도한 신용 증가세는 이미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있다. 2006년 1.2%였던 중소기업 연체율은 올해 7월에는 1.5%까지 증가했다.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가계 부실이 점점 위기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가계대출 부실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 같다.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팽창한 국내 신용이 일순간에 축소되면 금융부문에 부실이 생기고,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문제가 있는 회사는 조기에 회생시켜 시장이 안정하다는 확신을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물 위기 부르는 교역조건 악화

교역조건 부문에서는 올해 들어 3개월 동안 위기 신호가 나타났다.

급기야 지난 3분기에 교역조건이 78(20

21시 넘으면 위기경보... 24시엔 국가부도 환율·단기외채 비율만 보면 외환위기 징후

05년=100)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지수가 78이라는 것은 동일한 물량의 수출로 2005년에는 100개를 수입할 수 있었지만 3분기에는 78개만 수입할 수 있다는 말이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한국에 급속한 교역조건 악화는 치명적일 수 있다. 수입가격 지수 대비 수출가격지수를 나타내는 교역조건 악화는 경상수지 적자와 원화값 하락, 내수 부진 등의 경로를 거쳐 실물부문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손해 나는 수출로는 나라 경제를 지탱해 나갈 수 없다는 의미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역조건 악화'는 한국 경제가 경험한 모든 위기국면에서 '표지'처럼 등장했다.

다만 최근 들어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 연구원은 "유가가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역조건은 편향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무역수지 흑자 폭이 작

게 나오면 외환시장에 불안 심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새로운 위험 경보-주가, 단기외채

지난 7월 조사 때보다 현재의 위기가 더 커진 것은 위기의 변수인 교역조건, 국내 신용 외에 10월 중 주가 폭락과 GDP 대비 단기외채비율이 8개월째 계속 경고등이 켜진 상태로 악화돼 왔기 때문이다.

교역조건외의 경우 위험 수준을 넘은 기간이 지난 10월 말까지 3개월째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국내신용 △주가 △GDP 대비 단기외채 비율 8개월째 경고등이 켜졌다. 단기외채 비율의 경우 외환시장 불안이 가중되면서 역추적해본 결과 이미 8개월 전부터 경고등을 깜박거리던 것으로 조사됐다.

위기 신호 접근법과는 별도로 외환시장과 외환보유액을 비교 분석해 보면 위험 징후가 한층 뚜렷해진다. 환율이 안정된 상황이라면 외환보유액 감소도 큰 걱정거리가 아니다.

그러나 외환보유액 감소와 원화값 하락

(환율 상승)이 동시에 진행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번에 적용된 분석기법상 환율과 외환보유액의 불안정성 지표가 3이 넘으면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난 10월에는 이 지수가 4.13으로 외환위기 수준에까지 치솟았다. 다행스러운 것은 11월 들어 이 수치가 일부 하락했다는 점이다.

◆경고등 오래 켜질수록 위험

참고로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에는 △국내 신용△단기외채 2개 변수에서 2년 넘게 경고등이 켜져 있었다.

이에 비해 2000년 IT 버블, 2003년 카드사태 때는 경고등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10개월 미만) 켜져 있어 큰 위기까지는 번지지 않았다.

과거 경험상 경고등이 켜진 기간이 길어질수록 위기 가능성도 높아지는 셈이다.

현재 국내신용 등 일부 지표에서 경고가 오랫동안 지속(10개월)되고 있고, 불과 4개월 만에 두 가지 변수에서 경고등이 추가로 켜진 점 등을 감안하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 연구원은 "단순히 경고등이 많다는 것이 위기로 이어지는 않는다"며 "최대한 경고등이 꺼질 수 있도록 위기 조기 진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위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상태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가 가속화한다면 견딜 수 없는 위기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진단이다.

안정환 기자

‘위기시계’ 어떻게 만들었나

교역조건·실질금리등

17개 변수로 신호분석

‘위기 시계’ 분석은 그라시엘 커민스키 조지워싱턴대 교수 등이 위기 예측 방법으로 사용한 신호 접근법을 근거로 한 것이다. 신호접근법은 위기에 선행하는 여러 변수를 선정해 움직임을 관찰한 후 위기를 예측하는 기법으로, 이 모델에 대한 신뢰성은 결국 변수 선정이 좌우한다.

이번 분석에서는 신뢰성을 높이고 우리나라 특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경고 수준이 높았던 변수 17개를 선정했다. 커민스키 교수 분석론을 바탕으로 경고등은 각 변수 특징에 따라 최근 24개월 혹은 12개월 안에 위험 임계치를 넘어간 적이 있으면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으로 설정했다.

분석 결과 실제 위기가 발생하기까지 커지는 경고등 개수와 지속 기간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꺼번에 많은 경고등이 켜지더라도 짧게 울리면 위기가 찾아오지 않고, 경고등이 적게 켜졌더라도 지속적으로 울리면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상 경제지표

경상계정	교역조건, 실질환율, 수출입, 경상수지/투자, 경상수지 GDP
자본계정	M2/외환보유액, 국내외 실질 금리차, 외환보유액, 단기외채증가/GDP, 단기외채/외환보유액
실물지표	산업생산, 주가
금융지표	실질금리, M2 승수, 국내신용/GDP, 예대금리차

*경상·자본 계정은 최근 24개월 이내 외환위기 예보, 나머지는 12개월 이내 금융위기 예보

금융위기 뇌관 우려 건설사 줄도산 막아라

부문별 지표를 악화시킨 원인을 살펴보면 한국 경제 곳곳에 산재한 '지뢰'를 발견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건설업계 줄도산 가능성은 한국 경제를 단숨에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지뢰로 지목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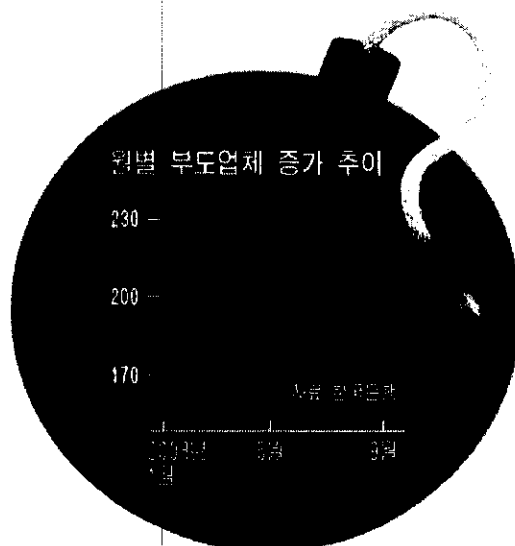
실제로 시공능력평가 41위인 신성건설은 자금난으로 이미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중견 건설사들도 휘청거리고 있다. 8월 말 현재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약 16만채로 최소 30조원 이상 자금이 묶인 것으로 건설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규모가 약 78조원에 달한다.

저축은행에서는 부동산 PF 연체율이 14%를 넘어 부동산 PF 부실 여부가 금융위기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염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 자금난은 중소기업 전체 위기로 번져나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중소기업 자금시장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68(기준치 100)로 지난 9월(75)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

금융권에서 부실대출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대출심사 기준을 강화한 것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축소로 이어지고



1~9월 건설·설비투자 0.4% 증가에 그쳐 성장잠재력 훼손

있다는 분석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단순히 신용이 낮은 기업뿐 아니라 영업이 탄탄한 중견기업들조차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제2 금융권이 붕괴되면 위기가 중소기업으로 급속하게 퍼질 수 있다"며 "국

내 금융시장에서 유동성 개선을 위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 최고점 대비 반 토막 수준이 된 주가지수 추가 하락 여부도 걱정거리다.

한때 외국인 매도 러시로 1000선까지 붕괴됐던 주가지수는 1000~1100선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아직 바닥은 멀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경기 침체로 인해 투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도 문제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 설비, 건설투자액(실질기준)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01년(-2.9%)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로 지난해 증가율(4.4%)보다 크게 둔화된 수준이다.

지금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간 투자가 7년 만에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도 크다.

한편 한·미 통화스왑 영향으로 외환 시장은 11월 들어 다소 안정되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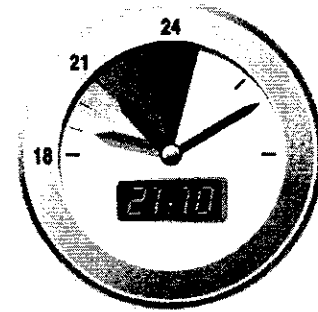
그러나 최근 원화환율이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는 등 불안감은 여전하다. 그나마 안정 기조를 보이고 있는 소비자물가와 흑자 기조로 돌아선 경상수지가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다.

안정훈 기자

한국경제는 지금 위기경보 단계

글로벌 경기 불황에 대한 시나리오는 기관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내년에 바닥을 치고 2010년에는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보면 2009년 미국은 0.1%, 유럽연합(EU) 0.2%, 일본

이 0.5% 선이다. 이 정도면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지만 거의 성장이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2010년에는 미국 GDP 성장률이 2.0%, EU와 일본이 각각 1.3%로 소폭 개선될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예상했다.



車·전자등 내년 수출전선에도 '먹구름'

美·EU·日 GDP 마이너스 성장 예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보다 더 부정적이다.

OECD 회원국 내년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국들의 GDP 성장률 평균이 내년에도 -0.3%를 기록한다는 것. 그만큼 선진국 불황의 골이 깊다는 얘기다.

OECD에 따르면 미국은 -0.9%로 가장 나빴으며 유로권은 -0.5%로 전망됐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나은 -0.1%로 나타났다.

미국 경제가 금융위기 속취 해소를 최소 1년간 더 겪으면서 설비투자 부진과 소비 위축 등 각종 불황 증상을 보일 것이라는 얘기다.

미국 설비투자는 지난 3분기 -2.6%, 주거용 투자는 -21.3%를 기록해 투자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다. 9월 실업률도 6.1%로 연초 대비 급등하는 반면 개인소비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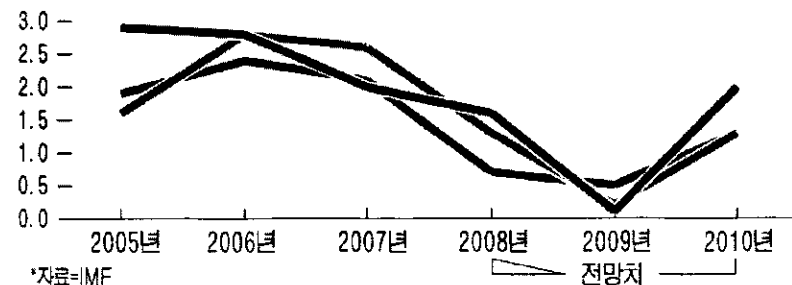
은 -1%에 근접하면서 내수뿐만 아니라 수입상품도 받아낼 여력이 없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대부분 국제 금융사가 2009년 미국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전망하고 있다"며 "세금환급과 구제금융 정책 효과가 사그라지면서 2008년 하반기~2009년 상반기에는 소비·투자 위축이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3분기 유로존 경제성장률은 -0.2%를 기록하며 단일통화 사용 이후 처음으로 2분기 연속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 1분기 성장률이 1.3%로 선방했던 독일은 2분기 -0.4%, 3분기 -0.5%로 두 분기 연속 성장이 둔화됐고 이탈리아도 2분기 -0.4%, 3분기 -0.5% 성장을 기록해 상황이 크게 나빠지고 있다.

주요 선진국 GDP 성장률 (단위=%)

— 미국 — EU — 일본



일본도 해외 수요 감소 여파를 비껴가지 못했다. 2분기 일본의 대미 수출은 11.4% 감소했고 유로지역 수출은 7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무역수지도 지난 8월 20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엔고 현상으로 이 같은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 경기가 이처럼 부진해지자 국내

주력 수출품인 전자 컴퓨터 자동차 등의 내년도 성장 전망은 암울하기만 하다.

노성호 국제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조선업계 3년치 수주물량을 제외하고는 내년 우리 기업들의 수출 전망을 헤아리기가 두려울 정도"라고 전했다.

한예경·김은정 기자

1위수출시장 중국 경기부양에 큰 기대

2008년 10월 현재 우리 수출시장 의존도는 선진국 대 개도국이 3대7이다.

2001년만 해도 대선진국 수출 의존도가 50%에 달했던 데 비해 올해 들어 10월까지 30.6%로 떨어졌다. 선진국 수출 감소분만큼 우리 경제의 대개도국 의존성이 심해졌다는 뜻이다.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이 타격을 받기 시작했고 연쇄적으로 개도국에 대한 자본재와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수출 감소 영향을 받게 된다.

3분기까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동유럽 지역에 대한 수출은 각각 39.8%와 30.3%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체 수출 증가율 버팀목 역할을 해

왔지만 이들 지역마저 급격한 경기침체를 겪으면 우리 경제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

우리나라 총수출액의 22.2%를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 둔화세가 특히 관건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내년 중국 GDP 성장률이 9.3%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9% 성장도 힘들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세계은행 린이푸 부총재는 내년 중국 경제가 8-9%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대중국 수출은 75억3600만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2.6% 감소했다. 80개월 만에 감소세다.

다만 중국이 최근 경기부양책을 내놓음으로써 향후 중국 당국이 경제성장의 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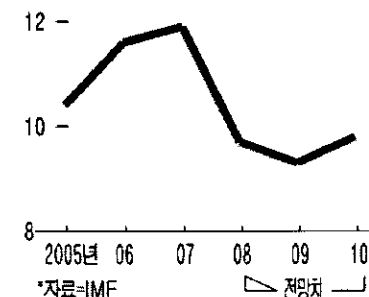
격한 하락을 막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국 증시는 이미 올해 들어 50% 이상 하락 조정됐고 이 때문에 소비에 상당한 제약이 뒤따랐다.

하지만 지난 5월 이후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면서 상당 기간 금리 인하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중국 경제 발목을 잡아왔던 올림픽 이후 설비투자 급감에 대한 우려도 상대적으로 누그러질 전망이다.

금융연구원은 "선진국 경기 둔화가 아시아 신흥 경제국에 본격적으로 전이되면 이들 국가의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무역수지가 악화하겠지만 세계적 경기 둔화가 원자재값을 끌어내리므로 무역수지 악

중국 GDP 성장률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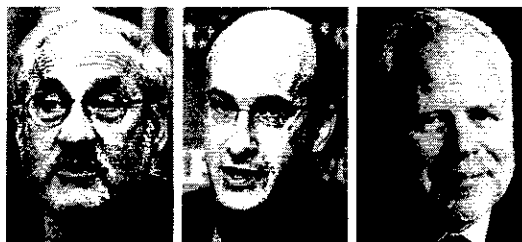


화 정도는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특히 대외 불균형 문제에 있어 베트남을 제외한 대부분 신흥국이 장기간 경상수지 흑자를 실현해 왔고 외환보유액 역시 충분한 수준이어서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발트3국을 포함한 일부 동유럽 국가발(發) 위기가 전체 신흥국 신용 악화로 이어져 위기가 전염되는 상황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예경·김은정 기자



조셉 스티글리츠

케네스 로고프

배리 아이겐그린

경제위기 언제 끝날까

◀◀국외

금융위기만 18개월이상 지속

【뉴욕 위험한 특파원】 미국 금융위기에서 시작돼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세계 경제 위기는 도대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경제 위기가 미국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인 만큼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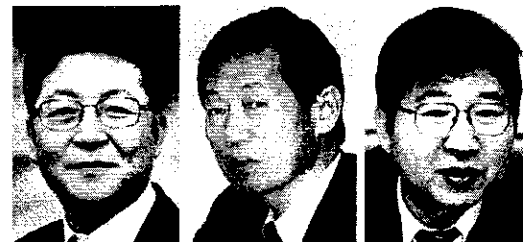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미 컬럼비아대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는 최소한 18개월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엔의 금융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있는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가 얼마나 깊을지 아무도 잘 모른다”면서 “각 정부가 취하는 대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번 위기는 최소한 18개월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한국은 10년 전 외환위기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외환보유액을 유지하고 있고 금융사들도 훨씬 더 강하다”면서 “한국이 제2의 외환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진단했다.

손성원 미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도 “경기 침체 원인이 금융에서 비롯되면 경기 침체가 더 오래 걸린다”면서 “최근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미국의 경기 침체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고 내년 4분기에나 추세가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케네스 로고프 미 하버드대 교수는 “세계 경제의 중심축인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들어간 후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바닥을 친 후 내년 상반기 중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금융 통화부문 전문가인 배리 아이겐그린 UC버클리대 교수는 “세계는 이미 경기 침체에 돌입했으며 이번 경기 침체는 과거와는 달리 깊고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며 “전 세계 경기 침체가 끝나고 회복세로 돌아서는 것이 2010년이라면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강성진

이재웅

정갑영

국내▶▶

실물경기 침체 1~2년 더 갈것

국내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가 1년에서 2년 정도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우리나라만의 위기가 아닌 전 세계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경기 침체 상황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은 “금융 쇼크는 내년 1분기에는 진정될 것으로 보이나 실물경기 침체가 회복되려면 1년 반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카드 사태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최소한 1년 이상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원화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잘돼 수출기업이 살아나고 무역수지도 좋아진다는 경제학적 원리가 깨지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키코 사태도 있고 수출하는 대기업은 금융시장 발달로 환율 해정을 많이 하면서 환율 상승(원화값 하락)이 반드시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겨울과 내년 봄까지가 가장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웅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는 “경기 침체가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 교수는 “위기 정도는 외환위기보다 심각하지는 않지만 경기가 정상화되는 기간은 더 길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97년 외환위기 때는 동남아 일부 지역을 비롯한 일부 국가 위기였다”며 “선진국 경기는 괜찮았기 때문에 수출은 괜찮았고 구조조정을 통한 경기 회복도 용이한 상황이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지금은 과거 외환위기와는 달리 세계경기가 전반적인 침체라는 것이 문제기 때문에 회복 시기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갑영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상황에서는 금융·실물시장에서 불확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회복 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다소 조심스럽다”며 “아직 최악의 상황까지 이어지지 않았으므로 정부가 상황 대처를 잘한다면 조기에 극복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안정훈 기자

환율 '한미통화스와프' 이전으로

■ 원·달러 5일째 올라 1,400원대 재진입

원·달러 환율이 20여일 만에 1,400원대로 복귀하면서 전 고점을 돌파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대외여건이 불안하고 수급자세도 꼬여 있기 때문에 한동안 변동성 장세가 계속되면서 상승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내외 증시 급락에다 안전자산 선호 여파로 상승압력 지속... 전고점 1,495원 돌파 가능성

원·달러 환율이 20여일 만에 1,400원대로 복귀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대외여건이 불안하고 수급자세도 꼬여 있기 때문에 한동안 변동성 장세가 계속되면서 상승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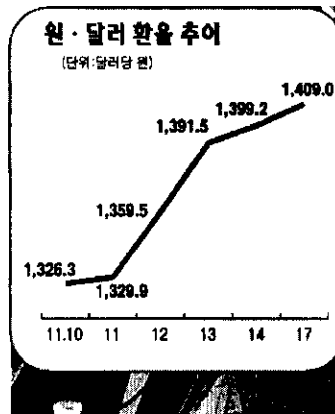
17일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지난주 말보다 9원30전 상승한 1,409원으로 마감했다. 지난 11일 이후 5거래일간 82원70전 급등하면서 10월29일 이후 처음으로 1,400원대를 기록했다. 이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전인 지난달 29일(1,427원)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이달 초 1,260원대까지 하락했던 환율이 상승세를 보인 결정적 이유는 국내의 증시급락 때문이다. 국제금융시장이 경기침체와 맞물리면서 불안한 흐름을 이어갔고 이로 인해 미국·유럽 증시가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도 덩달아 추락하며 환율이 상승한 것이다. 특히 이달 들어 18일 현재 1조6,000억원 이상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달러 매수세를 촉발시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국내의 증시급락으로 투신권의 달러수요 급증도 환율상승에 작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투신권은 최근 글로벌 주가가 연일 급락하자 해외투자펀드의 자산가치 하락분만큼 환위험을 오버헤지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달러를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울러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할수록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재연되며 달러화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원화약세를 초래한 주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달러수요가 가득한 반면 공급량은 찾아보기 힘들어지면서 시장 체력은 갈수록 고갈되고 있다. 상반기만 해도 하루 평균 100억달러에 달하던 거래량이 최근 한달간 30억달러 안팎으로 급감했고 지난 14일(23억달러)에는 연중 최저치로 추락했다. 거래량이 워낙 없어 작은 호가에도 환율이 급등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빈번하게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당분간 과도한 변동성 장세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재은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꼬여 있는 수급상황과 불안한 대내외 금융시장을 감안하면 1,250~1,430원대의 구간은 동일한 변동성 구간으로 볼 수 있다"며 "신용경색과 경기둔화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연말이나 내년 1·4분기까지 이 같은 변동성 장세가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의 장중 전고점(1,495원)을 테스트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대내외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와 기업도산 위험, 외국인 주식자금 이탈 등으로 상승압력이 가중되고 있다"며 "연말까지 1,250원에 대한 강한 지지력을 보이면서 전고점 경신을 시도하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오를지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환율이 하향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이후 외환위기에 대한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된데다 G20 금융정상회의 이후 금융시장 안정 노력이 구체화된다면 환율안정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美증시서 주가 5弗의 의미...

한국의 액면가 미달株 해당-기업 퇴출 임계점

미국 증시에서는 '주가 5달러' 선이 기업의 퇴출 가능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학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7일 "주식시장에서는 주가의 절대 수준이 해당 종목의 존속 가능성을 일정 부분 선반영하는 경향이 있다"며 "국내 증시에서는 액면가, 미국 증시에서는 '5달러'가 마지노선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김 연구원은 베어스틴스나 리먼브러더스 패니메이 등 퇴출이나 감자 가능성 등으로 주주가치가 심하게 훼손됐던 금융주들도 주가가 5달러 미만으로 급락한 이후 구체적인 처리 방향이 결정됐다는 점을 제시했다. 그는 또 "GM(3.01달러) 포드(1.80달러) 등 정부의 구체적 외에는 다른 희생대안을 찾기 어려운 대형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도 5달러를 밑돌고 있다"며 "액면가가 정해져 있지 않은 미국 증시에서 이는 의미있는 임계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벤처기업이 많이 포함돼 있는 나스닥의 경우 전체 2970개 종목 중 절반에 가까운 1388개 종목의 주가가 5달러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량주 중심의 S&P500지수 구성 종목 중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적인 기업들을 비롯한 27개 종목의 주가가 5달러 아래로 밀려난 상태다. 특히 정보기술(IT)과 자동차 금융 등 경기민감한 업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원은 "특정 업종에 절대 주가 수준이 낮은 종목이 집중돼 있다면 그만큼 상황이 나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면서 "미국 주식시장도 금융위기라는 리

S&P500지수 내 대표적인 초저가주 (단위:달러)

업종	종목	주가
자동차	포드	1.80
	GM	3.01
금융	AIG	2.08
	내셔널비티	2.33
	소버린뱅크	2.39
	씨티그룹	4.14
정보기술	AMD	2.43
	마이크론	2.75
	스프린트	2.30
	웨스트컴	2.86
	모토로라	4.08
	현마이크로시스템즈	4.12
소비재	테넬스케어	1.95
	오피스데포	2.03
	타이슨푸드	4.90

주가는 14일 종가.

스크 외에 글로벌 수요 감소 등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퇴출 가능성이 높아진 기업이 늘었다는 것은 구조조정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라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구조조정으로 미국의 경쟁 기업들이 사라질 경우 국내 기업들의 수혜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현 기자 serew@hankyung.com

朝鮮日報

2008년 11월 18일 화요일 A01면

‘세계 경제축’ 美·日·유로존 동시에 첫 마이너스 성장

1999년 유로화 출범 이후 초유의 사태

일본 경제의 지난 3분기(7-9월)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미국·일본과 유로존(유로화를 쓰는 유럽 15개국) 등 세계 3대 선진 경제권이 동시에 마이너스 성장에 돌입했다.

세계 경제에서 64.4%(2007년·국내총생산 기준)를 차지하는 미국·일본·유로존이 동시에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은 1999년 유로화 출범 이후 초유의 일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경제는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빠져들게 됐으며, 한국·중국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

경제에도 연쇄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일본 내각부는 17일 지난 3분기의 GDP(국내총생산)가 앞 분기 대비 0.1% 감소, 2분기(-0.9%)에 이어 연속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은 미국의 IT(정보통신) 거품 붕괴의 영향으로 지난 2001년 2-4분기에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후 7년 만이다.

내년에도 3대 선진 경제권은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할 것이라고 IMF(국제통화기금)는 전망하고 있

다. IMF는 이달 초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미국의 내년 성장률을 마이너스 0.7%, 유로존은 마이너스 0.5%, 일본은 마이너스 0.2%로 각각 예측했다.

이에 따라 내년 세계 경제 전체 성장률도 2.2%에 그칠 것이라고 IMF는 전망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추세라면 내년 세계 경제가 1%대 성장으로 곤두박질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KDI(한국개발연구원) 김현욱 연구위원은 말했다.

IMF는 또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도 당초 전망한 3.5%에서 곧 2%대로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훈 기자 khkim@chosun.com

日 7년만에 경기침체 진입

美 물가 59년만에 마이너스...디플레 뚜렷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일본이 7년 만에 경기침체(recession) 국면에 진입했다. 미국도 물가가 59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물가가 하락하는 가운데 경기는 침체상태인 디플레이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국의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어 세계 경기침체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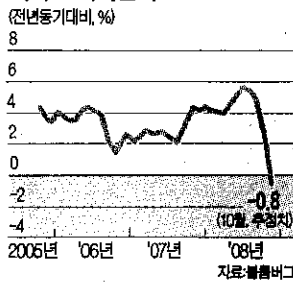
일 내각부는 17일 지난 3분기(7~9월) 실질 경제성장률이 연율로 -0.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분기 성장률은 -3.7%였다. 일본 경제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것은 미국의 IT(정보기술) 거품 붕괴로 성장률이 뒷걸음질쳤던 2001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이후 약 7년 만이다. 일반적으로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면 경기침체에 빠진 것으로 진단한다.

3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세계 경기 후퇴로 기업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게 결정적이었다. 설비투자는 전분기 대비 1.7% 감소했다. 개인소비와 수출은 각각 0.3%와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요사노 가오루 경제담당상은 "일본 경제가 경기후퇴에 진입했다"며 "경기하강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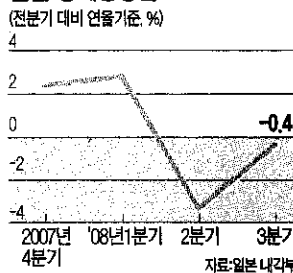
전문가들은 일본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라카와 히로미치 크레디트스위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경제는 글로벌 경기에 민감하게 연동돼 있다"며 "일본은 깊은 경기후퇴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리타 교헤이 바클레이즈 캐피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 4분기와 내년 1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디플레이션 양상이 뚜렷하다. 블룸버그통신의 전문가 설문조사

미국 소비자물가



일본 경제성장률



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는 0.8%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소비자물가가 떨어진 것은 1949년 이후 처음이다. 경기침체와 신용경색으로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자 제조업체와 소매상들이 잇따라 제품가격을 낮추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또 성장도 뒷걸음질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분기 -0.3%였던 성장률은 4분기와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 마이너스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미실물경제협회(NABE)는 50명의 경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올 4분기 성장률은 -2.6%, 내년 1분기는 -1.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연간으로는 올해 성장률이 1.4%, 내년에는 -0.2%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경기침체 속에 수요가 줄어 물가는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현상이 빚어져 경기가 악순환에 빠져들었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니켈겔트 IHS글로벌인사이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과 증시 등 자산가격 하락, 경기침체 등이 수요 감소를 초래해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차병석/뉴욕=이덕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

英, 미국발 금융위기 최대 희생양 되나

영국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최대 희생양이 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른 국가와는 달리 영국의 주도산업이 금융업인데다 최근 실물경기의 침체와 함께 부동산시장마저 큰 타격을 입고 휘청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금융산업의 상징인 런던 시티가 뉴욕, 도쿄와는 달리 국제 자본의 자유이동에 의한 일시적인(?) 집결로 이뤄진 곳이라는 점도 글로벌 위기 국면에 더욱 취약하다는 분석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연합(EU) 등도 이제 영국이 이번 위기 국면에서 선진국 중 가장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분위기다.

사실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 국면에서 가장 먼저 부실에 따른 자산상락을 신고한 곳은 지난해 2월 영국 HSBC였고, 가장 먼저 파산한 금융기관 역시 지난해 말 영국의 노던록 은행이었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가 올 여름 가장 먼저 은행 국유화 조치란 극약 처방을 내놓은 것도 이 같은 대규모 은행 부실이라는 숨은 배경이 있다는 지적이다. 영국이 과연 지난 1979년 국제통화기금(IMF) 국제 금융의 악몽을 재연할 것인지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IMF는 이달 초 영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1.3% 가량 축소되며 선진국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IMF가 지난 4월 영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1.8%에 달할 것이라고 밝힌 데 비하면 불과 몇 개월 만의 놀라운 반전이다. 영국은 아직 유로존과는 달리 공식적인 경기침체 국면에 들어가지 않았으나 3·4분기에 이어 4·4분기도 마이너스 성장에 그칠 것이란 점은 단지 시문제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미국발 금융 부실이 점화되면서 금융산업에 골격으로 한 영국 경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전통적인 금융가인 런던 시티의 한 투자은행 대표는 "영국이 엄청난 파타 후에 나타나는 고통스런 속취 국면을 자나고 있다"고 표현했다. 금융업 위축 결과는 실업률에 즉각 반영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

감수 경향이 줄어들면 더 많은 돈을 투입해 과거보다 더 적은 수익을 벌어들일게 되기에 '규모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초대형 은행의 동장이 필수적이 된다. FT는 "은행 크기가 다시 정의되고 있고 이제 규모의 경제를 보일 수 있는 은행은 미국의 씨티, BOA, JP모건 수준은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일 모기업의 주인이 바뀔 때 따라 간판이 바뀌게 될 드레스너 은행이나 국립스코틀랜드은행이 모회사인 ABN암로 등 중형 시장을 대표하던 영국의 2개 투자은행도 이 같은 추세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영국에서도 미국에서처럼 수천개의 은행이 소수의 대형은행과 소형은행으로 양립되는 이른바 '바벨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틈새 시장에 집중하기엔 너무 크고, 새로운 금융 질서 속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엔 너무 작다는 이유다.

향후 10년간 영국의 금융산업에 대한 전망은 더욱 암울하다. 영국의 신규 금융가인 카나리 워프에 위치했던 리먼브러더스의 유럽총괄본부는 최근 주인이 일본 노무라은행으로 바뀌었다. 스위스 증권거래소는 최근 영국에 위치했던 스위스 블루칩 거래시장 SWX유럽의 문을 닫고 취리히로 다시 이관한다고 밝혔다. SWX유럽의 거래량이 최근 3년간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자국 경제의 위기 국면으로 이 같은 선택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FT는 이와 관련, "금융 위기 전에는 시장을 위한 여러 개의 대안이 있었지만 현재는 이러한 선택 폭이 크게 줄고 있다"면서 "금융 양극화와 시장 이탈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혁원기자 hseaw@sed.co.kr

런던시티, 국제자본 집결로 이루어져 외부충격에 취약 '부동산침체까지 덮쳐 내년 성장률 마이너스 1.3% 그칠듯 스위스 SWX 이어 외국 금융업체 이탈도 가속화 예상

영국은 1980년대 들어 각종 금융 규제를 완화하며 전략적으로 해외 자본을 끌어모으며 금융업을 육성했다. 당시 제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영국 경제의 부활을 이끈 주인공이 다름아닌 금융 산업이었다. 영국은 금융공학을 이용한 각종 파생상품의 창출과 자본 유동화를 통한 고수익 금융상품 개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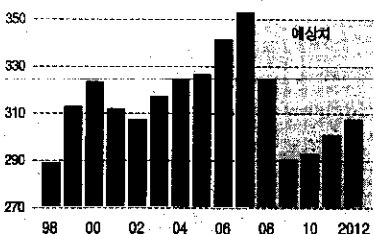
영국 국가통계청에 따르면 영국 금융 섹터는 1996년에서 2006년까지 10년 동안 무려 76.4%가량 팽창하며 전체 서비스 산업의 성장률(43.5%)을 압도하는 성장세를 보였다. 영국은행가협회(BBA)에 따르면 영국의 금융업은 국내총생산(GDP)의 9.6%를 점유할 만큼 자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다.

(FT)는 최근 런던 금융가 종사 인력이 지난해 35만3,000명을 정점으로 내년에는 29만1,000명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주식거래, 투자자문 등 런던 금융가의 주력 부문에서 급격한 쇠락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기관 신뢰도는 최근 -60%까지 추락했고 2006~2007년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보너스도 90억 파운드에서 30억 파운드로 3분의1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적 변화 역시 영국 금융업의 위기 국면을 가중시키고 있다. 위기국면을 통과하며 갈수록 위험회피 경향이 높고 있어 초대형 은행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영국 금융가는 HSBC, 국립스코틀랜드은행 등 대형 은행도 보유하고 있지만 투자 자문 위주의 고급 부티크 형태 등보다 소규모 형태의 금융기관들이 많다.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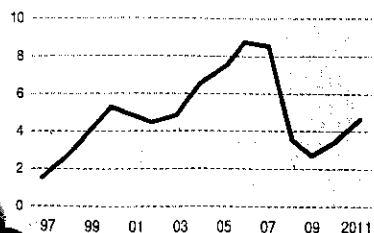
더 시티 고용현황

(단위:천명)



더 시티 보너스 지급 현황

(단위:십억 파운드)



출처:영국산업연합회(CBI) 등

세운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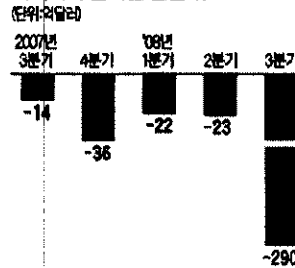
美양대 모기지사도 '밑 빠진 독' 되나

3분기도 손실 '눈덩이' - 추가 공적자금 불가피할듯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등 미국 양대 모기지(주택담보대출)회사가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또다시 공적자금을 수혈받아야 할 처지에 몰렸다. 주택시장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부실 자산 또한 눈덩이처럼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들 두 회사가 미 금융위기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경우 금융사 부실 자산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6일 미 재무부 등에 따르면 프레디맥은 지난 3분기 253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 정부에 138억달러의 긴급 자금 수혈을 요청했다. 주택시장 침체로 모기지 자산 부실이 커지면서 294억달러의 자산상각을 했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대규모 자산상각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정부에 자금 지원을

패니메이 분기별 손실 규모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이달 말까지 자금을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패니메이도 3분기 손실이 290억달러에 달하는 등 적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연말까지 재무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두 회사에 각각 1000억달러를 투입, 선순위 우선주를 매입하는 한편 모기지 관련 증권도 사들였다.

전문가들은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압류 증가로 양사가 갖고 있는 모기지 부실화가 급속

히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정보업체인 퍼스트아메리카코어로직에 따르면 모기지 원금이 현 주택 가치를 웃돌아 잠재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출은 무려 750만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기지를 이용한 다섯 가구 중 한 가구꼴이다. 양사가 12조달러 규모인 모기지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잠재 부실 규모는 2000억달러를 훨씬 웃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이처럼 정부가 추가로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됨에 따라 두 회사의 처리 문제를 두고 적지 않은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벤버넌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 양사의 사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

금융위기로 바뀌는 지구촌 이데올로기 지형도

독일 미르스 '자본론' 판매 급증, 최근 몇 달 사이 300% 증가

영국 캔터베리 성공회 대주교 "자본 방종 경고한 마르크스 비판 옳았다" 지지

일본 공산당원 수 최근 1년 새 1만2000명 증가, 특히 9월 금융위기 이후 급증. 노동자들의 힘겨운 삶 다룬 프롤레타리아 문학도 인기

중국 마카오 정부 사회주의 이념 강화 노선 '국가보호안전법' 채택 추진, 홍콩도 유사 법률 추진 중

ILIBERAL, EL ROBAR!

스페인에서 15일 '자유주의는 도둑질이다'는 파켓을 든 시위대가 G20 금융 정상회담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오스트리아 9월 총선에서 이민 억제, 이슬람 반대 내세운 2개 극우파 정당 약 30% 득표

독일 극단적 신나치주의 정당 NPD 득세

벨기에·네덜란드·스위스 극우 민족주의 정당 약진

아말리아 9월 중순 밀라노서 아프리카 청년 쇠파이프 맞아 사망하는 등 인종 범죄 속출

미국 신나치주의 단체인 NSM과 백인우월주의 단체를 세력 강화

세계 금융위기가 잠자던 극좌·극우 이데올로기 깨운다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로 인해 지구촌의 이데올로기 지형도가 변화하는 조짐이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물결이 지금의 위기를 몰고 왔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소련 붕괴로 한물간 것으로 치부되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선 위기의 회색양을 특정 인종이나 집단에서 찾으려는 극우파 정당이나 단체들이 득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도 성향의 이데올로기가 서서히 힘을 잃고, 극단주의가 맹위를 떨치던 1930년대 대공황기의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힘 얻는 좌파**-일본에선 공산당원이 크게 늘고 있다. 최근 1년 사이 1만2000명이 새로 공산당에 가입했다. 주로 20~30대 청년들로, 취업난과 실업 등으로 경제위기를 피부로 실감하

는 사람들이다. 일본 공산당 관계자는 "특히 9월 금융위기 이후 가입자 수가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공산당은 다음 중의원 선거에서 약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마르크스주의의 대표작인 고대아시 다카지(林多喜二)의 소설 『대공산(大工難)』은 올해 초 재출간된 뒤 벌써 50만 부가 팔렸다. 예년에 비해 100배 정도 늘어난 것이다. 가혹한 노동을 강요받는 선상 노동자들이 집단 불거지는 과정을 그린 이 소설은 세계 대공황이 일어났던 1929년 처음 발표했다. 소설 속에서 배 안에 갇혀 강제 노동과 고중한 작업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모습이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의 일본인들에게 공감

독일에선 마르크스가 되살아나고 있다. 독

일본 공산당원 늘고 중국 '사회주의 강화' 움직임 오스트리아 총선에선 극우정당 득표율 30% 육박 독일 신나치 세력 확장-이탈리아, 잇단 인종범죄

일 언론은 최근 몇 달 사이 『자본론』 판매 부수가 3배나 늘었다고 전했다. 카를 마르크스(1818-83)가 1867년 저술한 『자본론』은 사회주의 소련이 붕괴한 90년대 이후 일반 독자들의 손에서 떨어진 책이다. 『자본론』을 출간한 출판사 사장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몰고 온 정부의 정책 방향에 회의론을 느낀 젊은 층이 마르크스에게서 해답을 찾기 위해 『자본론』을 사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사회주의 통치 이념 단속에 나섰다.

마카오 정부가 지난달 22일 공개한 '국가보호 안전법' 초안이 실례다. 중국 정부 기준을 거쳐 이르면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이 법안은 명목상으로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법이다. 그러나 이면에는 서방식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개방의 통치 이념을 거부하고 중국식 사회주의 이념을 강화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

◆**극우주의 득세**-극단적 민족주의와 인종주의를 앞세우는 극우파도 세력을 얻어가고

있다. 사회적 위기의 책임을 특정 집단이나 외국인 탓으로 돌리려는 대중심리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9월 말 치러진 오스트리아 총선에서는 극우파 돌풍이 불었다. 2년 전 총선에서 11%를 얻었는데 그쳤던 극우 성향의 자유당이 이번 총선에선 18%를 얻었다. 지난 총선에서 4.1%를 얻었던 또 다른 극우 정당 '오스트리아의 미래를 위한 동맹'도 이번엔 11%의 지지를 얻었다. 극우 정당들은 외국 이민자, 특히 무슬림들이 일자리를 빼앗고 테러나 범죄를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주장하면서 극심한 인종차별선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유권자들의 감성을 파고 들었다. 독일에서도 인종주의와 반유대주의를 표방하는 극단적 신나치주의 정당인 국가민주당(NPD)의 세력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독

일 브란덴부르크-베를린 사회과학 연구소의 군나르 빈클러는 "현재의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 혼란은 항상 극우 정당들이 득세할 수 있는 훌륭한 조건을 제공해 왔다"고 밝혔다.

이탈리아에선 최근 인종주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9월 중순 북부 밀라노 거리에서 아프리카 부르크나파소 태생의 19세 청년이 한 카페 주인에게 도둑으로 몰려 쇠파이프로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며칠 뒤 남부 나폴리 교외에선 아프리카계 이민자 6명이 길거리에 서 총에 맞아 숨졌다. 이후에도 인종 폭력은 계속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신나치주의 단체인 '국가사회주의운동(NSM)'이나 백인 우월주의 단체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뉴욕·홍콩·도쿄·남정호·최형규·김동호 특파원, 서울=유철종 기자 cjiyou@joongang.co.kr



대만·영도 경기부양 '시동'



가구당 42만원 상품권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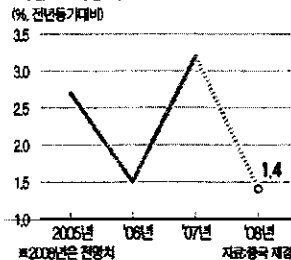
감세·공공지출로 GDP 1% 푼다

총 2조8100억원 규모...소비위축 확산 차단

대만 정부는 연간 소득 120만대만 달러(511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가구당 1만대만달러(42만원) 어치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중국 잡지 차이징 인터넷판이 16일 보도했다. 소비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대만 전체 가구의 88%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지출되는 정부 예산은 660억 대만달러(2조8100억원)로 추정된다. 상품권 제공 시기는 내년 3월 이전으로, 춘절(春節·음력설) 즈음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권은 6개월 또는 1년을 유효기간으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의 이번 조치는 일본이 최근 총 2조엔(29조원) 어치의 상품권을 가구별로 나눠주기로 한 것과 유사한 부양책으로, 올해 소비 증가율이 역대 최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될 만큼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올해

대만 소비증가율



대만의 소비 증가율은 지난해 (3.2%)보다 크게 둔화된 1.4%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 정부는 이와 함께 인프라 건설을 늘리고 감세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2%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는 대만 정부가 당초 예상한 GDP 대비 1.8%를 훨씬 웃도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만 재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합의한 직후 대만과 영국 등이 속속 경기부양책을 마련했다. 대만은 전국의 88%에 해당하는 가구에 상품권을 나눠주기로 했고, 영국은 저소득층을 위한 감세를 실시하기로 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재정자금이 경기부양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리처드 류 국장은 “지금은 경제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자를 크게 걱정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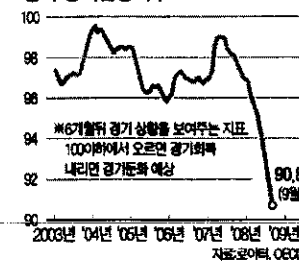
대만은 중국의 측면 지원도 받고 있다. 왕이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 주임은 이날 후난성 상탄에서 열린 ‘제4회 후베이성-대만 경제무역교류협력회’에서 “중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크게 늘리고 있는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대형 건설 공사에 대만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대만 기업에 자금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재무부는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에 세금을 감면해주고, 학교 병원 도로 등의 공공시설 건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했다고 더 타임스가 17일 보도했다. 공공 프로젝트 건설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4일 예비 예산안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이 부양책 규모는 150억 파운드(31조1901억원)로 추정되며, 이는 영국 GDP의 1%에 해당된다.

영국 정부는 이를 위해 2010년과 2011년도 예산을 조기 집행한

150억파운드...적자재정 가이드라인 완화

영국 경기선행지수



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경기부양책은 1929년 대공황 당시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출을 주창한 데서 비롯된 케인스식 부양책에 해당된다고 영국 언론들이 전했다.

앞서 영국 정부는 10년간 지켜온 노동당 정권의 재정정책 원칙(균형재정: 공공부채를 GDP의 40% 이내로 유지)을 폐기, 경기

부양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 영국 정부는 특히 적자재정 운용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이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에 나서는 것은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산업연합회(CBI)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1.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이날 BBC방송이 전했다. CBI는 지난 9월만 해도 내년에 영국 경제가 0.3%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CBI는 당초 영국의 경기침체가 짧고 얕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이제는 길고 깊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영국은 4분기에도 성장률이 -0.8%에 그쳐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경진 기자 kjoh@hankyung.com

골드만삭스는 보너스 반납... AIG는 보상금 잔치

금융위기 외중에 미 재무부의 공적 자금을 받은 두 금융회사가 임직원에게 보너스 지급문제를 놓고 서로 엇갈린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투자은행 업계 1위인 골드만삭스와 보험업계 1위인 AIG 얘기다.

골드만삭스의 로이드 블랭크페인(Blankfein) CEO(최고경영자) 등 고위경영진 7명은 올해 연말 보너스

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7일 보도했다.

지난 1999년 상장 이후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는 골드만삭스 경영진이 올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최근 금융위기 속에 직원 3200명을 해고하는 등 비상경영 상황이기 때문이다.

반면 AIG는 최근 임직원 6200명에 대한 '이연 보상금(deferred com-

pensation)' 5억달러를 내년 1분기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혀 골드만삭스와 반대행보를 보였다. 1인당 평균 8만1000달러(약 1억10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연 보상금이란 임직원들의 급여 중 일부를 절세효과가 뛰어난 미래시점으로 미뤄서 주는 제도로, 주로 보너스성 급여이다.

박용근 기자 ykpark@chosun.com

'종부세 개편안' 갈라진 한나라

폐지 여부 놓고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판소리
서울 낮추자는 지도부에 조선들 집단 반발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위헌 결정을 받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놓고 한나라당 내부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핵심 쟁점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놓을 정도다. 여권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새 종부세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여당 내 갈등의 집점을 찾을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내에서 가장 견해가 갈리는 쟁점은 종부세 폐지 여부다. 정부는 종부세를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에 통합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홍준표 원내대표는 17일 "부자 세금은 깎아주고 서민 세금을 늘려서 보충하려고 한다는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선 의원 일부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이런 뜻을 임태희 정책위의장에게도 전달했다. 앞으로 당에서 판소리가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임태희 의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세제가 너무 복잡해서 알기 쉽게 고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

적으로 통폐합하는 게 바람직한 세정 방향"이라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두 사람은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종부세 감면을 놓고도 서로 다른 입장이다. 몇 년 이상을 '장기'로 볼 것이냐가 쟁점인데, 임 의장은 "3년 보유부터 감면을 시작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정부도 비슷한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홍 원내대표는 "3년이 무슨 장기냐. 최소 8년을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을 높이고는 당 지도부와 조선 의원들 사이에 주로 전선이 형성돼 있다. 당 지도부는 현행(1~3%)보다 크게 낮춘 정부안(0.5~1%)으로 가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성식, 권영진, 김성동, 정태근 등 당내 조선 의원 12명으로 구성된 '민본 21'은 공개적으로 성명을 내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김성식 의원은 "특히 토지부분에 대한 종부세는 절대 낮추면 안 된다"고 했다.

현재 6억원으로 돼 있는 과세기준

종부세 개편 관련 여당 내 혼선	
"부자세금 없앤다는 오해 생길 수 있으므로 유지해야" (홍준표 원내대표)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에 통합, 폐지가 바람직" (임태희 정책위의장)
"최소한 8년은 돼야" (홍준표)	"3년부터 감면 고려 가능" (임태희)
"6억원 현행 유지" (당 지도부)	"정부안대로 9억원으로 올려야" (이종구 의원 등)
"지금(1~3%)보다 낮춰야" (당 지도부)	"현행 유지가 바람직" (조선의원 모임 '민본 21' 등)

에 대해서도 당내 의견이 엇갈린다. 당 지도부는 "당초 정부안대로 9억원으로 올릴 경우, 세대별 합산 위한 결정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기준은 18억원이 된다. 종부세 대상이 급격하게 주는 만큼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6억원 현행 기준을 유지해도 부부합산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굳이 9억원으로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이종구 의원 등은 "정부도 위한 등 여러 가

능성을 따져 본 뒤 기준을 9억원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주 중 종부세 관련 쟁점에 대한 의견을 모아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고위당협회의를 통해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민본 21' 등 일부 조선의원들은 "의원총회에 개편안이 올라오면 조목조목 따지겠다"고 버리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황대진 기자 djhwang@chosun.com

큰소리치더니... 유가급락에 고개숙인 산유국

러시아 주가 폭락·메드베데프 사임설
이란 재정 적자에 물가상승률도 30%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 '자숙모드'

고유가를 받고 큰소리를 치던 산유국들이 요즘 조용하다. 미국과 냉각선을 불사했었던 러시아와 핵개발을 놓고 미국과 군사적 긴장감을 촉발시키던 이란, 남미 좌파 연대를 사실상 좌지우지했던 베네수엘라가 '자숙 모드'에 들어갔다.

예상하지 못했던 유가 폭락에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역오일쇼크'에 휩싸여 버린 상황이다.

30%에 육박하는 초인플레이션에 이어 재정마저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도 이탈하고 있어 경제지표가 날로 악화될 위기다. 이들 3개국은 유가가 최소 배럴당 50달러는 돼야 재정 흑자를 누릴 수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유가가 40달러대로 떨어질 경우 최악의 경제난이 예상된다.

◆미국과 관계 개선 나선 러시아 석유무기화로 미국과 맞섰던 러

시아는 외교 노선을 수정했다. 조기 사임설마저 나오고 있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16일 G20 워싱턴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미국과의 경제관계가 풀리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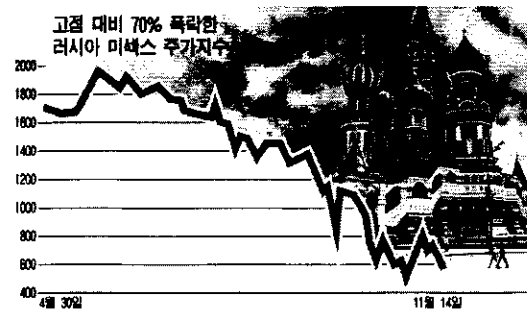
불과 한 달 전 미사일 문제를 놓고 미국과 강경하게 대치하던 모습과는 180도 바뀌었다.

메드베데프의 달라진 목소리는 악화일로에 놓인 러시아 경제 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러시아는 요즘 주식시장과 부동산 가치 동반 폭락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 이탈도 멈추지 않고 있다.

러시아 미세스 주가지수는 지난 5월 중순 1956 선에서 지난 14일 592로 고점 대비 70%가 빠졌다.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의 권력 분점 체제도 정치 라스크로 남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경제 위기에 놓인 3개 산유국

국 가	내년 예산 편성 기준 유가	최근 경제 위기 징후	영 향
러시아	70달러	루블화·주식 폭락, 외국인 투자 이탈	미국과 갈등 해소, 메드베데프 대통령 임지 약화
이 란	70달러	초인플레이션(30%), 유엔 경제재정도 소비 위축	초강경 핵개발 전략 수정, 김연경 내년 6월 대선 패배 가능성
베 네 수엘라	60달러	초인플레이션(36%), 투자자 국제 투매	반미 좌파 연대 임지 약화, 차베스 정권 약화

※자료=뉴욕타임스

◆이란 내 핵 강경파 임지 줄어
대표적인 반미국가인 이란 역시 유가 하락에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유엔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 경제는 과도하게 원유 수출에 의존하는 구조다. 이란 정부 지출의 80%는 원유 수출로 충당되고 있다. 유가 하락 영향이 다른 산유

국보다 더 큰 셈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8월 "유가가 75달러 아래로 하락하면 이란은 지속 불가능한 재정적자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란은 하루 원유 400만배럴을 생산하고 세계 원유 매장량의 12%인 1370억배럴을 보유하고 있다.

마무드 아바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의 정치적 임지 약화도 문제다. 모스타파 엘 라비드 카이로 소재 지역전략연구동부센터(ECRSS)는 "유가 하락으로 이란의 중동 내 존재감과 역할이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6월 대선에서 아바디네자드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서민 경제에 중요한 인플레이션 상승률도 무려 30%에 달하고 있다. 유가 하락이 지속될 경우 이란의 초강경 핵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이란 내 강경파보다는 대화를 추구하는 실용파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경제 마비 직전인 베네수엘라

남미 좌파 연대의 선봉에 나선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도 요즘 풀이 죽어 있다. 틈만 나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을 공격했지만 지금은 베네수엘라 경제 살리기가 더 급한 일이다.

유가 하락으로 내년 정부 지출 계획은 전면 손질이 불가피하다.

적어도 유가가 배럴당 60달러는 돼야 하지만 바스키 원유가는 지난 주 13% 급락해 46.35달러를 기록했다. 9월 이후 반 토막이 났다.

이항희 기자

내년 유가 30달러 전망 '술술'

감산·채굴비용 감안한 50달러대 바닥론도

배럴당 50달러대로 떨어진 국제유가(WTI 기준) 향방을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바닥에 근접했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배럴당 30달러까지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등장하고 있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17일 시간외거래에서 배럴당 1.44달러 더 하락한 55.60달러에 거래됐다. G20 정상회담에도 세계 경기 침체 속도를 늦추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유가 하락을 이끌었다. 일본의 3분기 마이너스 성장과 중국의 원유 수요 급감 소식도 석유시장에 찬풍을 끼얹었다.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배럴당 49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다.

플룸버그뉴스는 최근 "유가 30달러대에 배럴당 1달러가 부쩍 늘었다"고 보도했다. 실제 내년 2월 원유를 30달러에 팔겠다는 원유 옵션 계약이 1407건을 기록됐다. 시드니에 있는 토비 하삼 상품 시장 애널리스트는 "유가 하락을 막을 만한 재료가 거의 없다"고 진단했다.

도이체방크 역시 유가가 2010년 주 13% 급락해 46.35달러를 기록했다고 전망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추가



감산 가능성도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OPEC는 이달 29일 아집트 카이로에서 긴급 회담을 열어 추가 감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차익 쫓을 OPEC 의장은 이달 감산 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고 대신 12월 정례회에서 추가 감산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란은 지난 10월 24일 OPEC가 결정한 하루 150만배럴 감산에 이어 다시 최소 하루 100만배럴을 추가 감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50달러대를 바닥으로 보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

배럴당 65-85달러라는 석유회사 채굴 비용을 생각했을 때 현실적으로 더 이상 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항희 기자

신경무

朝鮮漫評

kmshin@chosun.com



김용민의 그림마당
yongmin@kyunghyang.com



한겨레
그림핀

장봉균
jang@hani.co.kr



서울만평

백무현 bnh@seoul.co.kr

다시 찾아온 겨울...
하지만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부가 있어 훈훈합니다



‘세계 경제축’ 美·日·유로존 동시에 첫 마이너스 성장

1999년 유로화 출범 이후 초유의 사태

〈지난 16년간·3개 정권〉

농업에 130조 퍼붓고도 빚만 늘었다

현금 나눠주기 치중… 농가 부채 4배 늘어
“농업 포퓰리즘 때문… 경쟁력 확보못해”

안방 침대 밑 2100만원어치 상품권…

공기업 비리 82명 구속

사장 아들이 아버지 팔아 4500만원 받아

건설사 7곳 자금지원 제외 검토

채권은행단 상위 100곳 평가서 C등급 이하… 30위권내 2곳 포함

오늘 대주단 협약 설명회

동아일보-구글 ‘31개 국가-국민 대표 키워드’ 인터넷 조사

“한국하면 삼성 LG 현대 떠올라
한국인은 ‘급하고 일중독’ 이미지”

수천억개 웹페이지 자동 검색